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10. 9. 29

기 획 재 정 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작년에 보고서를 작성했던 시점에 비해서는 대체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간 부진했던 고용·소득도 나아지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등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달리,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금융·외환부문의 안정 등으로 위기 와중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재정불안의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고용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가계·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기업구조조정 문제 등 잠재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성장과 고용기반 약화,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 인구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거나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경제 안팎에 잠재해 있는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고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경제 내부의 취약성은 제도 뿐 아니라 관행과 의식 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조개혁은 경제여건이 좋고 고통이 덜할 때 실기(失機)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경제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 서

[요 약]

Ⅰ. 최근 경제상황 및 정책대응 평가 ····· 1
1. 세계경제 상황 ····· 1
2. 국내경제 상황 ····· 8
3. 정책대응 평가 ····· 24

Ⅱ. 거시경제여건 전망 ····· 27
1. 대외경제 여건 ····· 27
2. 국내경제 여건 ····· 36
3. 평가 및 전망 ····· 43

Ⅲ. 거시경제의 단기 위험요인 ····· 44
1. 거시경제 위험요인 개관 ····· 44
2. 대외 부문 ····· 47
3. 금융 부문 ····· 54
4. 부동산 부문 ····· 67
5. 노동 부문 ····· 72
6. 물가 및 국제원자재 부문 ····· 78

Ⅳ. 거시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 ····· 84
1. 성장 및 고용창출 기반 ····· 84
2. 재정건전성 ····· 88
3. 부문간 격차 ····· 97
4. 인구구조 변화 ····· 103
5. 기후변화와 환경 ····· 106

Ⅴ. 향후 정책대응 ····· 111
1. 단기 대응과제 ····· 111
2. 구조적 대응과제 ····· 112

〔 참고 목차 〕

참고 Ⅰ-1 : 주요국 정책동향 ····· 3
참고 Ⅰ-2 : 유럽 재정위기 동향 ····· 6
참고 Ⅰ-3 : 최근 고용회복의 특징 ····· 11
참고 Ⅰ-4 :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이 높은 원인 ····· 22
참고 Ⅰ-5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발표 이후 시장 동향 ····· 23
참고 Ⅰ-6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재정기조 평가 ····· 26
참고 Ⅱ-1 : 미국 경제의 재침체(Double Dip) 가능성 ····· 28
참고 Ⅱ-2 : 중국경제 전망 ····· 30
참고 Ⅱ-3 : 글로벌 재정긴축의 영향 ····· 31
참고 Ⅱ-4 :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 33
참고 Ⅱ-5 : 유로지역 은행여건 ····· 34
참고 Ⅱ-6 : 세계 석유수급 현황 및 전망 ····· 35
참고 Ⅲ-1 : 최근 조기경보시스템 운용현황 ····· 46
참고 Ⅲ-2 : 최근 자본유출입 동향 및 특징 ····· 50
참고 Ⅲ-3 : 외채건전성 수준에 대한 평가 ····· 52
참고 Ⅲ-4 :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동향 및 평가 ····· 53
참고 Ⅲ-5 :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현황 ····· 57
참고 Ⅲ-6 : 금융규제 개편 국제논의 동향 ····· 58
참고 Ⅲ-7 : 기업부채비율: 개별기업 비율은 낮고 국가전체 비율은 높은 이유 ·· 64
참고 Ⅲ-8 : 주택가격 수준 평가 ····· 70
참고 Ⅲ-9 : 미분양 주택 현황 ····· 71
참고 Ⅲ-10 :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관계 ····· 73
참고 Ⅲ-11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 고용감소 ····· 75
참고 Ⅲ-12 :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원인 ····· 80
참고 Ⅲ-13 : 희토류 가격 동향 및 전망 ····· 83
참고 Ⅳ-1 :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86
참고 Ⅳ-2 : 의료비지출 적정화를 위한 OECD 정책권고 ····· 91
참고 Ⅳ-3 : 통일 이후 독일의 성장률 변화 ····· 94
참고 Ⅳ-4 :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 102
참고 Ⅳ-5 : 백두산 분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110

[표 목차]

<표 Ⅰ-1>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 9
<표 Ⅰ-2> 주요 선진국 취업자증가율 및 고용률 변화 비교 ····· 10
<표 Ⅰ-3> 가계소득 증가율 ····· 12
<표 Ⅰ-4>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 14
<표 Ⅰ-5> 상장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 17
<표 Ⅰ-6> 제2금융권 경영실적 ····· 20
<표 Ⅱ-1> 세계경제 성장 전망 ····· 27
<표 Ⅱ-2> 해외 주요기관 유가전망 ····· 32
<표 Ⅱ-3> 신흥시장 자금유입 전망 ····· 42
<표 Ⅲ-1> 대외부문 주요지표 동향 ····· 47
<표 Ⅲ-2> 금융부문 리스크 관련 주요 지표 ····· 54
<표 Ⅲ-3>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 55
<표 Ⅲ-4> 저축은행 PF대출(유동화대출 포함) 실태조사 결과 비교 ····· 60
<표 Ⅲ-5> 상장기업 중소기업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 65
<표 Ⅲ-6>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 현황 ····· 66
<표 Ⅲ-7> OECD 고용보호수준 평가 ····· 72
<표 Ⅲ-8> 물가 관련 주요지표 동향 ····· 78
<표 Ⅳ-1> 국별 서비스업 고용비중 ····· 87
<표 Ⅳ-2> 통일비용 추정 ····· 93
<표 Ⅳ-3> 비정규직·자영업자 비중 ····· 98
<표 Ⅳ-4> 정규직-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 ···· 99
<표 Ⅳ-5>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 101
<표 Ⅳ-6> 35~54세 인구,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 105
<표 Ⅳ-7> 한반도와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 109

〔 그림 목차 〕

<그림 Ⅰ-1> 주요국 경제성장률 ····· 1
<그림 Ⅰ-2>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규모 ····· 1
<그림 Ⅰ-3> 세계 교역량 추이 ····· 1
<그림 Ⅰ-4> 지역별 무역 증가율 ····· 1
<그림 Ⅰ-5> 아시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 2
<그림 Ⅰ-6> 아시아 주요국 수출증가율 ····· 2
<그림 Ⅰ-7> 주가지수 추이 ····· 4
<그림 Ⅰ-8> 환율 추이 ····· 4
<그림 Ⅰ-9> VIX 지수 ····· 5
<그림 Ⅰ-10> Libor-OIS 및 TED 스프레드 ····· 5
<그림 Ⅰ-11> EMBI+ ····· 5
<그림 Ⅰ-12> 한국물 CDS 프리미엄 및 외평채 가산금리 ····· 5
<그림 Ⅰ-13> 국제유가 추이 ····· 7
<그림 Ⅰ-14> 국제원자재가격지수 ····· 7
<그림 Ⅰ-15> 주요 비철금속 가격추이 ····· 7
<그림 Ⅰ-16> 주요 곡물가격 추이 ····· 7
<그림 Ⅰ-17> 산업별 국내총생산 ····· 8
<그림 Ⅰ-18> 지출별 국내총생산 ····· 8
<그림 Ⅰ-19> 수출·수입 추이 ····· 9
<그림 Ⅰ-20> 경상수지 추이 ····· 9
<그림 Ⅰ-21> 취업자 증감 및 취업자 추이 ····· 10
<그림 Ⅰ-22> 고용률·실업률 추이 ····· 10
<그림 Ⅰ-23> 계절조정 취업자 추이 ····· 10
<그림 Ⅰ-24> 정부·민간 부문 성장기여도 ····· 12
<그림 Ⅰ-25> 취업자 증감 ····· 12
<그림 Ⅰ-26> 소비자물가 동향 ····· 13
<그림 Ⅰ-27> 연도별 농산물 물가지수 추이 ····· 13

<그림 Ⅰ-28>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 ····· 14
<그림 Ⅰ-29> 월별 아파트 거래량 추이 ····· 14
<그림 Ⅰ-30> 주요국 주가 추이 ····· 15
<그림 Ⅰ-31> 외국인 주식투자 및 보유비중 ····· 15
<그림 Ⅰ-32> 주요 금리 추이 ····· 15
<그림 Ⅰ-33>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 15
<그림 Ⅰ-34> 중소기업 대출 ····· 16
<그림 Ⅰ-35> 대기업 대출 ····· 16
<그림 Ⅰ-36> 가계대출 증가 ····· 16
<그림 Ⅰ-37> 부동산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 16
<그림 Ⅰ-38> 상장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 ····· 17
<그림 Ⅰ-39> 제조업 이자보상배율 추이 ····· 17
<그림 Ⅰ-40> 제조업 자금사정 BSI ····· 18
<그림 Ⅰ-41> 부도업체수 및 어음부도율 ····· 18
<그림 Ⅰ-42> 중소기업 자금사정 Map ····· 18
<그림 Ⅰ-43> 중소기업 보증사고 잔액 및 대출연체율 ····· 18
<그림 Ⅰ-44> 가계소득 추이 ····· 19
<그림 Ⅰ-45>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 19
<그림 Ⅰ-46> 소득분위별 재무건전성 ····· 19
<그림 Ⅰ-47> 소득분위별 상환능력 ····· 19
<그림 Ⅰ-48> 은행권 수익 및 부실채권 비율 ····· 20
<그림 Ⅰ-49> 은행권 BIS 비율 ····· 20
<그림 Ⅰ-50> 환율 동향 ····· 21
<그림 Ⅰ-51> 외환수급 동향 ····· 21
<그림 Ⅰ-52> 자본수지상 해외차입 동향 ····· 21
<그림 Ⅰ-53> 외환스왑시장 동향 ····· 21
<그림 Ⅱ-1> 유럽 주요은행 CDS프리미엄 ····· 32
<그림 Ⅱ-2> 세계 곡물 생산・소비・재고율 ····· 32
<그림 Ⅱ-3> 실질구매력과 민간소비 ····· 36

<그림 Ⅱ-4> 소비자심리지수 ····· 36
<그림 Ⅱ-5> 설비투자 부문별 추이 ····· 37
<그림 Ⅱ-6> 환율 및 설비투자 ····· 37
<그림 Ⅱ-7> 기계류수입 및 기계수주 ····· 37
<그림 Ⅱ-8> 설비투자 조정압력 및 가동률 ····· 37
<그림 Ⅱ-9> 건설기업경기전망과 주택건설 ····· 38
<그림 Ⅱ-10> GDP와 비주거용 건설투자 ····· 38
<그림 Ⅱ-11> 토목 건설과 수주 동향 ····· 38
<그림 Ⅱ-12> SOC 예산 추이 ····· 38
<그림 Ⅱ-13> 근원물가 및 기대인플레 동향 ····· 39
<그림 Ⅱ-14>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동향 ····· 39
<그림 Ⅱ-15> 제조업 취업자 추이 ····· 40
<그림 Ⅱ-16> 기업 인력사정 전망 BSI ····· 40
<그림 Ⅱ-17> 산업별 취업자 증감 ····· 40
<그림 Ⅱ-18> 민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 40
<그림 Ⅱ-19>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나라 수출 ····· 41
<그림 Ⅱ-20> 세계 수입물량과 우리나라 수출 추이 ····· 41
<그림 Ⅱ-21> 경제성장률과 수입증가율 ····· 41
<그림 Ⅱ-22> 서비스수지 추이 ····· 41
<그림 Ⅱ-23> 재고 수준 ····· 43
<그림 Ⅱ-24> 경기지수 추이 ····· 43
<그림 Ⅲ-1> 수출·수입 단가 및 교역조건 ····· 48
<그림 Ⅲ-2> 수출과 사업서비스·특허권 사용료 지급 추이 ····· 48
<그림 Ⅲ-3> 자본 유출입 현황 ····· 49
<그림 Ⅲ-4> 단기외채 추이 ····· 51
<그림 Ⅲ-5> 조선수주 추이 ····· 51
<그림 Ⅲ-6> 명목GDP 대비 M2 비율 ····· 55
<그림 Ⅲ-7> M1증감 및 M1/M2비율 ····· 55
<그림 Ⅲ-8> 신규부실 및 부실정리 규모 ····· 56
<그림 Ⅲ-9>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 56

<그림 Ⅲ-10> 예대율 및 시장성 수신 비중 ····· 56
<그림 Ⅲ-11>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 56
<그림 Ⅲ-12> 저축은행 수익성지표 추이 ····· 59
<그림 Ⅲ-13>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 추이 ····· 59
<그림 Ⅲ-14> 정기예금 금리추이 ····· 59
<그림 Ⅲ-15>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 ····· 59
<그림 Ⅲ-16> 가계신용(가계대출, 판매신용) ····· 61
<그림 Ⅲ-17>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61
<그림 Ⅲ-18> 금융자산·부채의 소득분위별 보유비중 ····· 61
<그림 Ⅲ-19>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 61
<그림 Ⅲ-20> 주요국 LTV비율 ····· 62
<그림 Ⅲ-21> 은행 가계대출 건전성 ····· 62
<그림 Ⅲ-22> GDP 대비 기업부채비중 ····· 63
<그림 Ⅲ-23> 주요국 기업부채비율 추이 ····· 63
<그림 Ⅲ-24> 은행 중소기업 대출 추이 ····· 65
<그림 Ⅲ-25>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 ····· 65
<그림 Ⅲ-26> 경기변동과 주택가격 ····· 67
<그림 Ⅲ-27> 금융위기 전후 주요국 주택가격 비교 ····· 67
<그림 Ⅲ-28>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추이 ····· 68
<그림 Ⅲ-29> 지방 아파트 거래량 추이 ····· 68
<그림 Ⅲ-30>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 68
<그림 Ⅲ-31> 인구대비 주택수 비교 ····· 68
<그림 Ⅲ-32> 월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추이 ····· 69
<그림 Ⅲ-33> 아파트 월별 전세가격 상승률 ····· 69
<그림 Ⅲ-34> 위기이전과 취업자수 비교 ····· 72
<그림 Ⅲ-35> 위기이전과 고용률 비교 ····· 72
<그림 Ⅲ-36>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률 관계 ····· 72
<그림 Ⅲ-37> 청년 고용률·실업률 추이 ····· 74
<그림 Ⅲ-38> 청년 경활참가율·비경활인구 추이 ····· 74
<그림 Ⅲ-39> 자영업자 추이 ····· 76

<그림 Ⅲ-40> 규모별 자영업자 증감 ····· 76
<그림 Ⅲ-41> 산업별 자영업자 증감 ····· 76
<그림 Ⅲ-42> 도소매·음식숙박 취업자 증감 ····· 76
<그림 Ⅲ-43> 노사분규 발생건수 추이 ····· 77
<그림 Ⅲ-44> 근로손실일수 추이 ····· 77
<그림 Ⅲ-45> GDP 갭률 추이 ····· 79
<그림 Ⅲ-46> 유동성 추이 ····· 79
<그림 Ⅲ-47> 임금 및 소비자물가 추이 ····· 79
<그림 Ⅲ-48>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상승률 ····· 79
<그림 Ⅲ-49> 미국 바이오에탄올 생산량 및 증가율 ····· 82
<그림 Ⅲ-50> 전세계 옥수수, 밀 재배면적 ····· 82
<그림 Ⅳ-1> 과거 금융위기 전후 GDP 추세 ····· 84
<그림 Ⅳ-2> 성장률 추이 ····· 85
<그림 Ⅳ-3> 인구 추이 및 전망 ····· 85
<그림 Ⅳ-4>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 87
<그림 Ⅳ-5>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 88
<그림 Ⅳ-6> 주요국의 국가채무 ····· 89
<그림 Ⅳ-7> 주요국의 재정수지 ····· 89
<그림 Ⅳ-8> 복지지출 및 재정수지 전망 ····· 90
<그림 Ⅳ-9>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비중 ····· 90
<그림 Ⅳ-10>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 ····· 92
<그림 Ⅳ-11> 국민연금 적립금・수지 전망 ····· 92
<그림 Ⅳ-12> 지방채 잔액 추이 ····· 95
<그림 Ⅳ-1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95
<그림 Ⅳ-14> 공기업 자산·부채 추이 ····· 96
<그림 Ⅳ-15> 공기업 당기순이익 추이 ····· 96
<그림 Ⅳ-16> 지니계수 추이 ····· 97
<그림 Ⅳ-17> 최근 지니계수 및 소득분배 개선율 ····· 97
<그림 Ⅳ-18>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추이 ····· 97
<그림 Ⅳ-19> 소득계층별 비중변화 ····· 97

<그림 Ⅳ-20> 임금 격차 ····· 98
<그림 Ⅳ-21>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 ····· 99
<그림 Ⅳ-2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 99
<그림 Ⅳ-23>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생산성 ····· 100
<그림 Ⅳ-24> 수출기업-내수기업 노동생산성 ····· 100
<그림 Ⅳ-25> 대기업-중소기업 영업이익률 ····· 100
<그림 Ⅳ-26> 수출기업-내수기업 영업이익률 ····· 100
<그림 Ⅳ-27> 제조업-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 ····· 101
<그림 Ⅳ-28>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 ····· 101
<그림 Ⅳ-29> 합계출산율 추이 ····· 103
<그림 Ⅳ-30> 총인구 및 65세이상 인구비중 ····· 103
<그림 Ⅳ-31> 학령인구 전망 ····· 104
<그림 Ⅳ-32> 고교졸업자수 및 대입정원 ····· 104
<그림 Ⅳ-33> 2010~50년 자산별 비중 변화 ····· 105
<그림 Ⅳ-34> 개인연금 적립금 연도별 추이 ····· 105
<그림 Ⅳ-35> 지구 평균온도 변화 ····· 106
<그림 Ⅳ-36> 전세계 기상이변 발생추이 ····· 106
<그림 Ⅳ-37>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107
<그림 Ⅳ-38> OECD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 107
<그림 Ⅳ-39>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감축 시나리오 ····· 107
<그림 Ⅳ-40> 에너지수입/총수입액 추이 ····· 108
<그림 Ⅳ-41> 에너지 자립도 비교 ····· 108
<그림 Ⅳ-42> 기온 상승에 따른 한반도 기후 변화 ·····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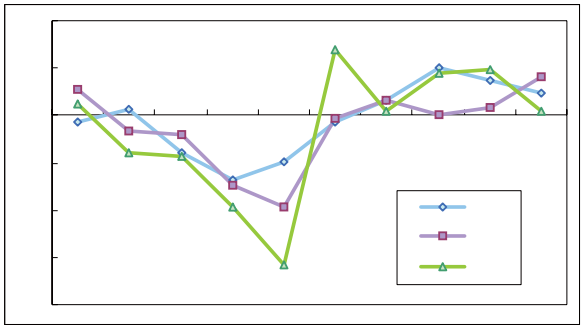
요 약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속에 불확실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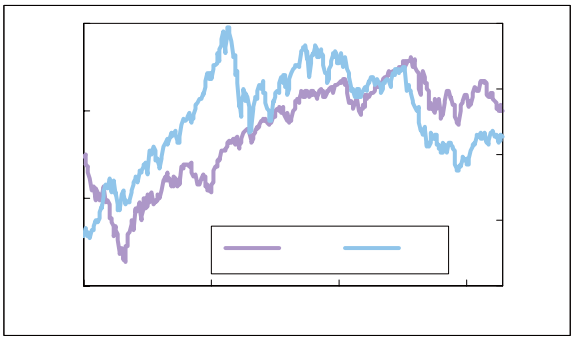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되었던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09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금융시장도 서서히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로존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그동안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중국·일본 경제도 정책효과의 약화 등으로 2010년 2/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은 2009년 1/4분기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요국 경제성장률



자료 :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앞으로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의 경기회복 지원 노력과 교역량 증가세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중국 등의 경제회복세 둔화, 유럽 주요국의 재정긴축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회복속도는 느려질 전망이다. 유럽 재정불안 장기화로 국제금융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원자재 가격은 세계경제 회복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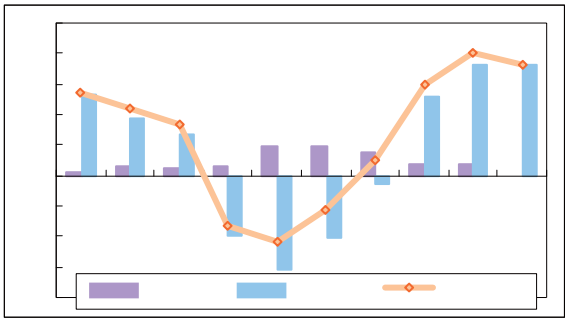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	IMF	OECD[1)]	IMF	OECD[1)]
세계경제 성장률[2)]	-0.6	4.6	4.6	4.3	4.5
미 국	-2.6	3.3	2.6	2.9	3.2
유 로	-4.0	1.0	1.2	1.3	1.8
중 국	9.1	10.5	11.1	9.6	9.7

주 : 1)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BRICs 기준, 2) 구매력평가(PPP) 환율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0.7월), OECD Interim Assessment(2010.9월), OECD Economic Outlook(2010.5월)

국내경제의 회복세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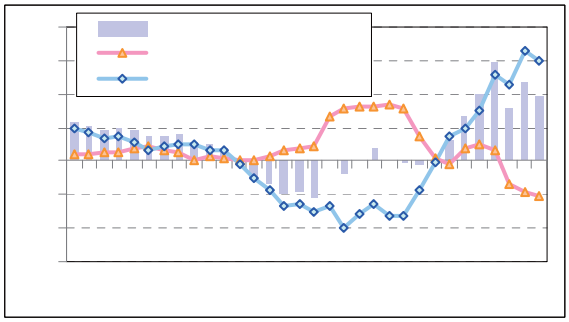
우리경제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09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회복으로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2009년 4/4분기 이후 (+)로 전환되고, 민간부문 취업자수도 2010년 2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민간부문 회복의 자생력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경제회복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2009년 2/4분기 이후 2%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안정을 회복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민간 부문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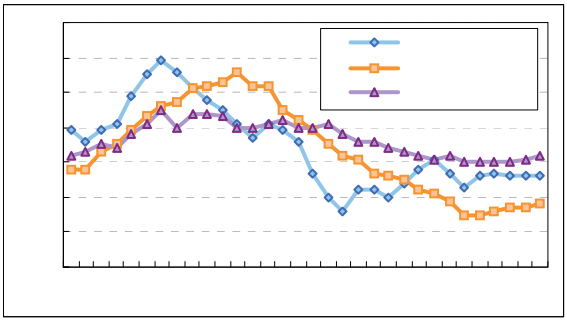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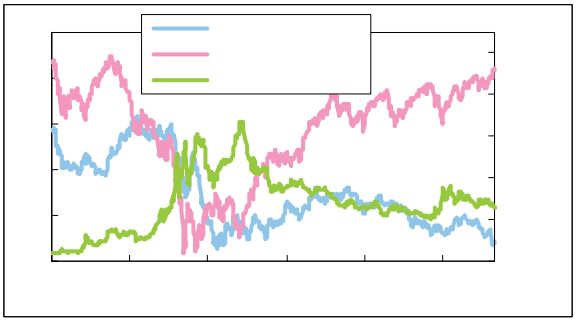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물가상승률 동향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가, 금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상반기의 빠른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정조기집행의 영향 등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겠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득 및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은 경기회복세 지속과 높은 설비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물가는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총수요 증가 등으로 점차 상승압력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나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거시경제의 단기위험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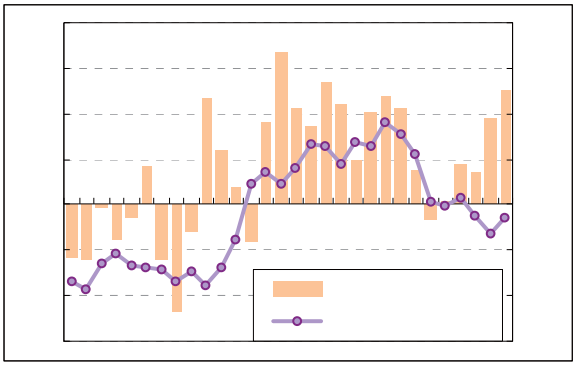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대체로 개선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개선되었으나 부문별로 취약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외부문의 경우 수출호조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외화유동성 및 외채건전성도 개선되었으나 경상수지 흑자 감소 및 단기외채 증가 가능성이 있다. 금융부문은 시장안정 및 재무건전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이 있고 국내적으로도 가계·기업대출 부실 증가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고용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주요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외부문 건전성은 개선되었으나 불안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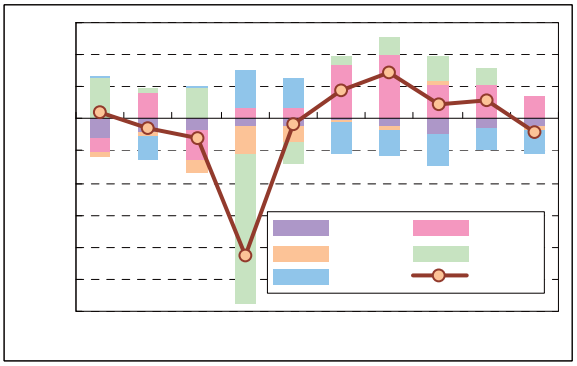
실물부문의 경우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겠지만 세계경제 둔화, 국내경제의 회복세 지속,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우리경제가 글로벌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경우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계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 및 교역조건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본수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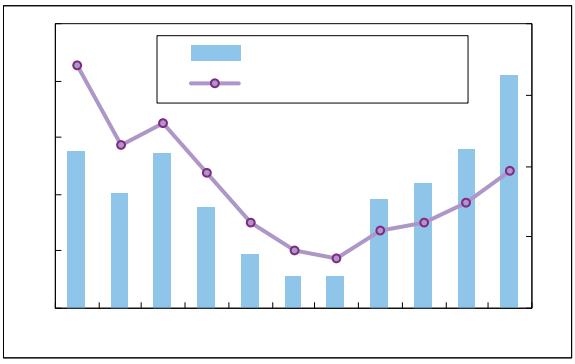
금융·외환 측면에서는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2010년 들어 해외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국내 외환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급격한 자본유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차입 증가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0년 6월 발표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시행 동향 등을 보아가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자본흐름이 급격한 유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부문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부분적 취약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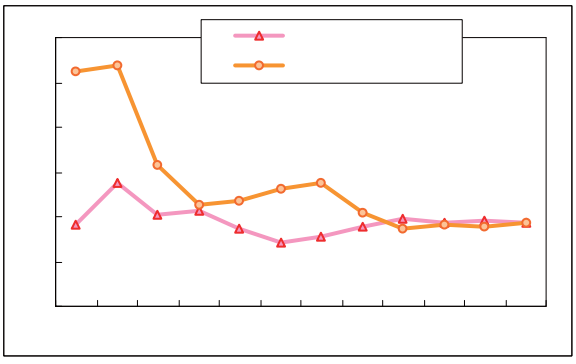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자산건전성의 경우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특히 부동산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질 우려도 있다.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부실화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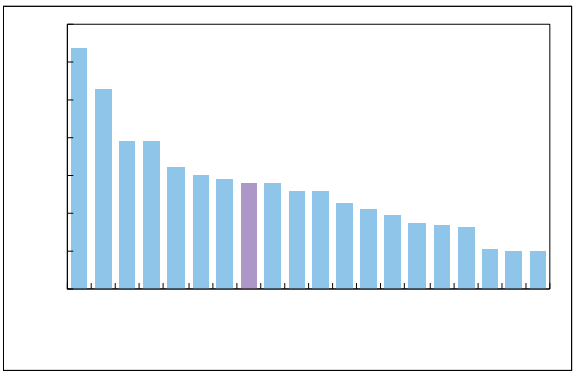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가계부채는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가 지속되었으며, 가처분소득이나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금년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다. 가계부채가 주로 고소득·고자산 계층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부채상환능력이 높은 편이며, 가계대출의 50%

수준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50% 미만에 그치고 있고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저소득·저자산 가계를 중심으로 상환능력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계부채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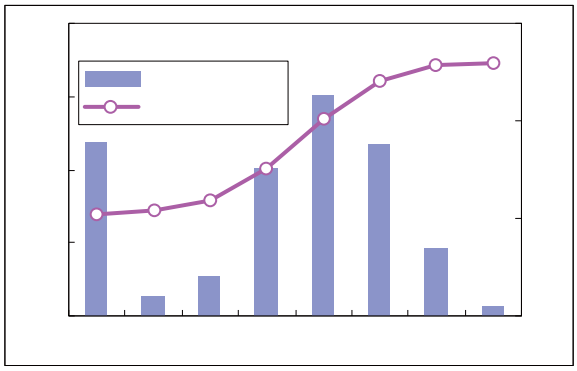
중소기업 대출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글로벌 위기 이전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여파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실적개선 추세,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기업대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리상승 등에 따라 한계기업의 부실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망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애로는 지원하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비교



자료 : OECD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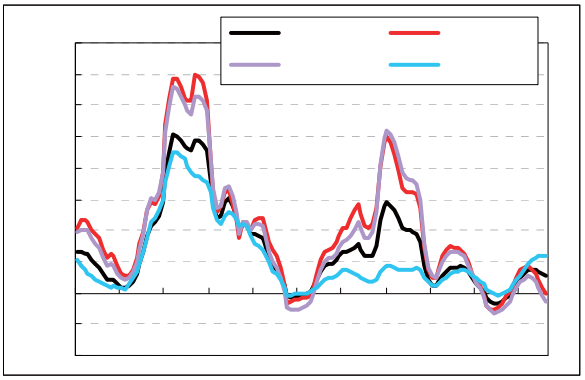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

2010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 수급상 가격하락 기대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분양을 포함한 아파트 공급물량이 풍부한데 주로 기인한 것이지만, 길게 보면 2005년 이후 지속되어 온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최근의 경기회복 및 소득개선에 따른 수요여력 확대와 중장기 수급전망 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의 급락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제약되거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될 경우 위축된 시장의 거래 정상화가 늦어질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 위축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2010년 8월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경제 및 금융 불안 등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중장기 전망에 기초한 공급조절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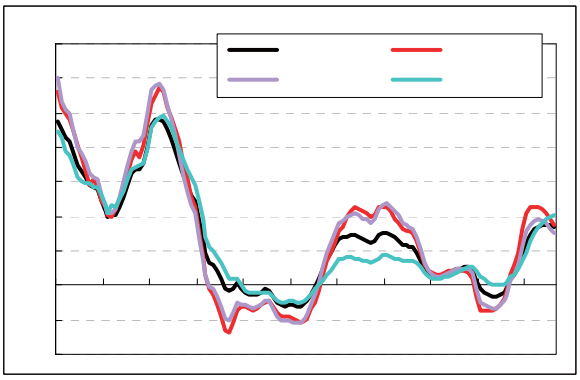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매매가격과는 달리 전세가격은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을 이사철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매시장 위축이 계속될 경우 전세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도심내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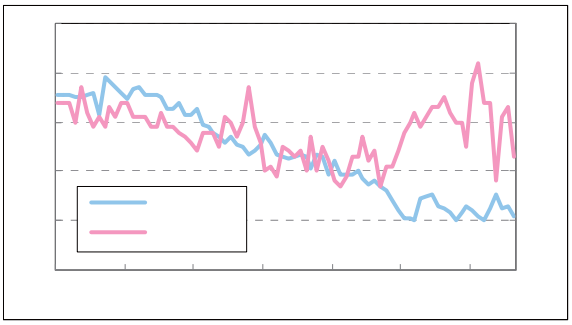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취약계층 고용부진 지속 가능성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2008~2009년간 위기로 인해 창출하지 못한 일자리수가 40만개 이상임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내에 위기 이전의 고용여건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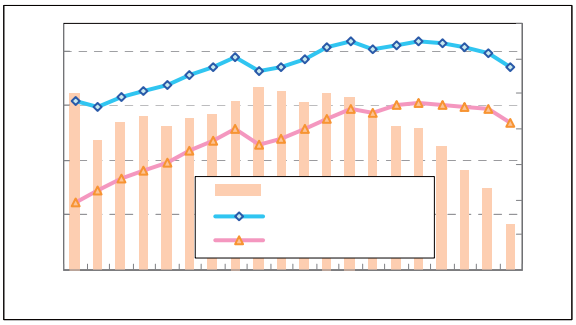
특히, 전반적인 고용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및 자영업 부문의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층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눈높이 상승과 학교교육·산업수요간 괴리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도 고용부진의 원인이므로 청년층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영업자 감소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생력 제고와 더불어 재취업·재기 지원 등을 통해 급격한 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층 고용률·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자영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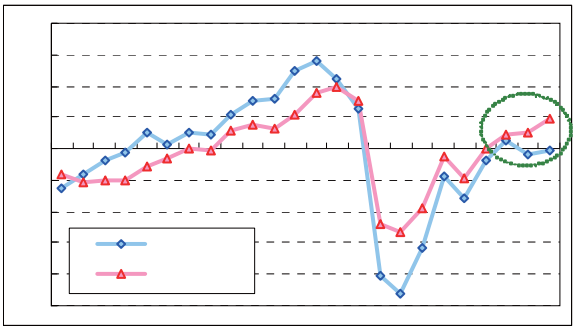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최근 노사관계는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정착여부가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경우 복수노조제도의 2011년 시행과 맞물려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물가압력 소지가 있으나 급등가능성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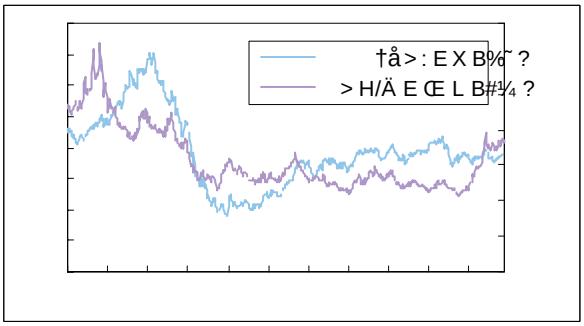
국내외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수요·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증가할 소지가 있으나 급등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빠른 경제 회복으로 내수 압력이 증가하거나 임금이 크게 상승할 경우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대체로 완만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기상악화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와 투기적 수요 등으로 국제곡물 등은 일부 가격상승 소지가 있다. 전반적인 재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제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우리경제의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 면밀한 모니터링과 수급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GDP 갭률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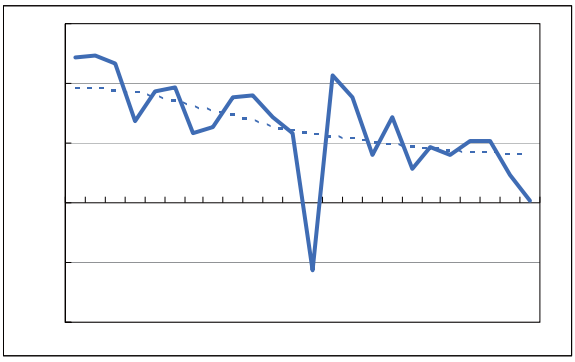
자료 : Korea PDS

[거시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

고용·성장기반 약화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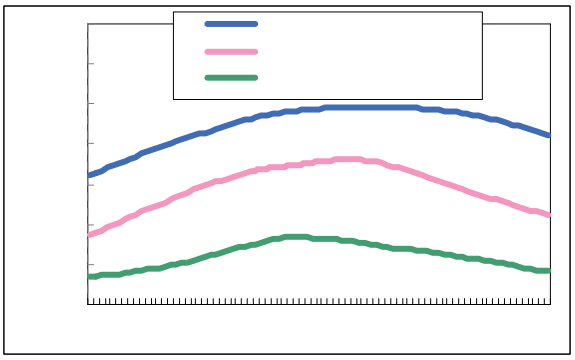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적 실업이 늘어나고 위험기피에 따른 투자 감소로 자본축적이 저해되어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다만,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가 감소했던 기간이 짧았고 고용감소폭도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성장잠재력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가 위기 이전보다 낮아지고 금융규제로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저축감소 등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대외개방 확대,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노동공급 및 투자 위축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산업 육성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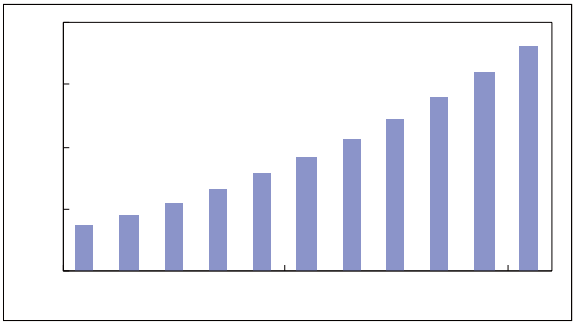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한 경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은 인건비 절감 압력 등으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점차 경쟁우위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야 할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비중이 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과당경쟁 등으로 소득창출이 제약되고,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가 큰 부문은 진입규제 등으로 고용창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노동 및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규제완화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

우리나라 재정은 그간 비교적 건전하게 관리되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 등으로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 정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았고 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와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지표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사례,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전망, 남북관계 변동시의 재정소요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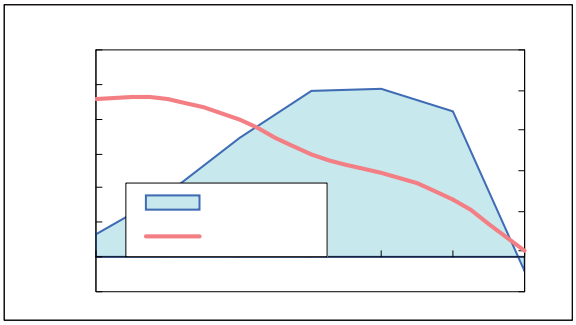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는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큰 부담요인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저하로 세입여건이 어려워지는데 반해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등 복지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구조적 수지불균형 상태를 시정하여야 하며,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도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계획 수립 및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지출전망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적립금・수지 전망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통일비용은 통일방식, 남북한 인구이동, 사회보장수준 등 가정의 차이에 따라 추정의 편차가 크다.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은 1991~2003년간 총 1.3조유로, 매년 GDP의 5%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은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나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통일방식별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통일재원 관련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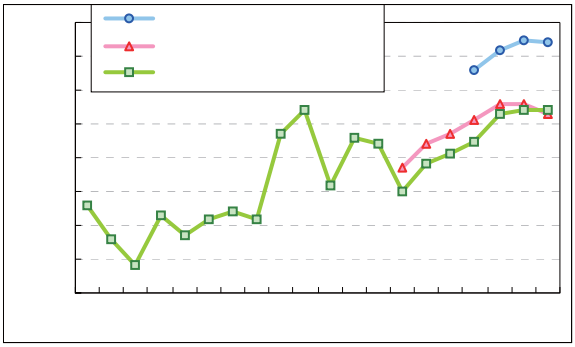
200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 재정에 부담요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기업 부채는 현재로서는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산매각・사업조정 등을 통해 부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부문간 격차 문제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소득격차 확대 추세가 지속되어 왔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소득분배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고 세계화와 기술제고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간의 임금·소득격차 확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 증가 등으로 향후 소득분배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교육과 일을 통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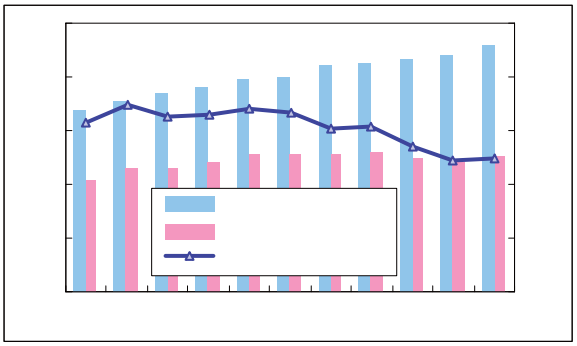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근로복지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제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유인 축소, 비정규직 교육훈련 여건 및 사회안전망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니계수 추이



자료 : 통계청(가처분소득 기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자료 : 통계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기업 및 산업간 생산성·수익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수출기업·제조업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내수기업·서비스업은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기업간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이 중요하다. R&D 확대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중소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9년 현재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기간 내에 출산율 제고가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출산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1.0%에서 2050년에는 38.2%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와 관행·의식이 함께 바뀌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복귀가 용이하도록 출산·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제도와 직장관행을 개선하고 보육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해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및 노후소득 기반 강화, 공적연금 재정안정 등을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여건 악화와 더불어 교육·주택·금융 등의 수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분야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노인 및 1인 가구 증가로 중소형 및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장기·저위험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위(2008년 기준)로서, 정부는 2009년에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4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구조 하에서 규제위주의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가격기구를 토대로 한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경제의 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R&D 강화 등을 통해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반도에서도 기후환경의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농림어업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강수량 및 집중호우 발생빈도 증가 등에 따른 재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피해와 자연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작물재배 등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종합평가 및 정책대응 〕

양호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불확실성 증대

2010년 들어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호조를 바탕으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고용개선과 함께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중국 등의 경기둔화 조짐과 국제곡물 가격 불안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거시경제 정책은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감경기 개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장래 정책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제체질 강화

그간의 경기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가계·기업·금융기관 등의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 가계·기업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논의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건전성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경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체감경기 개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서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물가안정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구조의 성숙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성장과 고용 양 측면에서 발전 여지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 진입규제 완화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인력양성 체계의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친환경 녹색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녹색 R&D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산업지원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FTA 등 대외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사회통합 강화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사업기회,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등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성실한 경쟁탈락자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직업능력과 자활유인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통합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부터 기초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의 이익과 타인을 배려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 및 갈등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미래 위험요인 대비

향후 인구고령화, 남북관계 변화 등에 대비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변화시 재정부담에 대비하여 통일재원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공기업 부채가 중앙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교육·의료·주택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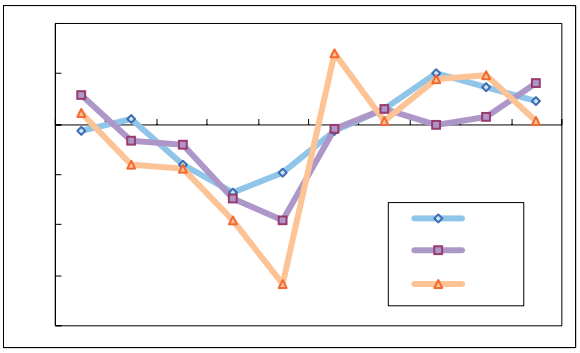
Ⅰ 최근 경제상황 및 정책대응 평가

1. 세계경제 상황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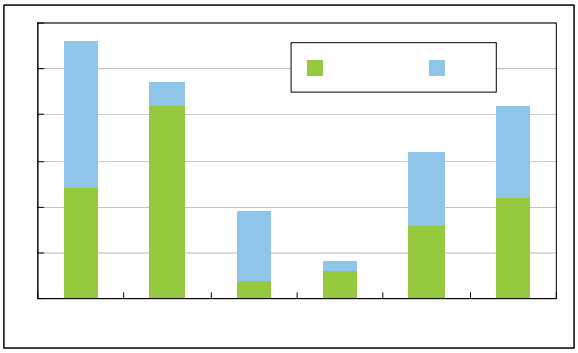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세계교역량 증가,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2009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참고 Ⅰ-1) 2010년 2/4분기 들어서는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미국·중국·일본 등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회복 속도가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그림 Ⅰ-1> 주요국 경제성장률



자료 :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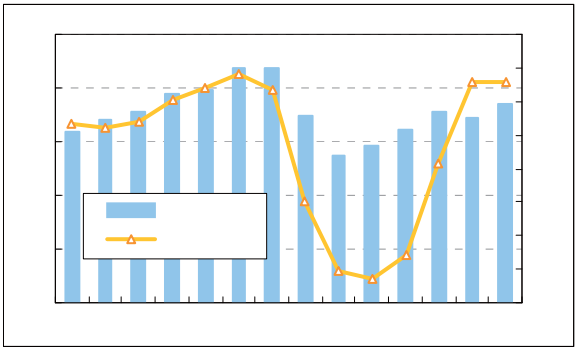
<그림 Ⅰ-2>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규모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09.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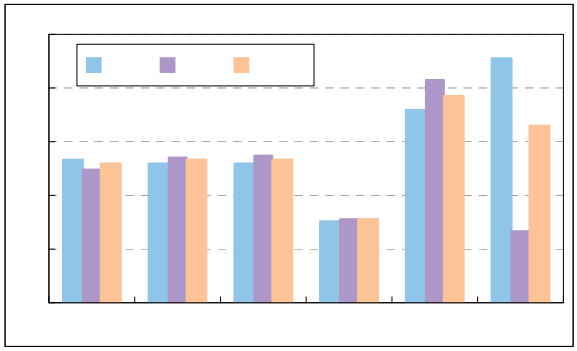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주요국 경제활동 회복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감했던 세계교역량이 2009년초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세계 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아직 교역량이 위기 이전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던 아시아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수출이 크게 증가한 중동지역의 증가세가 높았다.

<그림 Ⅰ-3> 세계교역량 추이



자료 : WTO

<그림 Ⅰ-4> 지역별 무역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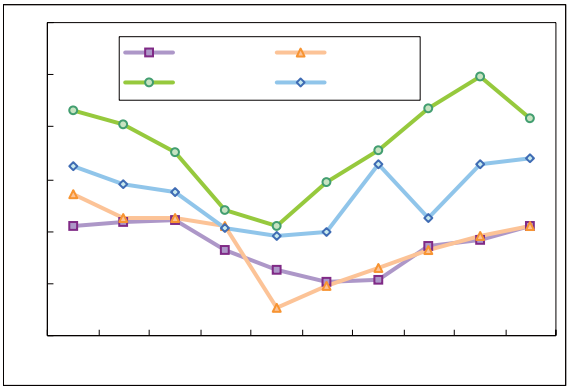
자료 : WTO

주요 선진국의 부진과 신흥국의 호조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회복속도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미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기업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009년 3/4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재고확충이 완만해지면서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일본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09년 4/4분기 및 2010년 1/4분기 중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2/4분기에는 정부의 소비진작책 일부 축소로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회복이 주춤한 모습이다. 유로존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부진한 상황이나, 2010년 2/4분기에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개선에 힘입어 독일 등을 중심으로 4.1%(전기비연율)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다만, 그리스·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들은 낮은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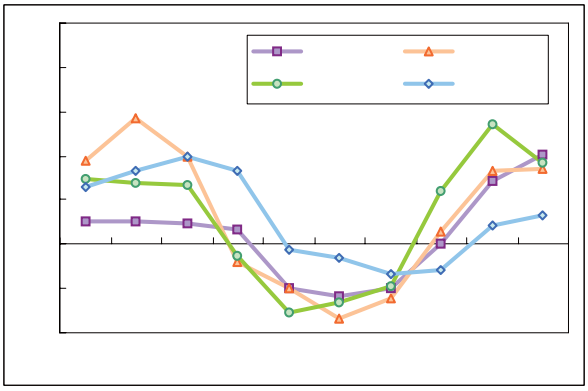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중국은 내수부양책에 힘입은 소비·투자 증가와 세계교역량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로 2009년 4/4분기 이후 두자리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고성장은 경제의 대외개방 정도가 높지 않아 글로벌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점, 높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역내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았던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對中 수출비중이 높은 ASEAN 국가들은 중국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림 Ⅰ-5> 아시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자료 : Bloomberg

<그림 Ⅰ-6> 아시아 주요국 수출증가율



자료 : Bloomberg

참고 Ⅰ >

주요국 정책동향

최근 들어 국가별로 경기회복 속도, 물가상황 등에 따라 거시정책 대응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회복이 아직 견고하지 못한 미국·일본 등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가 빠르고 물가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등은 유동성 관리 등을 통한 경기과열 억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미 연준은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한 비상조치들은 대부분 종료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세 둔화 등에 따라 0~0.25% 수준의 초저금리와 양적 통화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확장 기조를 지속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와 금융개혁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1~12 회계년도 예산안에 PAYGO원칙을 도입하였고,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1] 2010년 7월에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 및 고위험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유럽

남유럽 재정불안 완화를 위해 ECB는 정책금리를 1% 선에서 유지하면서 회원국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2010년 5월부터 IMF와 공동으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안을 시행 중이며 향후 재정위기국 지원을 위해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안정메커니즘을 설립하였다. 각국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스·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들은 향후 3년내에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영국·프랑스·독일 등도 국내입법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화 목표를 제시하고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마련하였다.

일본

일본은행은 0.1%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채매입 등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2009년 12월에 총사업비 24.4조엔(GDP대비 4.8%) 규모의 긴급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등 확장기조를 유지해 왔다. 2010년 2/4분기 성장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8월 일본은행은 정책자금 공급을 20조엔에서 30조엔으로 확대하였고, 일본정부는 9,800억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중국

중국은 내수확충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는 모습이다. 정부 재정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구재 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수부양 정책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통화·금융 측면에서는 과잉유동성 환수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상(1, 2, 5월 각 0.5%p)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

1) PAYGO 원칙은 법정지출의 증가나 세입 감소를 초래하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여타 분야의 세입증가나 법정지출 축소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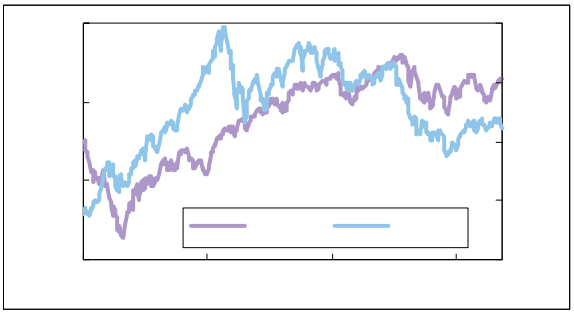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국제금융시장은 각국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와 금융지원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9년 1/4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 11월 두바이월드 채무상환 유예 선언, 2010년 상반기 중 남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들이 등장하면서 주가·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정부·기업·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영향으로 예상치 못했던 부실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시장충격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양상이다.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문제의 경우 주변 고부채국가로의 전염가능성, 유럽 은행권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지속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 주된 영향은 당사국 및 역내에서 나타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 전체나 신흥국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참고 Ⅰ-2)

글로벌 주가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2009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이어왔으나, 2009년말 이후 두바이월드 및 남유럽 사태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5~6월 들어 남유럽 상황의 개선, 미국의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7월 이후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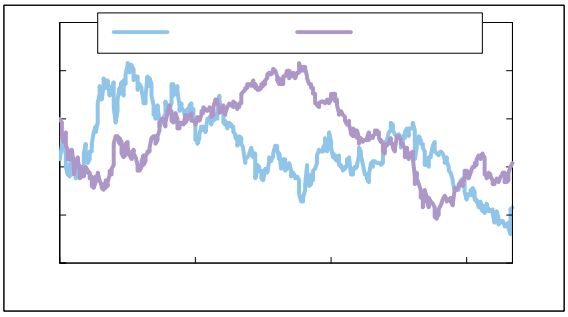
환율은 유럽 재정불안의 영향으로 유로화의 변동이 두드러졌다. 유로화는 2009년 11월 1.5달러대에서 2010년 6월 1.2달러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급락한 이후 유럽 재정위기 완화와 미국의 주택·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1.3달러대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다. 엔화는 일본경제의 상대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일본 투자자의 해외 투자자산 회수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 대비 절상흐름을 이어갔다.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4~5월중 94엔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후 9월초 82엔대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최근 일본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후 9.24일 현재 84엔대로 상승하였으나, 환율정책에 대한 각국의 갈등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Ⅰ-7>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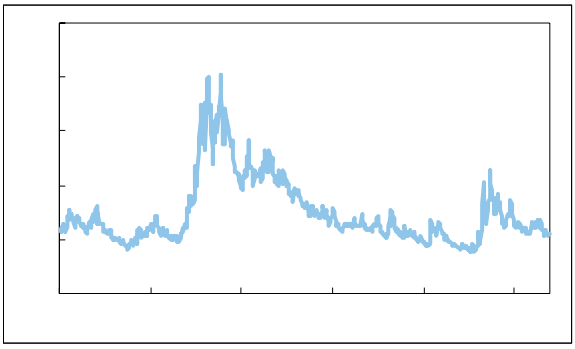
<그림 Ⅰ-8>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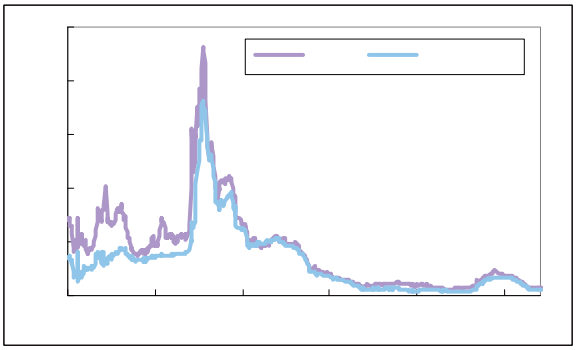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주가변동성 지수(VIX)와 단기자금사정 지표인 Libor-OIS 스프레드 및 TED 스프레드는 2010년 4~6월중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7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발행 성공과 유럽 은행들에 대한 양호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2)3)4)]

<그림 Ⅰ-9> VIX 지수



자료 : Bloomberg

<그림 Ⅰ-10> Libor-OIS 및 TED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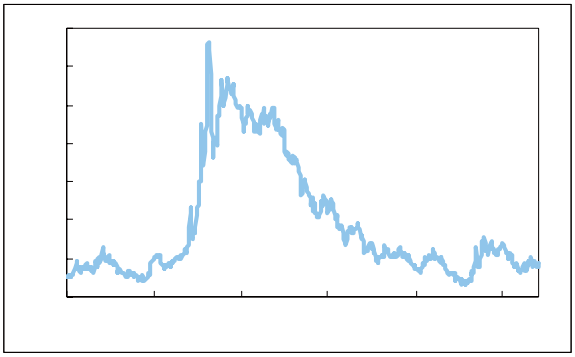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흥국 자금조달 여건은 유럽 재정불안에 따른 위험기피 현상으로 악화된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신흥시장 채권 프리미엄(EMBI+)은 2010년 4월 중순 230bp에서 8월말 현재 303bp로 상승하였다.[5)]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건이 겹치면서 2010년 3월 73bp에서 5월말 172bp까지 상승한 후 9.23일 현재 100bp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Ⅰ-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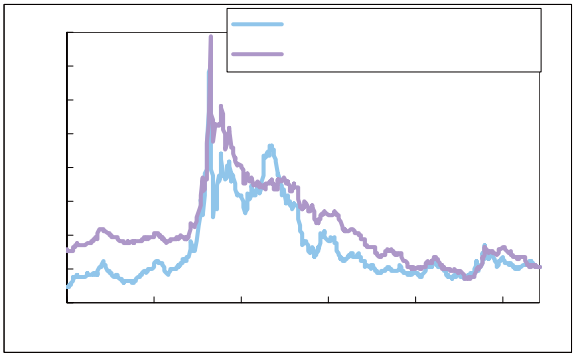
EMBI+



자료 : Bloomberg

<그림 Ⅰ-12>

한국물 CDS 프리미엄 및 외평채 가산금리



자료 : Bloomberg

2) VIX(Volatility Index) : S&P 500지수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향후 30일간 S&P 500 지수의 예상 변동성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시장 변동성·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Libor-OIS 스프레드 : 미달러화 3개월 Libor와 1일물 대출금리(Overnight Index Swap)간의 차이로 신용경색이 심할수록 스프레드가 증가한다.

4) TED(Treasury-EuroDollar) 스프레드 : 미달러화 3개월 Libor와 미 국채 3개월물 수익률간의 차이로서 신용경색이 심할수록 스프레드가 증가한다.

5)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Plus) : JP Morgan이 집계·발표하는 채권지수로 신흥시장 19개국의 90여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Ⅰ >

유럽 재정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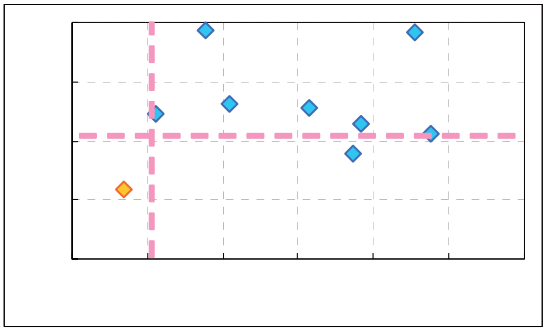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전세계 국가들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었다. 2009년 말부터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문제가 특히 심각한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재정불안이 국가신용문제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스의 경우 2009년 10월 집권한 신정부가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3.7%→12.7%)하면서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2010년 4월 신용평가사들이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국채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재정위기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0년 5월에 만기도래하는 그리스 국채(5.19일 85억유로)의 차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포르투갈·스페인 등 여타 고부채국으로 위기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로화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5월 이후에는 유럽 재정불안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5월초 EU와 IMF가 그리스에 2010~13년간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하고 EU 자체적으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 지원을 위해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설립을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관련국 CDS 프리미엄이 다소 하락하였다. ECB도 미국 FRB와의 통화스왑 재개, 회원국 국채 매입 등 금융시장 불안 완화를 위한 공조 노력을 추진하였다. 한편, 그리스·스페인 등 고부채 국가들도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임금동결, 연금개혁, 세제개편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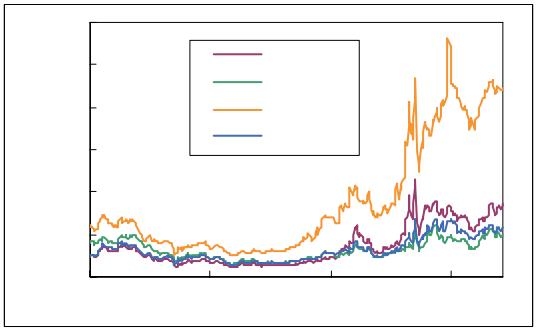
7월중에는 스페인 등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면서 시장불안이 고조되었다가 관련국들이 잇달아 국채발행에 성공하고 EU의 유럽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7.23일)로 국채투자분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불안심리가 완화되기도 했으나, 8월 들어 아일랜드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미국 등 세계경제 둔화우려로 다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남유럽 고부채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현황



자료 : European Council

남유럽 국가 CDS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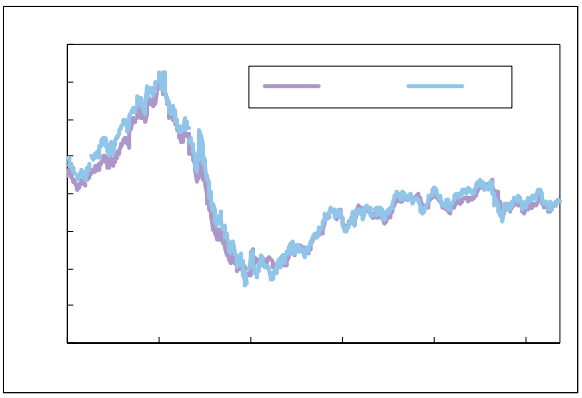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국제 원자재가격의 완만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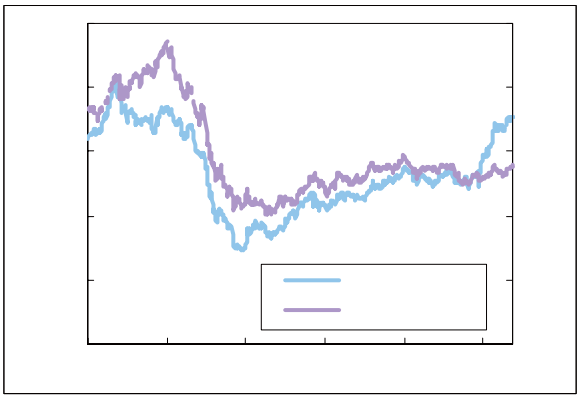
국제유가(두바이油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초 배럴당 40$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2009년말 7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0년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4분기 중에는 80$대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5월 이후 남유럽 재정불안, 세계경제 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Ⅰ-13>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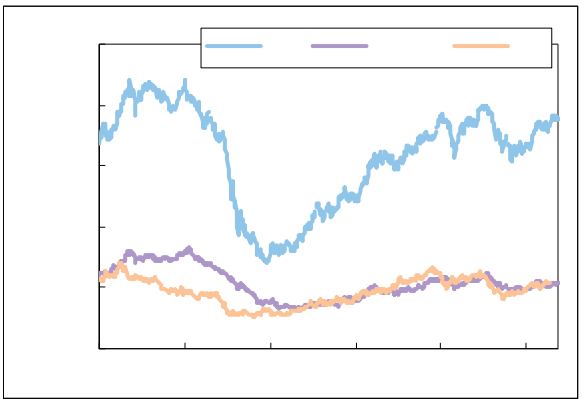
<그림 Ⅰ-14>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자료 : KOREAP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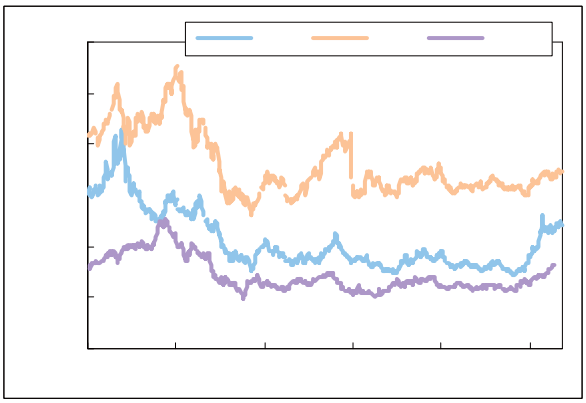
여타 원자재 가격도 경기회복 추세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철금속의 경우 칠레 지진 등의 영향으로 구리 가격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국제곡물은 생산호조 등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7월 이후 가뭄 등 기상악화와 러시아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소맥(밀) 등 일부 품목의 공급차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Ⅰ-15> 주요 비철금속 가격추이



자료 : KOREAPDS

<그림 Ⅰ-16> 주요 곡물가격 추이



자료 : KOREAPDS

2. 국내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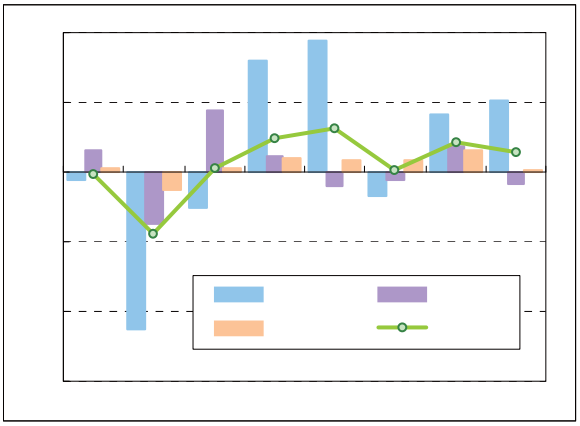
빠른 경기 회복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충격을 받았던 우리경제는 2009년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신속한 정책대응,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10년에도 GDP가 전기대비로 1/4분기 2.1%, 2/4분기 1.4%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이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경기회복에 따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은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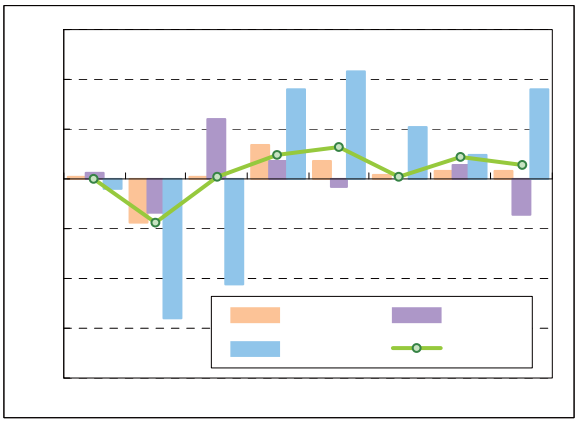
지출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고용·소득여건의 회복과 함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기간중 큰 폭 감소했던 설비투자도 수출호조,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고의 축소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최근 성장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순수출은 2009년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장기여도[6]가 낮아졌다.

<그림 Ⅰ-17> 산업별 국내총생산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Ⅰ-18> 지출별 국내총생산



자료 : 한국은행

6) 순수출의 성장기여도(전기비, %p) : (09.1/4) 2.3 (2/4) 0.8 (3/4) -0.9 (4/4) -0.6 (10.1/4) -0.5 (2/4) 0.1

수출입 증가세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수출과 수입 모두 2009년 11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010년 1~8월중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하였다. 수입은 수출 증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 내수회복에 따른 소비증가로 2010년 1~8월중 전년동기대비 37.1% 증가하였다.

<표 Ⅰ-1>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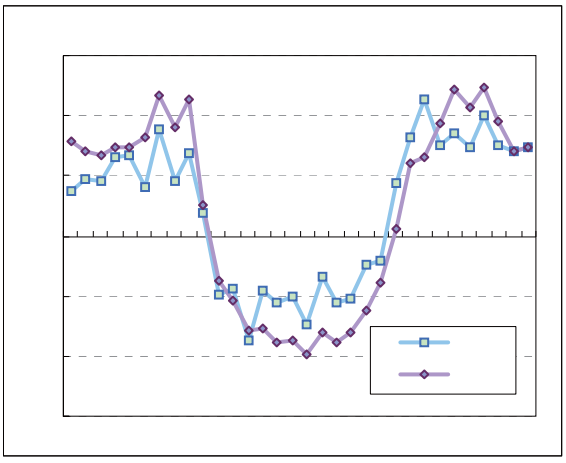
(전년동기비, %)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가전	LCD	선박	무선통신기기
2008년	-16.0	-6.0	56.8	-4.0	9.5	55.4	17.3
2009년	-5.3	-27.5	38.9	-22.0	28.4	4.6	-13.2
2010년 1~8월	86.1	54.2	40.8	23.9	44.2	7.2	-28.9

자료 :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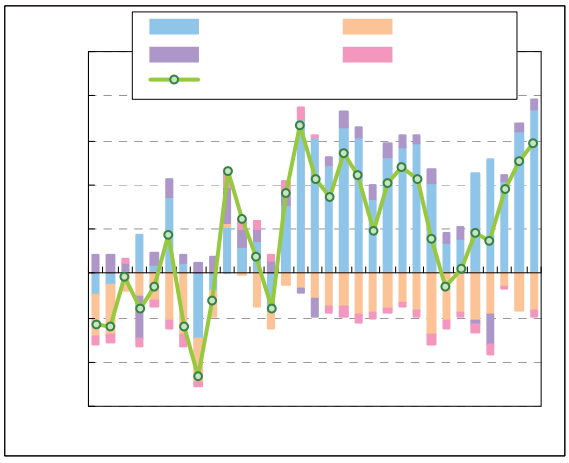
수출 호조에 따라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3월부터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경상수지도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국내기업의 특허사용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림 Ⅰ-19> 수출·수입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Ⅰ-20>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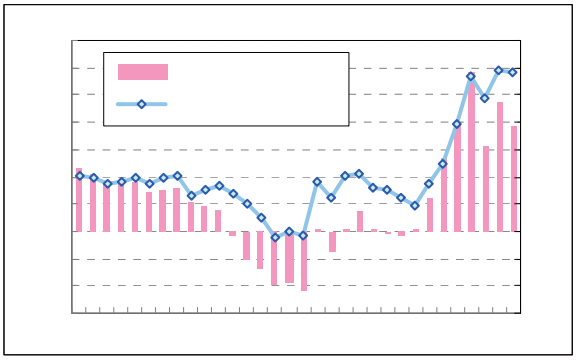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고용회복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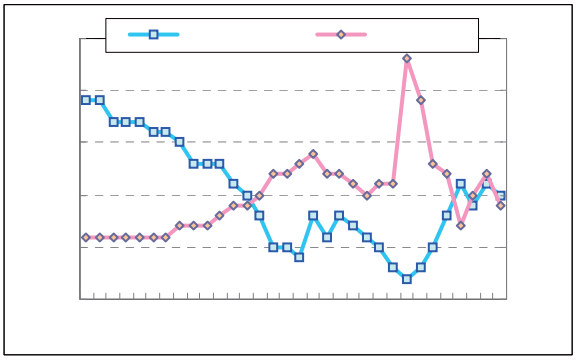
고용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중 계속 부진하였으나 2010년 들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참고 Ⅰ-3) 취업자 수는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4월부터는 민간부문(非공공행정 부문)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이 2010년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실업률도 1월중 희망근로 참여자 모집에 따른 구직자 증가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등 전반적인 고용여건은 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Ⅰ-21> 취업자 증감 및 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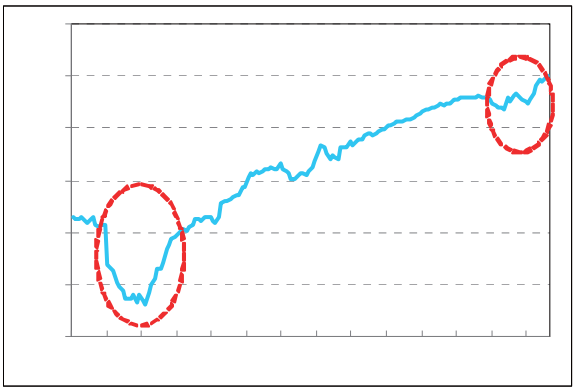
<그림 Ⅰ-22> 고용률·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현재의 고용회복 속도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빠른 편이다. 외환위기 때는 취업자 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1년 반만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주요 선진국과 취업자 증가율, 고용률 변화 등을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용회복 추세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Ⅰ-23> 계절조정 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Ⅰ-2> 주요 선진국 비교

	2009년		2010년 상반기 (전년동기비)	
	취업자 증가율(%)	고용률 변화(%p)	취업자 증가율(%)	고용률 변화(%p)
한국	-0.3	-0.9	1.2	-0.1
미국	-3.8	-2.9	-1.1	-1.2
일본	-1.6	-1.0	-0.8	-0.5
유로	0.0	-1.1	-0.8*	-0.7*

자료 : 각 국 통계기관
* 유로는 '10.1/4분기

참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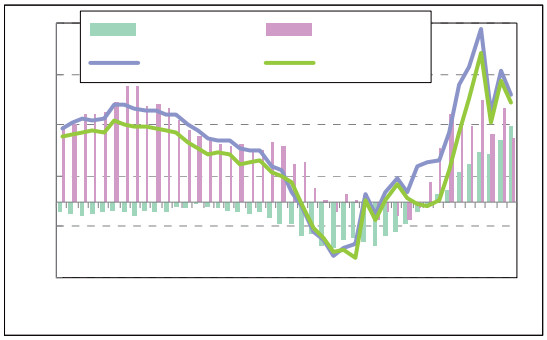
최근 고용회복의 특징

2009년에는 대규모 정부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고용의 급격한 악화를 완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의 고용이 빠르게 늘면서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림어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0년 들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생산활동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0년 8월 중 제조업 취업자는 2000년 8월 이후 최대인 전년동월대비 29.7만명 증가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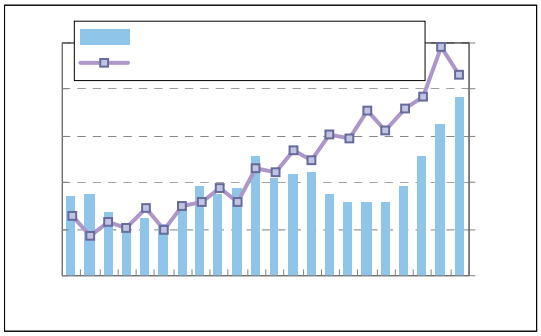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여 고용의 안정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용직 취업자는 글로벌 위기로 전체 취업자가 감소하던 중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는 모습이다.

비농림어업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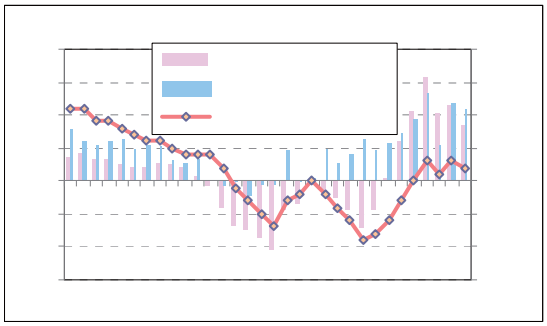
상용직 취업자 증감·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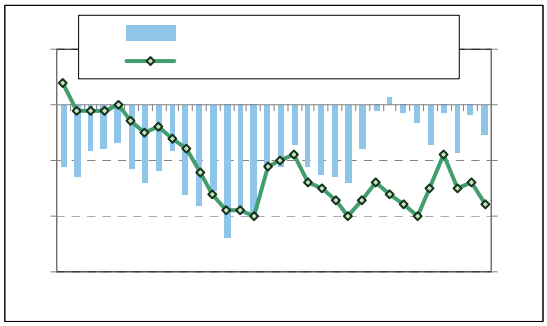
남성에 비해 글로벌 위기의 충격을 많이 받았던 여성 취업자도 2010년 들어 경기회복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사업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고용 회복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경기요인 이외에도 고학력자 증가에 의한 취업 눈높이 상승, 대기업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청년층 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취업자 증감·고용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취업자 증감·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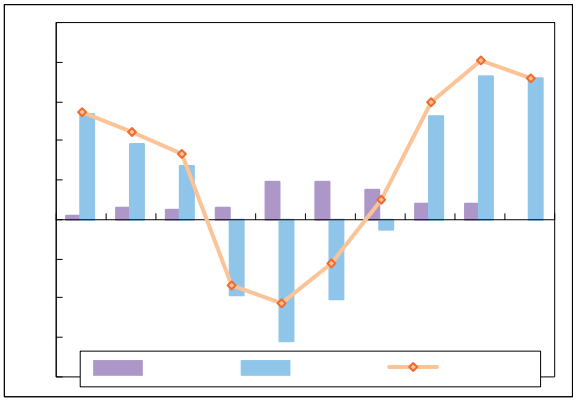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민간부문의 회복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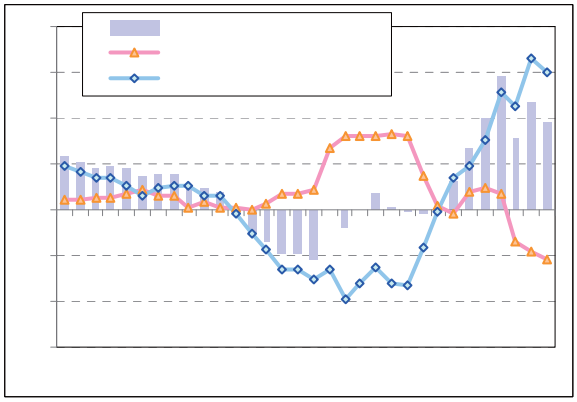
글로벌 위기의 극복 과정 초기에는 정부부문이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견인했던 데 반해, 2009년 4/4분기부터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의 경우에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한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2010년 2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4월부터는 추세 수준을 초과하는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이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수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림 Ⅰ-24> 정부·민간 부문 성장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Ⅰ-25>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민간부문 중심의 경기 및 고용 회복에 따라 가계소득이 2009년 4/4분기 이후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이 컸던 1분위·2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Ⅰ-3> 가계소득 증가율

(전년동기비, %)

	2008년		2009년				2010년	
	3/4	4/4	1/4	2/4	3/4	4/4	1/4	2/4
실질 가계소득	1.3	-0.5	-2.5	-2.2	-2.6	2.4	4.4	4.9
명목 가계소득	6.9	4.0	1.3	0.5	-0.7	4.9	7.3	7.7
1분위	10.5	6.3	-3.4	-1.4	-5.0	6.3	16.0	17.9
2분위	7.1	4.9	1.1	2.5	0.8	6.0	8.1	9.7
3분위	6.3	4.3	1.5	2.6	1.3	5.6	5.6	6.8
4분위	5.8	4.3	1.2	1.7	0.6	4.2	5.9	7.1
5분위	7.2	3.0	1.8	-1.5	-2.1	4.4	7.4	6.4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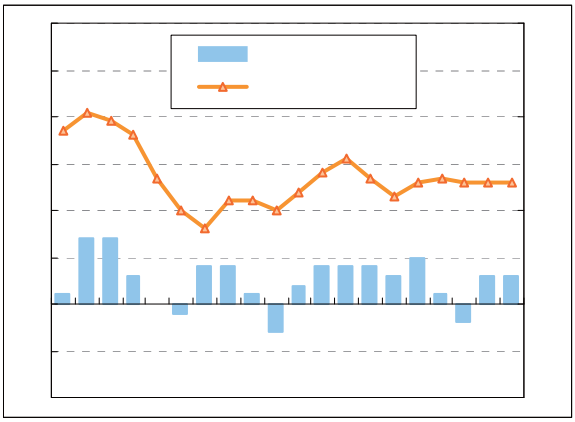
물가 안정세 지속

고유가 등으로 2008년 중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2009년 2/4분기부터 빠르게 안정되었다. 2009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2% 초반대에 머물렀으며 2010년 들어서도 2% 중후반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공급측 요인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물가안정세는 수요·공급 측면 모두 물가압력이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물가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어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공급측면에서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글로벌 위기에 따른 급락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2009년 중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10년 들어서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요금도 2009년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환율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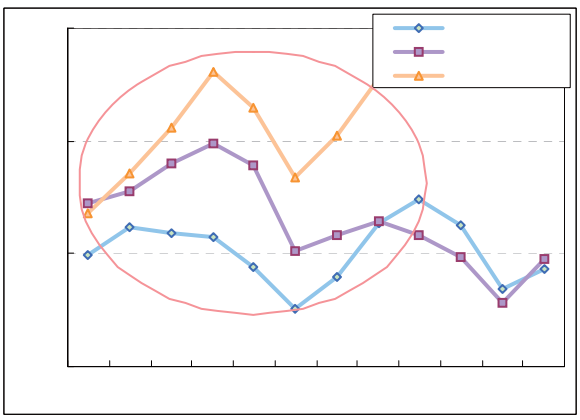
다만, 연초 폭설,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강우로 이어진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최근 물가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배추, 무 등 기후요인에 민감한 채소류 가격이 1~8월 중 19.6%(전년동기비)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상승을 주도하였다. 농산물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자주 구입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지표물가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체감물가가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Ⅰ-26>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 : 통계청

<그림 Ⅰ-27> 연도별 농산물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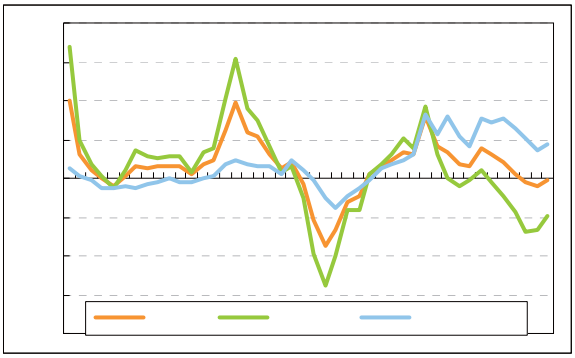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 속에 거래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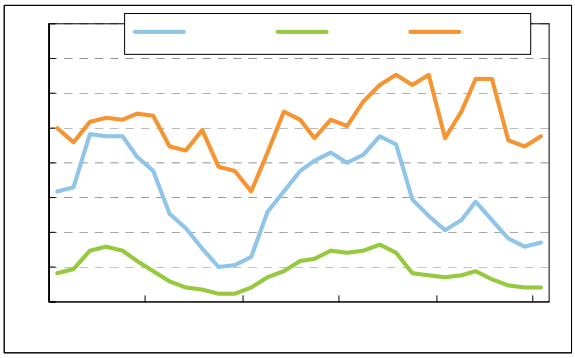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글로벌 위기에 따른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2009년 3/4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4/4분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수도권의 경우 2010년 3월부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은 부산·대전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2010년 4월 이후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와 함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예년에 비해 거래량이 40~50% 수준에 그치는 등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그림 Ⅰ-28>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Ⅰ-29> 월별 아파트 거래량 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전세가격은 2009년 3/4분기 중 큰 폭으로 상승한 후 4/4분기부터는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며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지방의 경우 빠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가격은 2009년 4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못 미치는 수준('08.10월 대비 2.3% 하락)이다. 2010년 들어 가격상승폭이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며, 서울의 경우 6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Ⅰ-4>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전월대비, %)

	09.9월	10월	11월	12월	1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 국	1.8	0.9	0.8	0.3	0.4	0.9	0.8	0.7	0.5	0.4	0.4	0.4
수도권	2.5	1.0	0.7	0.1	0.3	0.7	0.7	0.6	0.3	0.1	0.1	0.2
지방광역시	1.2	0.8	1.1	0.7	0.7	1.4	1.0	1.0	0.8	0.7	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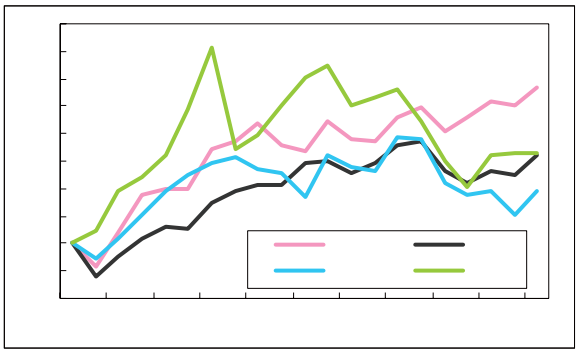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금융시장의 안정

국내금융시장은 2009년 1/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들어 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지기도 하였으나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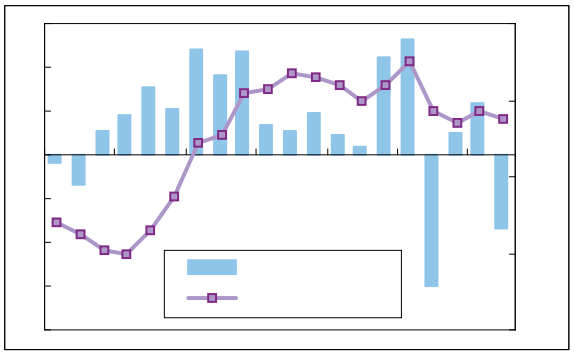
주식시장은 연초 기업실적 개선 및 경기회복 기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2010년 4월 중 코스피지수가 1,700선을 넘어서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5월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와 함께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요국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Ⅰ-30> 주요국 주가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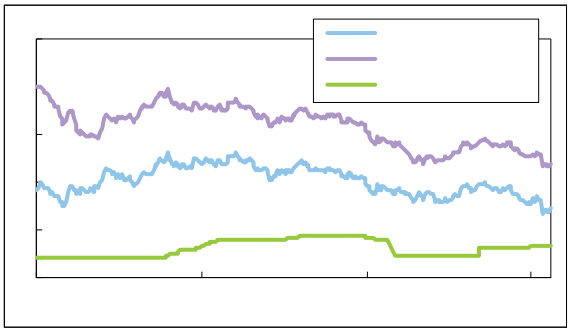
<그림 Ⅰ-31> 외국인 주식투자 및 보유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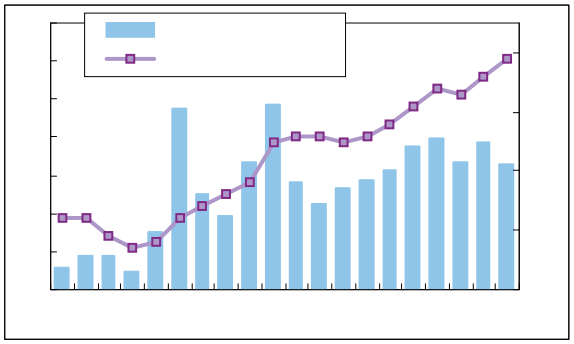
채권시장은 2010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기대 약화, 안전자산 선호현상,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국채매수 등으로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기존의 재정차익(arbitrage) 목적의 거래 이외에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모습이다. 7월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금리가 다소 상승하기도 했으나 채권수요가 지속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림 Ⅰ-32> 주요 금리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www.kofiabond.or.kr

<그림 Ⅰ-33>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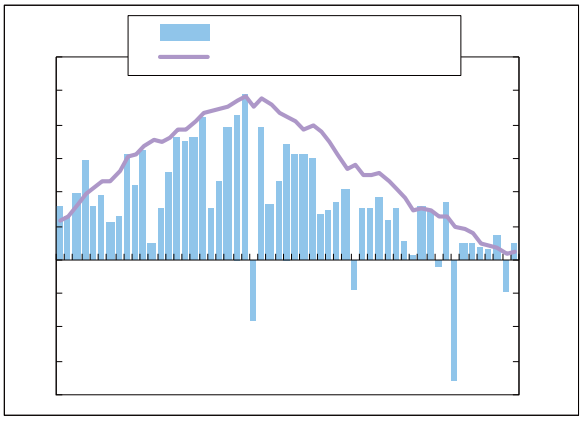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기업 및 가계대출의 증가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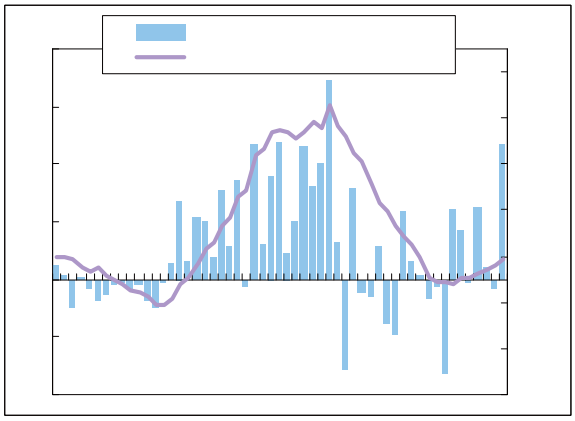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기업대출은 위기 이후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대기업 대출은 글로벌 위기 직후 증가가 멈추었다가 2010년 들어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보증 지원과 Fast-track 등 유동성 지원으로 위기 과정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2009년말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 강화 및 부실채권 상각 노력 등에 따라 중소기업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림 Ⅰ-34> 중소기업 대출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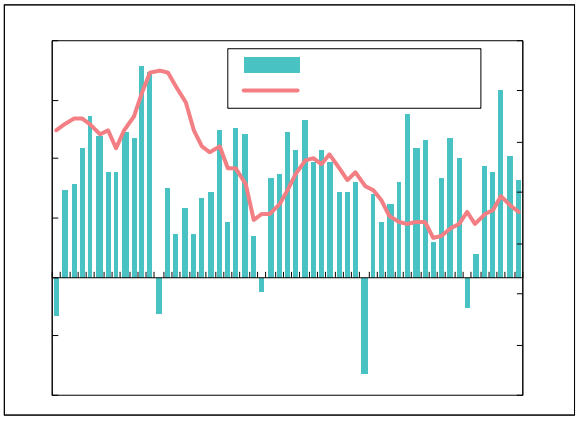
<그림 Ⅰ-35> 대기업 대출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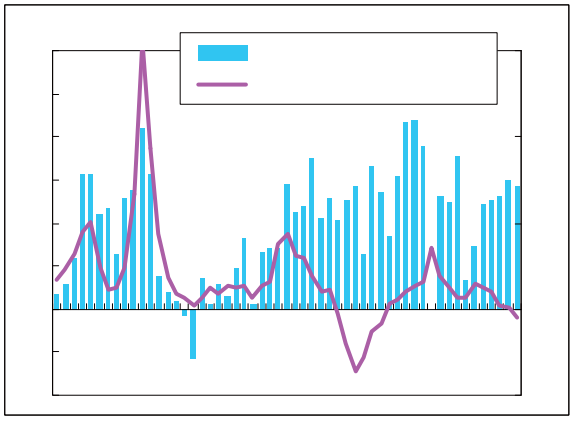
가계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리인하에 따른 상환부담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0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주택구입 용도 이외의 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림 Ⅰ-36> 가계대출 증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림 Ⅰ-37> 부동산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자료 : 한국은행, 국민은행

기업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의 점진적 개선

금융시장 안정과 대내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2009년 하반기 이후 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 매출액 증가율이 2009년 4/4분기 중 플러스로 전환된 후 2010년 1/4분기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등 수익성도 나아지고 있다.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표 Ⅰ-5> 상장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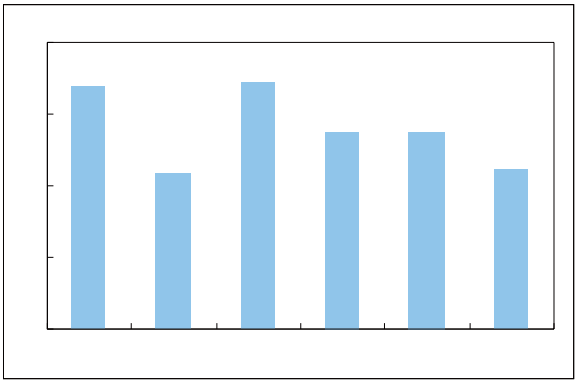
(단위 : %)

	08.1/4	2/4	3/4	4/4	09.1/4	2/4	3/4	4/4	10.1/4
매출액증가율	18.2	24.8	28.6	13.3	△0.8	△4.2	△3.1	7.5	17.4
영업이익률	7.4	7.6	5.9	1.7	4.6	5.4	7.0	7.0	7.2
이자보상배율	613.5	630.5	457.2	133.0	203.4	341.6	447.1	353.2	483.3
부채비율	92.5	95.4	104.3	108.3	116.3	109.7	105.1	101.7	101.0
차입금의존도	21.7	22.4	23.4	24.4	26.0	25.6	25.9	24.6	24.6

자료 : 한국은행, 상장기업(금융업 제외)및 주요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1,500여개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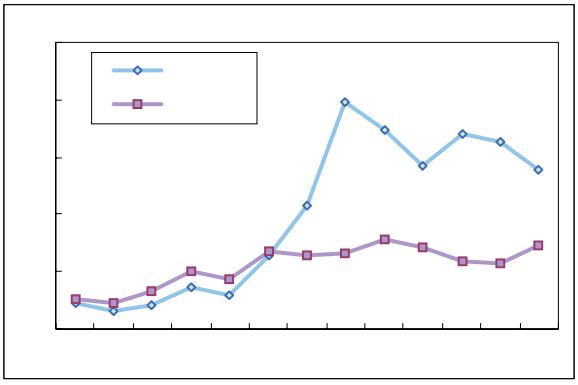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 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상장기업 10개중 3개가 이자보상배율 1미만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향후 신용보증 지원 정상화, 상시 기업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Ⅰ-38>
상장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그림 Ⅰ-39>
제조업 이자보상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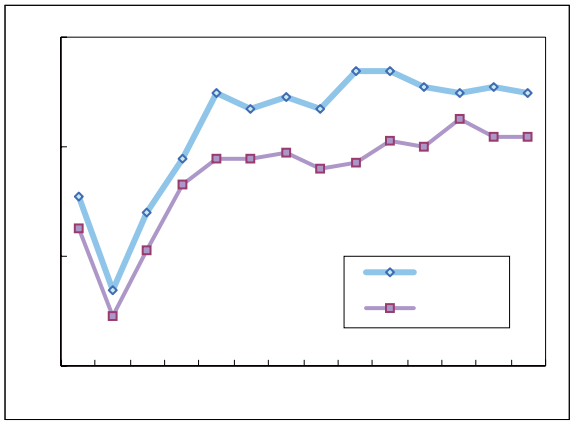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기업자금 사정의 개선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가 호전되면서 기업의 자금사정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말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던 제조업 자금사정 심리지수(BSI)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기업의 경우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고, 부도업체수도 2008년말 월 345개에서 120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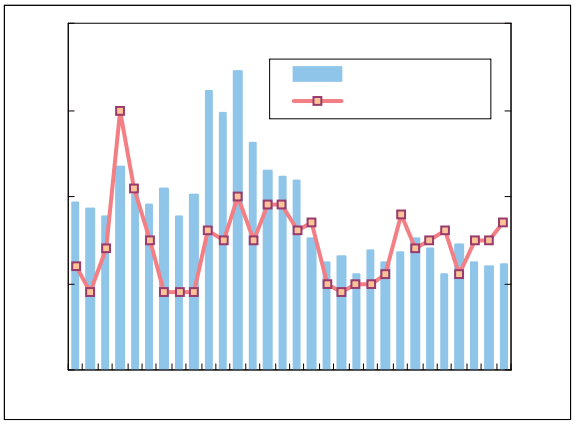
다만, 중소기업은 아직 개선이 미진한 상황이다. 자금사정 BSI가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고, 부동산·건설 부문 등 일부 취약업종의 부진과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어음부도율과 은행대출 연체율이 2010년초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초 월 9천억원을 넘었던 신용보증기관 보증사고 잔액이 2010년 6월에는 5천억원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보증만기 자동연장과 유동성 공급 등 정책지원 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림 Ⅰ-40> 제조업 자금사정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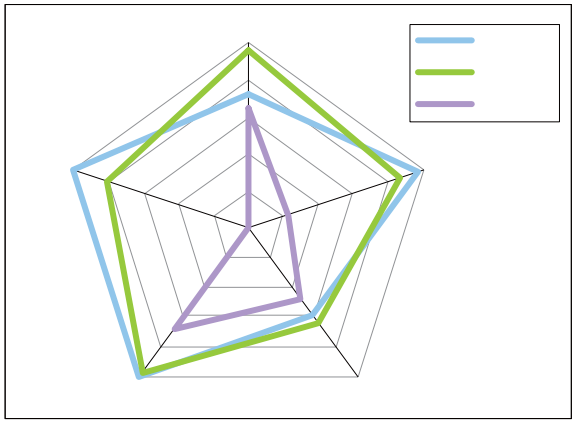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Ⅰ-41> 부도업체수 및 어음부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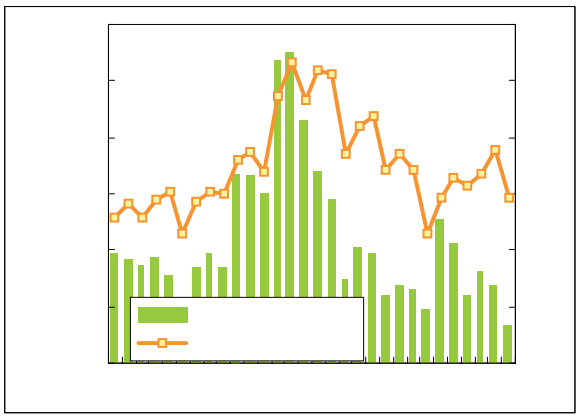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

<그림 Ⅰ-42>
중소기업 자금사정 Map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그림 Ⅰ-43>
중소기업 보증사고 잔액 및 대출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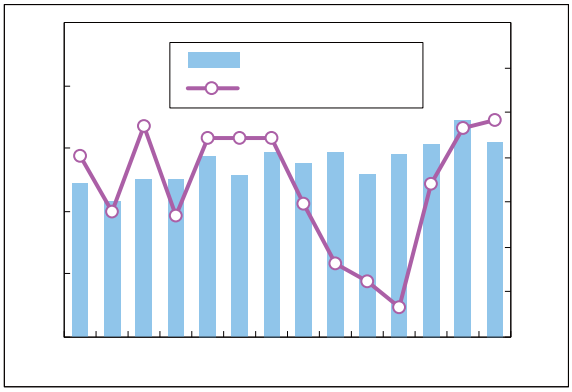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가계부문 건전성 개선 속에 취약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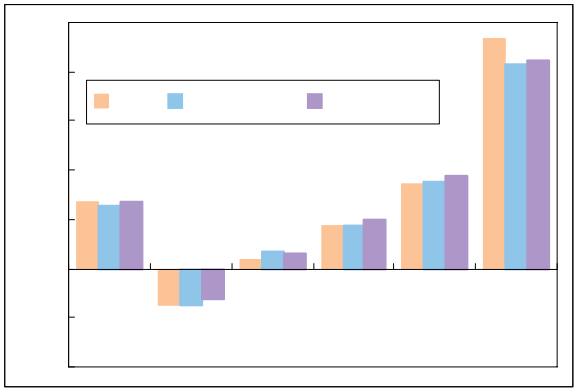
2009년 중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가계소득은 빠른 경기회복과 고용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10년 들어 위기 이전의 증가속도를 회복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 악화되었던 가계수지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Ⅰ-44> 가계소득 추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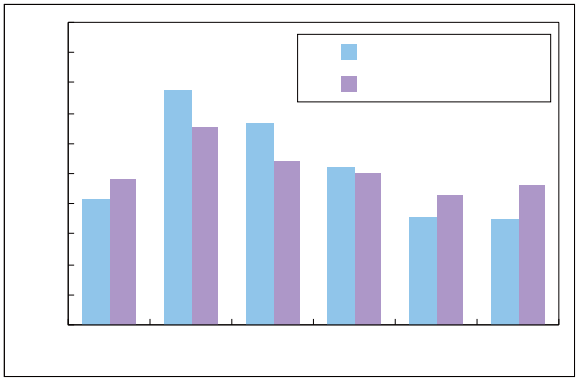
<그림 Ⅰ-45> 소득 분위별 가계수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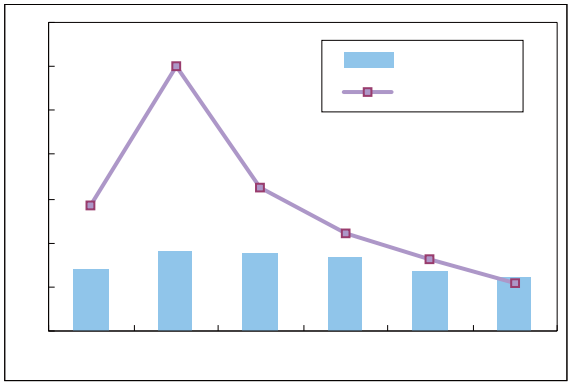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및 소득을 감안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소폭 나아진 상황이다. 부채보유가계의 연간 원리금 상환/소득 비율(DSR)은 2008년 6월 16.6%에서 2009년 3월 14.1%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부채보유가계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도 2008년 8월 88.2%에서 2009년 3월 82.5%로 소폭 개선되었다. 다만, 1~2분위 저소득가구의 경우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과 연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모두 100%를 상회하고 있고 적자가구 비중도 높아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Ⅰ-46> 소득분위별 재무건전성



자료 : 금융감독원, 가계신용조사('09.3월)

<그림 Ⅰ-47> 소득분위별 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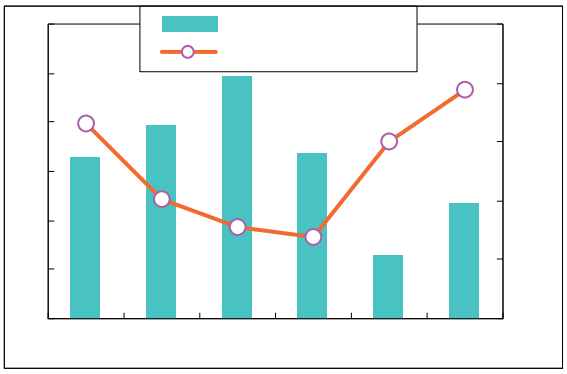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청

금융기관 실적개선 미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되었던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은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회복이 충분하지 못하고 부실채권비율 상승 등 취약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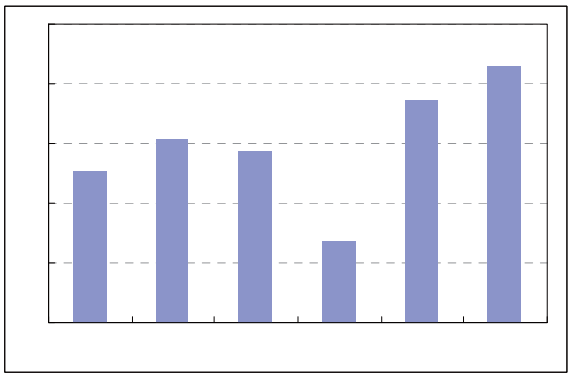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당기순익 규모는 2008~2009년 중 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2010년 상반기 들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위기 이전의 실적에는 미달하는 모습이다. 자산건전성은 위기 이후 건설업체 등 취약부문의 부실이 확대된 영향으로 다소 악화되었다. 부실채권비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와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라 신규부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본적정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자체 자본확충 노력과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Ⅰ-48> 은행권 수익 및 부실채권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등

<그림 Ⅰ-49> 은행권 BIS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BIS 비율 현황

제2금융권의 경우, 보험·증권사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도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표 Ⅰ-6> 제2금융권 경영실적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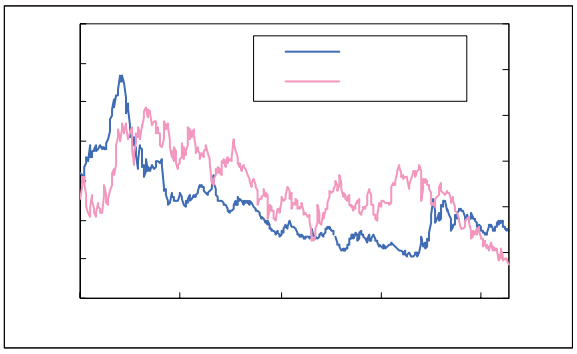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증 권	당기순익	3.7	2.6	4.4	2.0	2.9
	영업용 순자본비율	665.3	585.2	552.1	607.1	553.0
보 험	당기순익	3.3	3.0	3.8	1.9	3.7
	지급여력비율(생보)	229.9	232.9	237.4	214.5	271.1
	(손보)	294.0	281.6	288.4	275.2	302.5
저축은행	당기순익	0.55	0.63	0.34	-0.04	-0.5
	BIS비율	9.18	9.09	9.09	9.47	9.46
	고정이하여신비율	10.89	10.21	9.37	10.28	9.1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회계연도 기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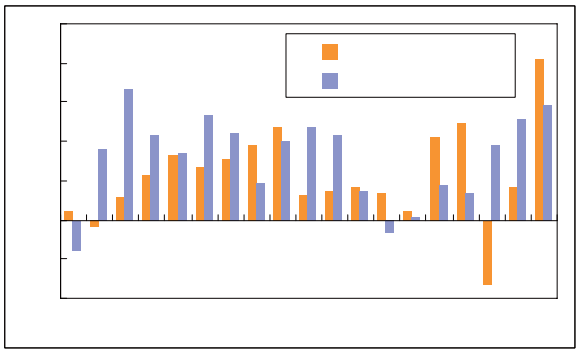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1,600원대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2009년 4월 이후 1,100~1,200원대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지속해 왔으나, 2010년 들어서는 유럽 재정불안과 천안함 사건 등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1~4월 중 원/달러 환율은 대규모 외국인주식순매수 등으로 1,100원선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5~6월 들어서는 유럽 재정불안과 천안함 사건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으로 1,250원대까지 단기간내에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으나, 6월말 이후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완화되고 국내외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재개됨에 따라 1,160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중국 경제의 둔화가능성 등으로 소폭 상승하며 1,1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참고 Ⅰ-4, Ⅰ-5)

<그림 Ⅰ-50> 환율 동향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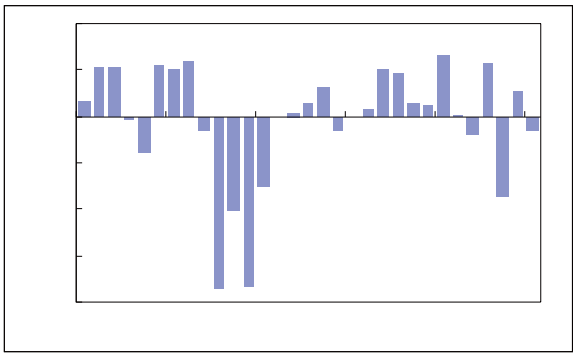
<그림 Ⅰ-51> 외환수급 동향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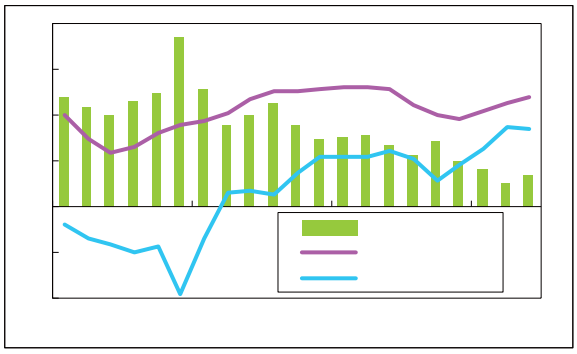
해외차입은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 따라 다소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외화자금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외화유동성 상황을 나타내는 내외금리차와 스왑레이트간의 격차가 2009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7]

<그림 Ⅰ-52> 자본수지상 해외차입 동향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Ⅰ-53> 외환스왑시장 동향



자료 : 한국은행

7) 외화유동성이 풍부할수록 격차가 작아지며, 이 격차는 차익거래(arbitrage) 유인의 크기로도 해석된다.

참고 Ⅰ >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이 높은 원인

2010년 들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으나, 위기 이전이나 여타 주요국 환율에 비해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건의 영향을 받았던 2/4분기 중 변동률은 글로벌 위기 당시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였고, 유로 및 엔 등 국제통화는 물론 여타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원, %, 기간중 평균)

		'07년	'08년	'09년	'10년 1/4	2/4	4월	5월	6월
일중	변동폭	3.0	18.3	14.6	7.1	12.8	5.8	18.1	15.2
	변동률[1]	0.32	1.50	1.10	0.62	1.08	0.52	1.53	1.25
전일대비	변동폭	2.1	12.0	9.4	5.6	10.9	4.6	16.3	12.6
	변동률[2]	0.22	0.99	0.71	0.49	0.92	0.41	1.39	1.04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일중 최고가 - 일중 최저가)/당일 평균환율 × 100
2) (금일 종가 - 전일 종가)의 절대값/전일 종가 × 100

주요국 통화의 환율 변동성 비교

(%, 달러화 대비, 전일대비)

	한국	유로	일본	호주	브라질	싱가폴	멕시코	태국
2008년	0.98	0.67	0.75	1.05	1.16	0.33	0.64	0.36
2009년	0.71	0.60	0.67	0.90	0.91	0.30	0.76	0.15
2010년 1/4분기	0.49	0.48	0.54	0.56	0.66	0.22	0.51	0.15
2/4분기	0.92	0.65	0.52	0.85	0.89	0.34	0.72	0.13

자료 :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수출입의존도 및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대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인한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4월까지는 유입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된 5월 들어 대규모 유출로 전환되면서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장구조 측면에서 보면, 경제규모에 비하여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높은 환율변동성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수 수출입 대기업의 외환수급이 전체 시장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시장수급 및 심리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외환시장 참여자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특히 단기적 변동을 감내하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많지 않은 점도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화의 경우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국내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등 유사시에는 오히려 투기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참고 Ⅰ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발표 이후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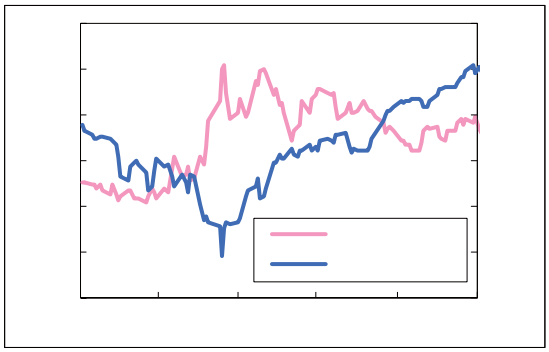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수출업체·해외투자펀드의 선물환 매도 등으로 단기외채가 많았고 은행권의 자산-부채간 만기 미스매치가 컸던데 주로 기인한다. 2009년초 이후 해외차입 등 외화유동성 개선으로 유사한 취약성이 재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외환건전성 기반 강화를 위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였다(10.6.13일). 동 방안은 선물환거래 및 외화대출 행태 개선을 통해 외화차입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위기시 자본유출 급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

완화 방안	주요 내용
선물환포지션 제도 신설	은행의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초과 금액을 자기자본 대비 일정비율(외은지점 250%, 국내은행 50%) 이내로 제한
외화대출 관리 강화	기업운전자금 등 국내 용도로도 허용되던 은행 외화대출을 수입 등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외화자산-부채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비율'과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기준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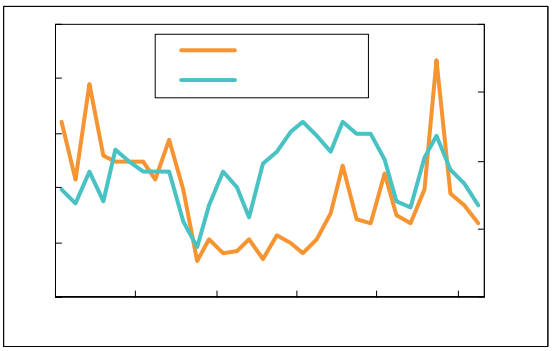
외환시장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발표 직전에는 규제의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급변동하였으나, 발표 이후 점차 영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재정불안, 천안함 사건 등 외부요인에 선물환 규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겹치면서 5월말~6월초 중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도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면서 외환스왑레이트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동 방안은 대체로 큰 시장충격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은행들도 선물환포지션 축소와 자본확충을 병행 추진하면서 대응하고 있어 외환건전성 측면에서는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신설된 선물환 규제의 적용 대상인 외환스왑 및 선물환 거래량이 6월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환율 및 외환스왑레이트



자료 : 한국은행, 인포맥스

외환스왑 및 선물환 일평균 거래량



자료 : 한국은행

3. 정책대응 평가

지표경기는 회복되었으나 서민체감경기 개선은 미흡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우리경제도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정부는 비상시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통해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하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그간 부진했던 소비·투자 등 내수가 호전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 등 상당수 지표들이 아직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고용 및 소득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함에 따라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보다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서민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통해 경기개선 흐름을 공고화하고 위기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던 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들어 '일자리 정부' 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장단기 고용대책을 추진하였다. 단기 대책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업장려수당, 고용투자세액 공제 등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 추진하였다. 경기회복과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010년 들어 고용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거시정책의 정상화로 경제의 건전성 유지

거시경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하여 확장의 폭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였다. 재정정책은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2009년 4.1%에서 2010년에는 2.7%(예산기준)로 감축하였고, 금융정책도

2010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참고 Ⅰ-6) 한국은행이 2010년 6~7월 중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고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도 완화기조가 축소되고 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과 확장기조 축소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2010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중소기업 긴급대출제도인 'Fast Track' 프로그램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는 등 보완책과 속도조절을 병행하였다.

글로벌 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른바 '출구전략'의 추진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많은 논의와 우려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공공부문의 성장기여도 하락을 민간부문이 보완하는 등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흐름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무리 없이 거시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정책운용을 통해 예외적 조치들이 장기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의 건전성 악화와 부실 누적,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들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위기대응능력 제고

경제가 위기상황을 점차 벗어남에 따라 정부는 경제체질과 위기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였다. 기업부문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채권단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위기기간 중 은행권의 높은 시장성수신 비중과 단기외채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불안이 커졌던 경험을 거울삼아 은행 유동성 규제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였다. 원화유동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외환건전성 기반 강화를 도모하였다.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미흡

그간의 경제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거시정책 정상화 등의 과정에서 구조조정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어 경제 전반에 충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회복 불가능한 부실은 서둘러 정리해 나가는 노력이 긴요하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업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에 있어서도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이해집단간 이견조정 등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Ⅰ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재정기조 평가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화를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 수입과 지출만을 추출하여 전년과 비교함으로써 재정정책의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다.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크면 재정기조가 전년에 비해 경기 확장적으로, 0보다 작으면 전년대비 경기 긴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충격지수 산출방법(IMF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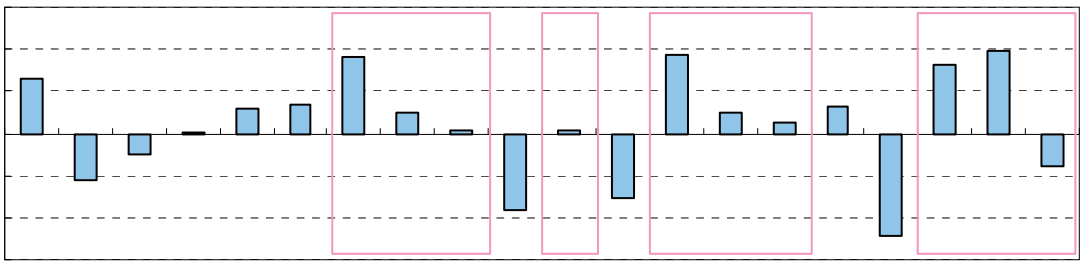
① 구조적재정수지 (Cyclically Adjusted Balance, CAB)	⇒	② 재정충격지수 (Fiscal Impulse Indicator, FI)
œš› á «ß^{P} ^{2,Ž} ^{2,} ß à ,		Ÿ¢á à œš› à œš› à î ^{2,}

* R : 총수입-사회보장성 수입, G : 총지출-사회보장성 지출, Y : 실제GDP, Y^P : 잠재GDP

2008년 재정충격지수(GDP대비 %)는 1.6, 2009년은 2.0으로 재정기조를 전년대비 확장적으로 운용하였으며, 그 크기는 1997년 외환위기시(1.8), 2003년 카드사태시(1.9)와 유사한 수준이다. 2010년 예산상 재정충격지수는 -0.8로 2009년에 비해서는 재정기조가 긴축적으로 평가된다.

재정충격지수로 재정기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유의할 점이 있다. 재정충격지수는 재정이 '전년에 비해' 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이며,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기조는 재정충격지수 뿐만 아니라,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10년의 경우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2009년에 비해 긴축적이라는 의미이며,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등이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8)]

재정충격지수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8) 재정수지(GDP대비 %) : ('08) -1.5 ('09) -4.1 ('10예산) -2.7
구조적재정수지(GDP대비 %) : ('08) -1.6 ('09) -3.5 ('10예산) -2.5

Ⅱ 거시경제여건 전망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완만한 회복세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2010년 상반기에 비해 회복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했던 교역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 재정문제 장기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가능성, 미국·중국의 경제회복세 둔화, 유럽을 비롯한 주요선진국의 재정건전화 계획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9)]

국가별로 보면, 미국경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회복 지원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실적도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주택시장 부진 등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Ⅱ-1) 일본경제는 내수회복이 더딘 가운데 엔화 강세로 수출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어 성장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인도는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유동성 관리 등으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인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Ⅱ-2) 유럽경제는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하반기 중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긴축에 따른 내수위축이 지속되는 등 더딘 회복세가 예상된다. (참고 Ⅱ-3)

<표 Ⅱ-1> 세계경제 성장 전망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	IMF	OECD[1)]	IMF	OECD[1)]
세계경제 성장률[2)]	-0.6	4.6	4.6	4.3	4.5
미 국	-2.6	3.3	2.6	2.9	3.2
유 로	-4.0	1.0	1.2	1.3	1.8
일 본	-5.2	2.4	2.5	1.8	2.0
중 국	9.1	10.5	11.1	9.6	9.7
인 도	5.7	9.4	8.3	8.4	8.5

주 : 1)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BRICs 기준, 2) 구매력평가(PPP) 환율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10.7월), 2010년 미국, 일본 성장률은 OECD interim assessment('10.9월), 나머지 성장률은 OECD Economic Outlook('10.5월)

9) IMF는 2010년 세계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2010년 4월 7.0%에서 7월에는 9.0%로 상향조정하였다.

참고 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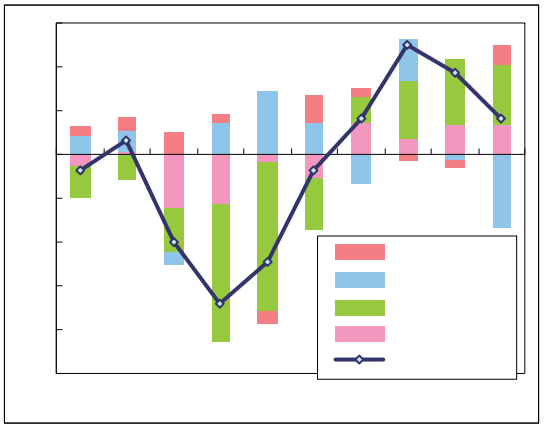
미국 경제의 재침체(Double Dip) 가능성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과 고용·주택시장 부진, 기업들의 재고증가율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하반기 미국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고용·소득여건 악화로 민간소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30년만에 가장 높은 9%대의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농업 취업자수가 6~8월 연속 감소하는 등 최근 고용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기업들이 당분간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세제혜택 종료 등으로 기존주택 판매가 6~7월 중 크게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모기지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주택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공실률('10.6월말 10.6%)이 과거 평균의 1.5배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대출 연체와 압류 증가로 가격회복이 제한되고 있어 주택시장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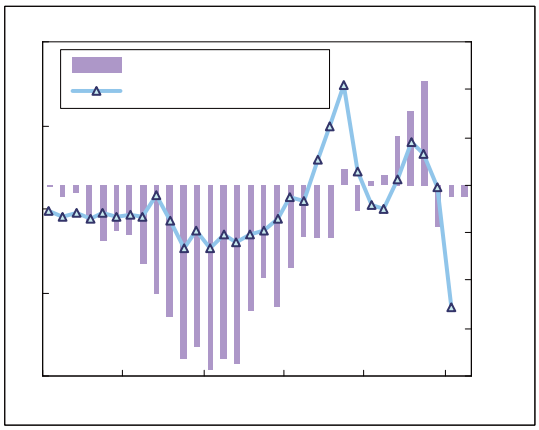
민간투자는 기업들의 재고확충 등으로 그간 높은 성장기여도를 유지해 왔으나, 장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개선 속도가 완만해질 전망이다.[10]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정부지출도 하반기 성장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11] 달러강세 등의 영향으로 2/4분기중 가장 큰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순수출은 유럽경제 부진 및 중국경제 둔화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美 GDP 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자료 : 미 상무부

美 고용 및 주택시장 동향



자료 : 미 노동부, 모기지은행연합회(MBA)

10) 재고의 성장기여도(전기비연율, %p) : (09.4/4) 2.8 (10.1/4) 2.6 (2/4) 0.6

11) 2011년 50개 주정부 가운데 46개의 주정부에서 총 1,21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미국 CBPP 전망) 2009년 연방정부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9.8%로 2차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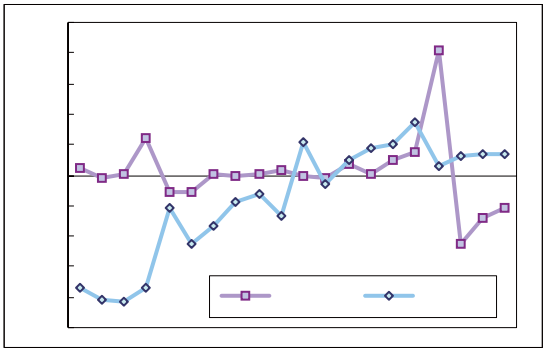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경제가 급격한 둔화나 재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EU의 유럽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유럽 재정문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점차 진정되고 있고, 급격한 둔화가 우려됐던 중국 경제도 2/4분기 중 10.3%의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대외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재침체 우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용부진도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010년 6월 이후의 비농업취업자수 감소는 인구센서스 종료에 따른 공공부문의 임시직 고용감소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므로 추세적 고용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부문 비농업취업자수가 완만하나마 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고용이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기준이 차츰 완화되는 가운데 기업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자본재 및 인건비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2)]

미국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재침체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미국 정부는 2010년 9월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GDP의 2.5% 수준)에 달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FRB도 저금리기조 유지, 양적 완화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국채매입 재개 등 추가적인 부양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외여건 개선과 함께 유럽 재정우려 완화, 중국 위안화 절상 등으로 달러강세가 완화될 경우 수출이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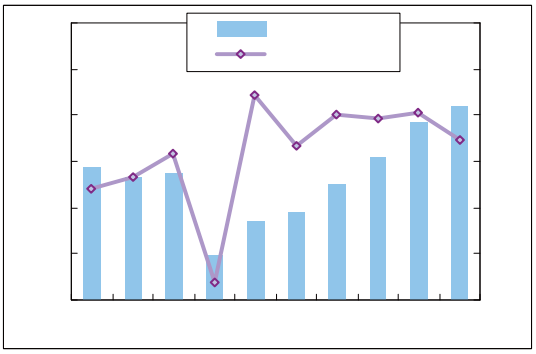
다만, 고용·주택시장의 부진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회복세 둔화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美 취업자 증감 추이



자료 : 미 노동부

美 기업이익 추이



자료 : 미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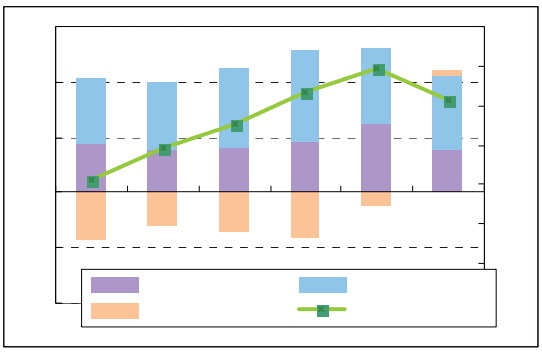
12) 기업대출기준은 2010년 2/4분기까지 3분기 연속 완화되고 있다. (FRB Survey, '10.7월)

참고 Ⅱ >

중국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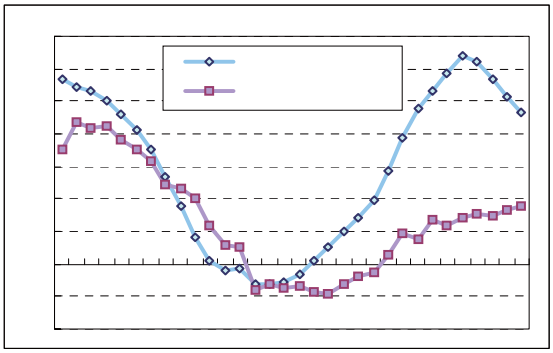
중국경제는 2010년 들어 소비·투자 등 내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1/4분기 11.9%, 2/4분기 10.3%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소비지원책 연장과 소득 증가로 소비는 전년대비 18%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성장을 견인해온 투자는 최근 부동산 규제 및 지방재정 규율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유럽·미국 등 주요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7월까지 36%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큰 폭의 수출증가로 무역수지도 2010년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7월에는 2009년 1월 이후 최대 규모인 28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GDP 성장률 및 부문별기여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최근 중국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 2/4분기 성장률 하락 등으로 중국경제의 둔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시장은 최근의 거래량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그간 가격이 급등했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되나 도시 인구유입 지속, 임대가격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가격급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물가도 7월과 8월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3%를 초과하였으나 기상이변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향후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투자와 수출의 증가폭 축소 등으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은 9%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는 소득 증가와 정부의 소비진작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는 부동산시장 및 지방정부 SOC투자의 둔화가 예상되나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대형국책사업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수출은 미국의 경기둔화우려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할 소지가 있다. 향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소비진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내수비중을 높여 나가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 및 물가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Ⅱ >

글로벌 재정긴축의 영향

최근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전원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까지 재정긴축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 주요국의 재정긴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국의 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긴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성급한 재정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긴축이 이뤄질 경우 각국의 정부지출 감소(1차 효과), 재정승수효과에 따른 내수 감소(2차 효과), 교역경로를 통한 수출 감소(3차 효과)가 결합되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재정긴축이 한꺼번에 급격한 패턴으로 이루어질 경우 세계경제 전반에 다소 충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재정긴축이 민간부문의 회복흐름 등과 보조를 맞추어 질서있게 시행될 경우 경제의 중장기 건전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둔화 효과도 상당폭 축소될 수 있다. 재정긴축은 시중금리 하락을 통해 소비·투자의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내수회복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남유럽국가 국채에 대한 평가손실 우려 등으로 금융기관간 신용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국가들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재정긴축을 통한 시중금리 하락이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유발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로 미래의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확산될 경우 (Ricardian equivalence) 재정긴축에 따른 직접적 영향이 상쇄될 수 있다.

재정건전화 시나리오별 추이 (현상황 유지→재정건전화)

		2008년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GDP (%)	미국	0.4	3.2→1.9	2.8→3.4	2.4→2.7	2.3→2.6
	유로	0.5	1.8→1.1	2.5→3.2	1.7→1.7	1.5→1.7
	전세계	2.8	4.5→3.7	3.4→3.8	3.0→3.2	2.9→3.1
재정수지 (GDP대비 %)	미국	-6.5	-8.9→-7.4	-7.7→-1.7	-6.0→0.2	-3.7→2.0
	유로	-2.0	-5.7→-5.0	-2.9→-0.2	-2.3→0.2	-2.4→0.7
	OECD	-3.2	-6.5→-5.6	-4.7→-1.2	-3.6→0.1	-2.5→1.2
국가부채 (GDP대비 %)	미국	70	95→95	114→99	127→91	128→76
	유로	76	97→97	102→95	101→86	101→77
	OECD	79	100→101	111→107	117→100	117→88

자료 : OECD, '10.5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주된 원인이었던 남유럽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으나, 궁극적인 불안 해소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나 은행부실 정리 등의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 Ⅱ-4, Ⅱ-5)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정부·기업·은행·가계 등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위기대응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부실이 현실화되어 새로운 불안요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점진적 상승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7월 이후 유럽 재정불안 완화, 신흥국 중심의 수요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충분한 석유재고와 향후 세계경제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란제재 등 경제외적 변수에 의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참고 Ⅱ-6)

<표 -2> 해외 주요기관 유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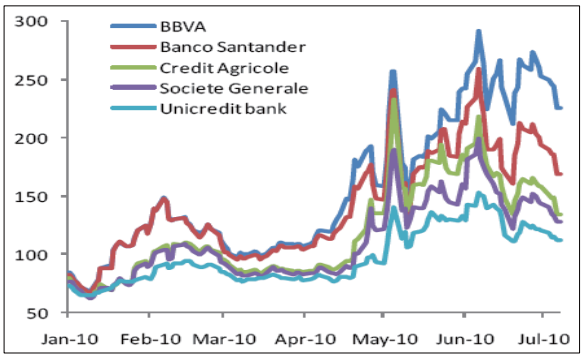
(단위 : $/bbl, 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09년	'10년					'11년
			1/4	2/4	3/4	4/4	연간	
EIA* ('10.8.10일)	WTI	61.7	78.6	77.8	78.8	81.3	79.1	83.5
PIRA* ('10.8.24일)	Brent	61.5	76.3	78.3	75.7	84.8	78.8	88.9

* EIA : 美 에너지정보청, PIRA : 美 석유산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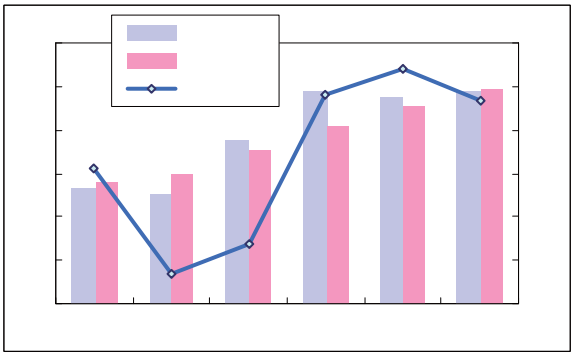
비철금속은 신흥국의 수요증가 등의 영향을 받으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제곡물은 러시아·캐나다 등 주요 생산지의 기후악화로 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양호한 재고수준 등을 고려할 때 2008년과 같은 가격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소맥 등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Ⅱ-1> 유럽 주요은행 CDS프리미엄



자료 : ECB Financial Stability Review('10.6월)

<그림 Ⅱ-2> 세계 곡물 생산·소비·재고율



자료 : USDA

참고 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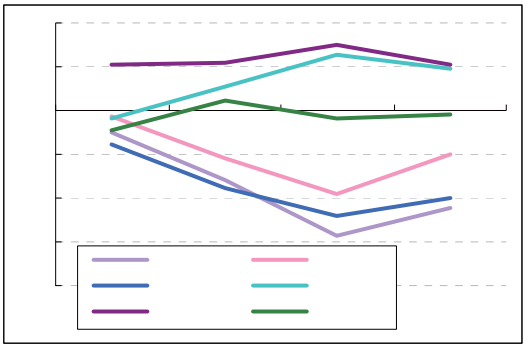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EU, IMF, ECB 등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시장 충격은 점차 진정되는 분위기다. 7월 들어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가 대규모로 만기도래하는 국채를 성공적으로 차환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있고, EU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럽내 대다수 은행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채보유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부실화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고부채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재정불안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유럽 재정문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이 낮고 세수기반이 취약한 데 반해 관대한 공적연금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압박이 컸다. 저축률이 낮고 제조업 등 수출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유로화 강세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유로 회원국으로서 독자적인 통화·외환정책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대응이 쉽지 않았고 환율변동을 통한 경상수지 조정 메카니즘도 가동되지 못했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국들이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큰 상황이다. 향후 성장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삭감, 구조개혁 등이 추진될 경우 국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정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간헐적으로 재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유럽 은행들에 적용된 스트레스테스트의 전제가 엄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은행부실에 대한 불안심리가 잔존하고 있고, 향후 은행들의 부실자산 상각 등 건전화 노력이 질서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갑작스런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채발행 증가로 은행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은행권의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차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은행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의 역내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남유럽 위기가 동유럽 등 여타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 주요국 경상수지 추이



자료 : IMF WEO DB

유로지역 은행 부실상각('07~'10년)

(10억달러, %)	미 국	유 로	영 국	기타유럽
보유자산(A)	12,561	22,901	8,369	3,970
추정손실(B) (손실률, B/A)	885 (7.0)	665 (2.9)	455 (5.4)	156 (3.9)
기상각(C) (상각률, C/B)	680 (76.8)	415 (62.4)	355 (78.0)	82 (52.6)
추가상각필요액	205	250	100	74
자본금확충	329	256	22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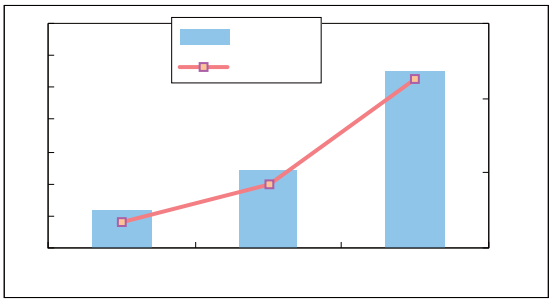
자료 : IMF GFSR('10.4월)

참고 Ⅱ >

유로지역 은행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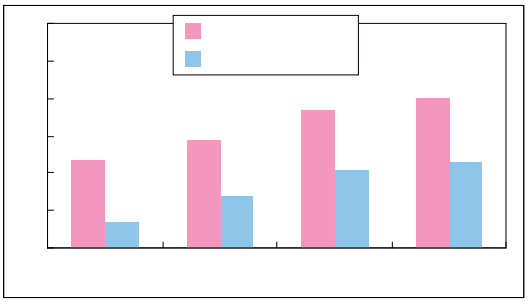
유로지역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지원과 자본확충으로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 등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 이후 발생한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이 부진하고, 남유럽 재정불안에 따른 보유국채 부실 우려, 경기여건 둔화에 따른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유로지역 대형은행 수익성



자료 : ECB FSR('10.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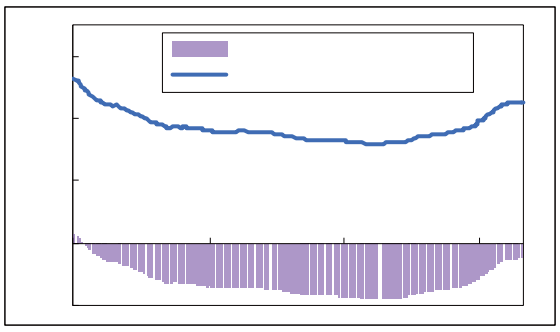
유로지역 대형은행 자본적정성



자료 : ECB FSR('10.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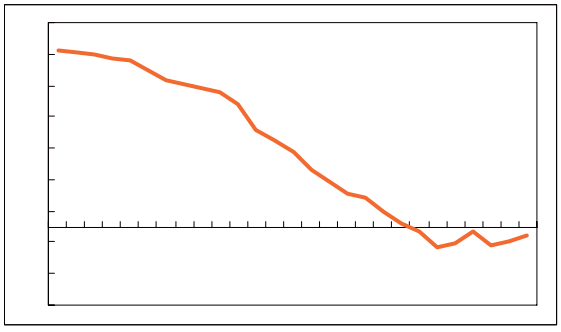
은행들의 영업도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부실 우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커지면서 2010년 5월 이후 유리보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은행간 자금조달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그에 따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존이 아직 큰 상황이다. 운용 측면에서도 경기부진으로 인해 은행권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ECB 예치금으로 환류되는 등 금융중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중앙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ECB의 통화완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의 실적악화 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Euribor-기준금리 간 스프레드



자료 : Bloomberg

유로상업은행 민간신용 증가율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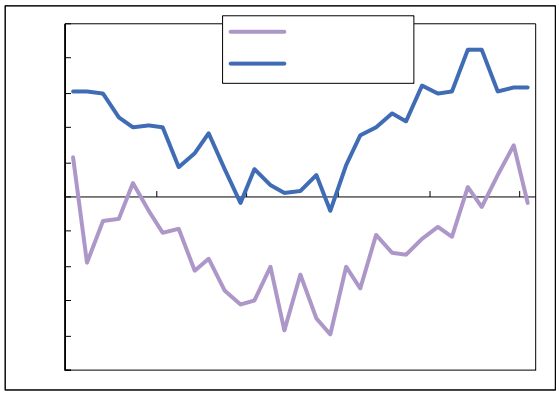
ECB의 유로지역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7.23일) 대다수 은행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장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만기보유 국채의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에 따라 은행권 보유국채의 90%가 무위험자산으로 처리되는 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유럽 은행권 부실 가능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다.

참고 Ⅱ >

세계 석유수급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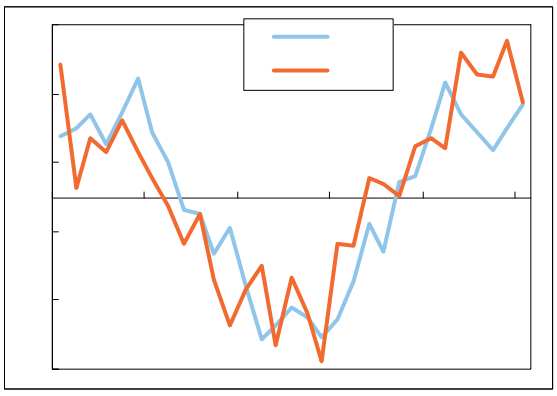
전세계 석유생산과 소비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2009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석유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경우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석유수요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국제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13)]

OECD국가 석유소비 증가율



자료 : 석유공사(페트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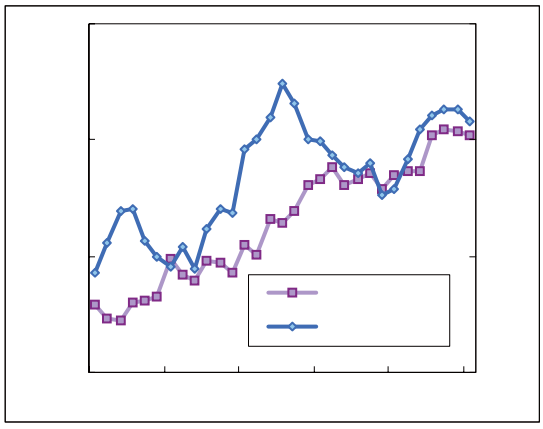
전세계 석유생산·소비 증가율



자료 : 석유공사(페트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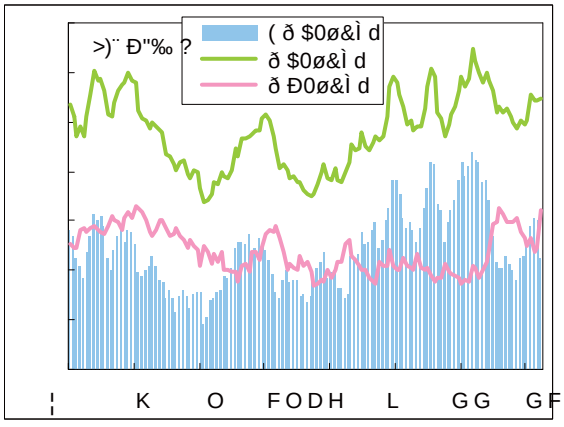
다만, 석유재고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유에 대한 투기성자금의 유입이 7월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아직 2009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세계 석유재고



자료 : 석유공사(페트로넷)

원유시장 투기성 거래 동향



자료 : CFTC, NYM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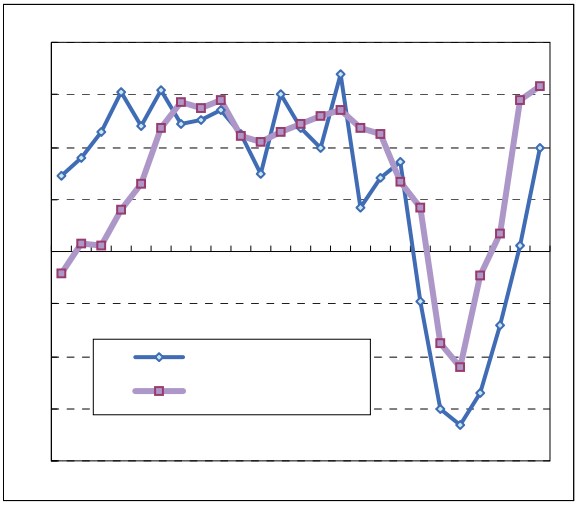
13) IEA 세계석유수요 전망(백만B/D, '10.6월) : ('10)86.4 ('11)87.7 ('12)88.9 ('13)90.0 ('14)90.1

2. 국내경제 여건

민간소비는 소득보다 낮은 증가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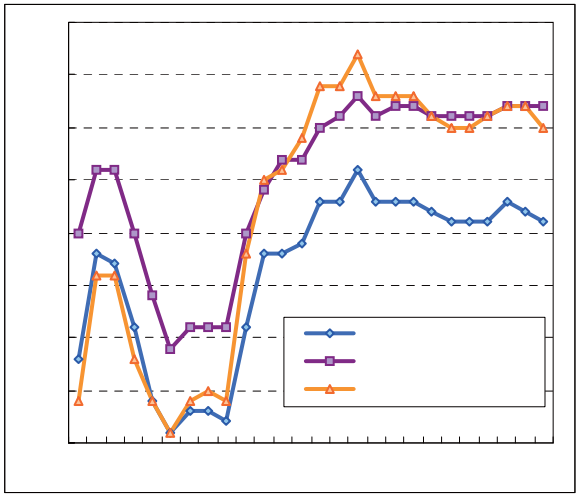
2010년 3월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가계소득과 명목임금도 2009년 4/4분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과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초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크게 하락했던 주식시장이 기업실적 개선과 외국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민간소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심리지수(CSI) 역시 2009년 8월 이후 11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소비여건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Ⅱ-3> 실질구매력과 민간소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Ⅱ-4>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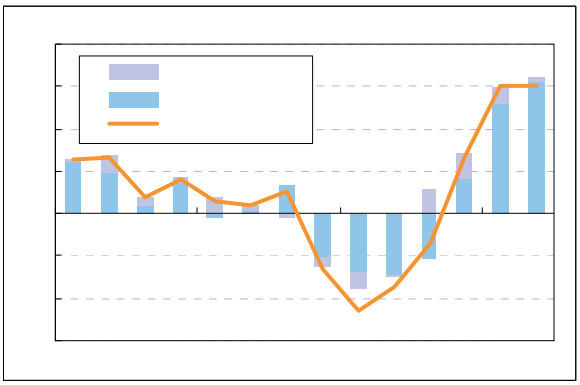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다만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위축 등이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금리 상승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소비여력이 제약될 소지가 있다. 부동산이 가계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동산가격 하락시 자산소득의 감소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원유·철강 등 원자재 및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설비투자 회복세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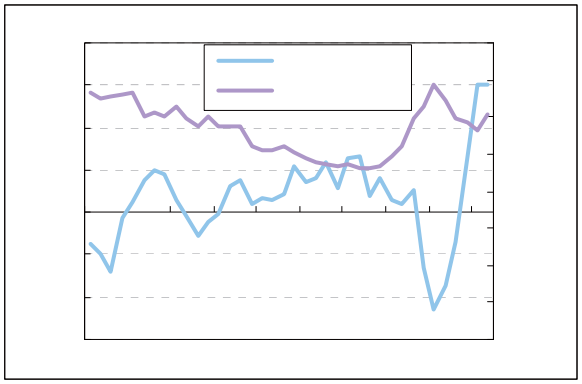
설비투자는 기업실적과 주요업종의 경기 개선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과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반도체 등 기계류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투자여력이 커지고 있고, 환율안정으로 자본재수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전망지수(BSI)도 금년 들어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5> 설비투자 부문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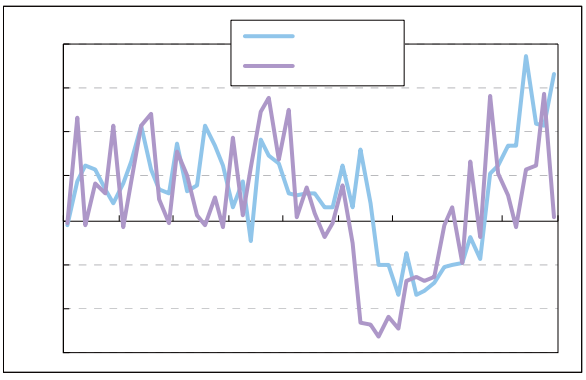
<그림 Ⅱ-6> 환율 및 설비투자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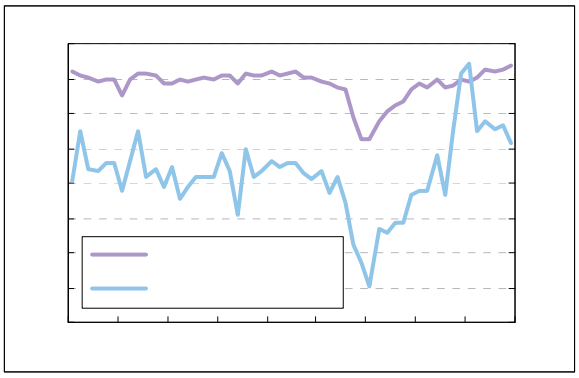
설비투자의 주요 선행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10년 1/4분기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위기이전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점차 설비투자 수요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작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비 설비투자 증가율은 하반기에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폐지(8.24일 발표)됨에 따라 투자가 금년 하반기로 앞당겨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업들의 보수적 투자성향이 강화되면서 투자회복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림 Ⅱ-7> 기계류수입 및 기계수주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그림 Ⅱ-8> 설비투자 조정압력 및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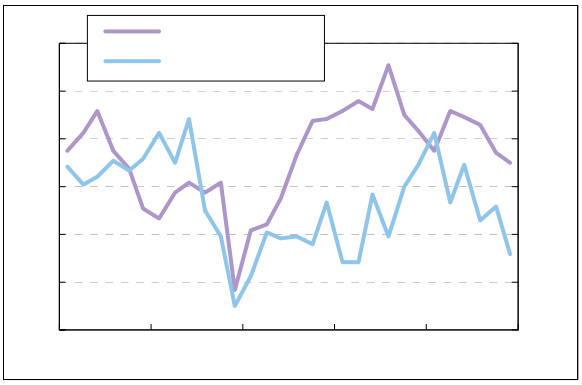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건설투자 부진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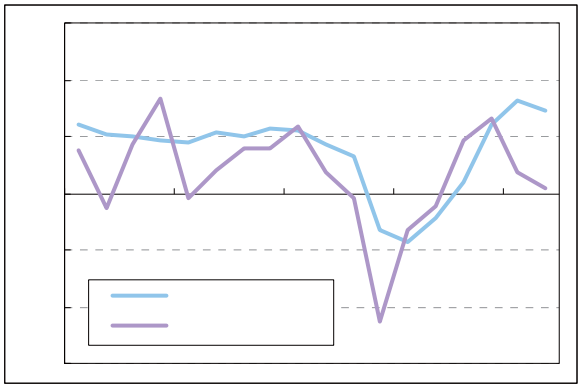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의 위축이 지속되고 토목건설이 축소되면서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거용 건물건설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2011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착공이 본격화되면 공공부문이 일부 보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되겠으나, 상업용 건물의 높은 공실률, 일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차질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Ⅱ-9> 건설기업경기전망과 주택건설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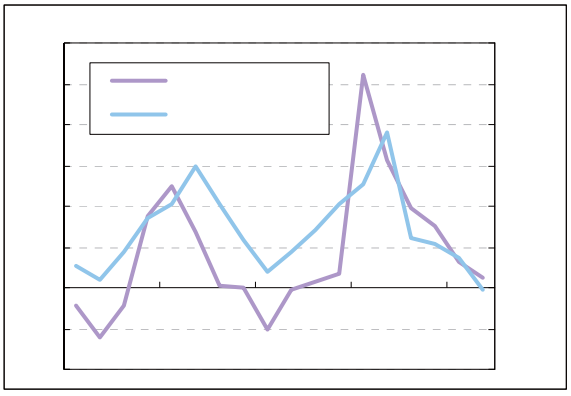
<그림 Ⅱ-10> GDP와 비주거용 건설투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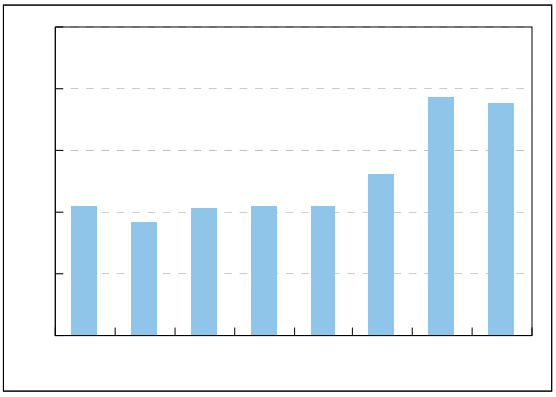
토목건설은 그간 4대강 사업,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대형 SOC 사업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으나 2010년 하반기 들어서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로 투자여력이 줄어들면서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지표인 토목건설수주도 금년 들어 전년동기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Ⅱ-11> 토목 건설과 수주 동향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Ⅱ-12> SOC 예산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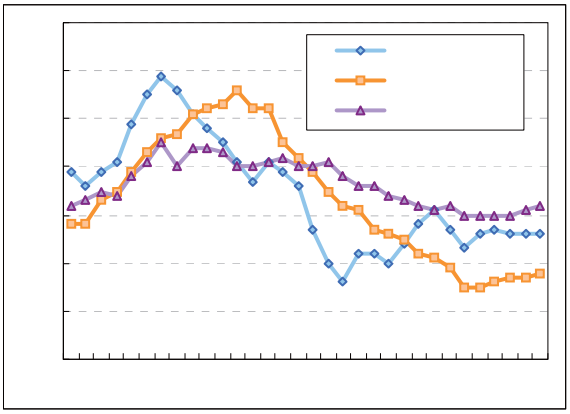
물가압력 소지가 있으나 급등가능성은 제한적

총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가 2010년 1~8월중 1%대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및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국내 총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물가압력이 나타날 소지가 있지만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석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확대는 향후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비용의 선행지표인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2010년 2/4분기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금년 들어 이상기온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농산물 가격은 본격적인 수확시기가 돌아오고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 급등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후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기상상황에 따라 향후에도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09년 하반기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금년에는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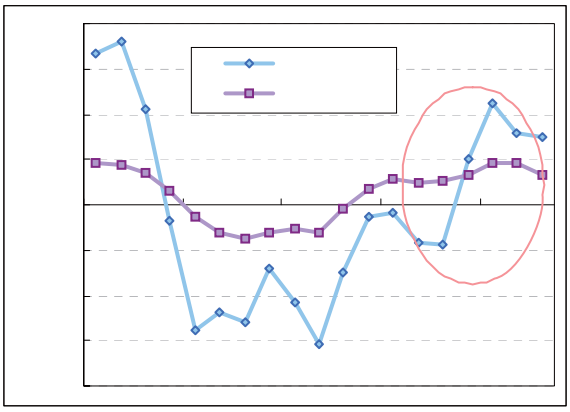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임금상승과 총수요 증가를 통해 물가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임금은 2009년 4/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시차를 두면서 점차 인플레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환율의 향방에 따라서는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Ⅱ-13>
근원물가 및 기대인플레 동향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Ⅱ-14>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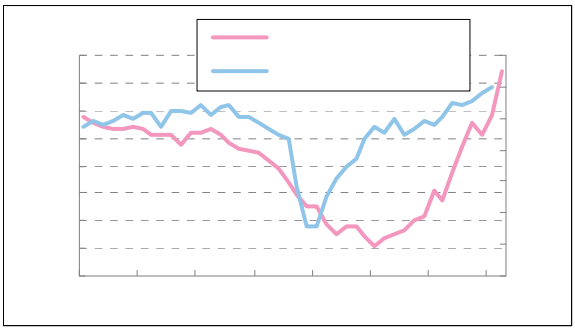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민간부문 중심의 고용회복 전망

2010년 하반기 이후에도 전반적인 고용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09년 중 위기극복 과정에서 늘어났던 정부 일자리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공공부문 취업자는 감소하겠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민간부문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고용개선을 견인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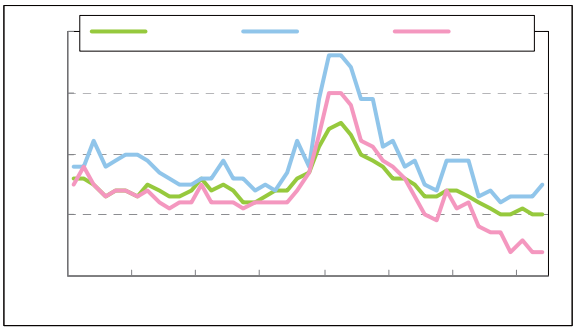
민간부문 고용시장은 전체적으로 회복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위기 전 평균 수준인 80%를 상회하고 있고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의 인력부족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구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폭이 컸던 2010년 2/4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연간 30만명 수준의 고용 증가세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Ⅱ-15> 제조업 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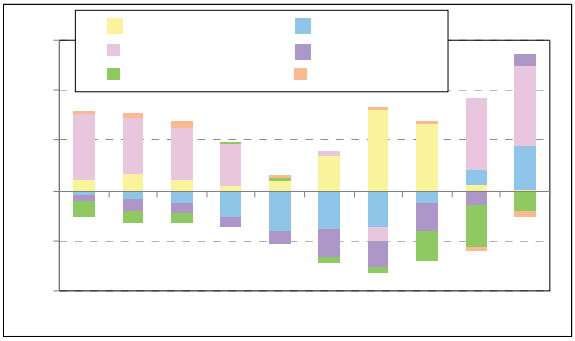
<그림 Ⅱ-16> 기업 인력사정 전망 BSI[14]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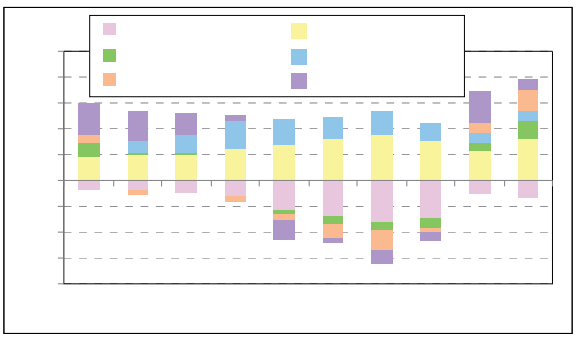
산업별·부문별로는 일부 부진한 모습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민간부문 고용회복을 이끌었던 민간서비스업에서는 구조조정 압력 등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업은 기저효과로 2010년 2/4분기 중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유사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림 Ⅱ-17> 산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Ⅱ-18> 민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4) 기업 인력사정 전망 BSI는 기준치(100)를 상회할 경우 인력이 충분함을 의미하고, 하회할 경우는 기업들이 앞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지속

금융시장은 예기치 않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기가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금융기관도 그동안 부실채권 처리와 자본확충 노력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해 왔으므로 어느 정도의 충격은 흡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클 것으로 보인다.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비상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일시상환형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의 건전성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 신용위험 평가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부분적인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고, 경제실적이 양호한 신흥국으로의 국제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환수급은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중국의 경제회복 추이, 남북관계의 전개,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다변화 움직임 등 대외 불확실 요인이 큰 상황이므로 일시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추세가 지속될 경우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감소로 글로벌 달러약세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두바이 월드 사태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새로운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Ⅱ-3> 신흥시장* 자금유입 전망

(단위 : 억달러)	2010년	2011년
순 민간자금 유입	7,086	7,464
지분투자자금(직접+포트폴리오 투자)	5,288	5,683
신용공여자금(상업은행+비은행)	1,798	1,781

* 중국, 브라질, 인도, 한국 등 IIF가 선정한 30개 국가
자료 :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IIF, '10.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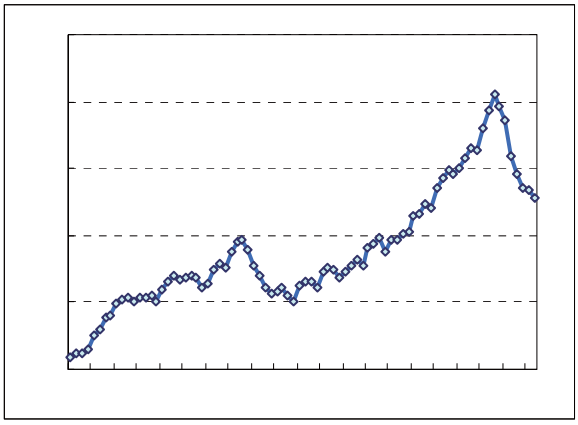
3. 평가 및 전망

경기회복 및 고용 증가세 지속 예상

2010년 상반기의 빠른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재정조기집행의 영향 등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겠으나,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둔화 조짐과 작년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용개선과 제조업 가동률 상승 등으로 소비 및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했던 재고가 하반기 중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성장률(전기대비 1.4%)이 당초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2010년 중 정부가 전망한 5.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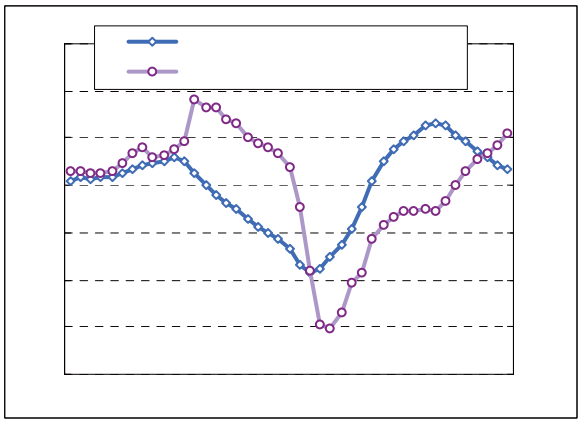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유럽은 아직 재정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부동산시장 위축이 다소간 이어질 소지가 있고, 향후 개인서비스 요금과 소맥 등 국제곡물가 상승이 물가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상승 국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경기선행지수가 기저효과에 따른 왜곡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4/4분기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15)]

<그림 II-23> 재고 수준



자료 : 한국은행
* 1990년 이후 국민계정 재고증감의 누적치

<그림 II-24> 경기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15) 2010년 상반기 중의 경기선행지수 하락은 전년도 선행지수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며 향후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Ⅲ 거시경제의 단기 위험요인

1. 거시경제 위험요인 개관

거시경제의 안정은 단기적 변동성의 완화와 장기적 성장추세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은 수요·공급 충격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제의 각 부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동태적 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외부 충격이 매우 크거나 특정 부문에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순환변동의 수준을 넘어서는 변동이 발생하면서 성장 및 소득 감소 또는 버블 형성 등의 형태로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와 경로별 취약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화 및 위기관리 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현재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대외, 금융, 부동산, 노동 및 국제원자재 등 5개 부문에 대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도 동일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추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입요소, 기술, 경제관행·제도 등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등 다양한 요인의 중장기적 변동양상을 분석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에 따른 성장·고용 및 재정에 대한 부담이 주된 위험요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보면 우리경제의 건전성은 대체로 개선된 모습이다. 대외부문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단기외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외환건전성이 호전되었고, 금융부문은 가계·기업·금융기관 등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다. 노동부문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가시화되면서 2009년에 비해 개선이 뚜렷한 모습이다. 국제원자재 부문도 일부 곡물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부문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거래위축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되었던 작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Ⅲ-1)

우리경제의 단기 위험요인을 보면, 대외부문의 경우 우선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로 지속 유입되고 있는 해외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로 반전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 유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외채 만기구조 등 외환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경우 국내 경제성장이나 경상수지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주요국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교역조건의 변화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단기유동성이 특정분야로 쏠리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향후 금리변동시 가계나 기업 또는 금융기관 부실 증가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유사시 연쇄도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동산경기의 위축이 장기화되는 경우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대한 관망세 지속 등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가 다소 늦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문에서는 청년 등 취약부문의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원자재와 관련해서는 최근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는 곡물 등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물가나 생산비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먼저 경제구조의 성숙과 인구고령화에 따라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응하여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응하여 제도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 잠재적 재정부담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소득분배 악화 및 부문간 격차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기반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녹색기술 경쟁 및 자연재해 증가 가능성 등에도 대비해 나가야 한다.

참고 Ⅲ >

최근 조기경보시스템 운용현황

조기경보시스템(EWS)은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체계로, 1999년 대외부문 EWS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5개 부문, 10개 세부부문을 대상으로 운용 중이다. 각 부문별로 시스템 안정성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을 종합하여 경보지수를 산출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5개 경보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EWS 구성 및 주관부처>

부문(5)	세부부문(10)	주관부처
대 외	대외	기획재정부
금 융	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원자재	석유, 기타원자재, 곡물	지식경제부 / 농림수산식품부
부동산	주택, 토지	국토해양부
노 동	고용, 노사관계	노동부

지난 1년간('09.8월~'10.7월) 주요 부문별로 경보등급 추이를 살펴보면, 대외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된 이후 '정상' 수준을 지속하다가 최근 유럽 재정리스크 부각 및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약화 등으로 '관심' 수준으로 위험등급이 상승한 상황이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1년 전에는 '주의' 수준으로 주택가격 상승 위험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보등급이 '관심'으로 전환되었다. 1년 전 10개 세부부문 중 가장 높은 경보등급(경계)을 보였던 고용부문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관심' 수준으로 위험도가 하락하였다.

EWS는 계량모형의 특성상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는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EWS가 미국 경제의 위기가능성,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정책제언 등을 감안하여 금년 초부터 EWS에 대해 모형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16] EWS 모형의 위험인지력 제고를 위해 유의성이 떨어진 지표를 현실설명력 높은 변수로 대체하고, 평균화 경향이 있는 종합지수를 보완하기 위해 핵심지표만으로 구성된 지수, 하위부문별 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 중이다. 특히, 대외부문의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일별 지표로 구성된 보조지수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학계·관련업계 등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비계량적 위험요인 등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실시하는 등 정성적 분석기능을 강화했으며, 향후 부문간 연계효과 분석 및 종합 평가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16) 김성식의원, 「경제위기조기경보시스템의 개선방안」, 2009 국정감사 정책연구시리즈③('09.9월)

2. 대외 부문

주요 지표를 통해 대외부문의 위험요인 동향을 평가해 보면, 리먼사태 직후 크게 악화됐던 실물·금융 여건은 2009년 2/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동반 개선되면서 자본수지가 2009년 2/4분기부터 2010년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 유입초를 나타냈다. 교역조건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면서 경상수지가 2009년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대외채무, 외환보유액 등 외환건전성 관련 지표들도 나아졌다.

그러나, 2010년 2/4분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CDS 프리미엄, 외평채 가산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진 상황이며, 교역조건이 다시 악화되는 등 실물부문의 불확실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재연 가능성,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여부, 단기외채 및 외환건전성 수준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Ⅲ-1> 대외부문 주요지표 동향

	2007	2008	2009				2010	
			1/4	2/4	3/4	4/4	1/4	2/4
국제유동성								
TED 스프레드[17](기간평균, bp)	84.0	154.8	103.9	68.6	26.0	21.7	15.5	29.2
美 회사채 스프레드*(기간평균, bp)	114.1	260.2	374.4	328.6	224.8	179.5	156.5	159.3
EMBI+[18](기간평균, bp)	190.1	383.1	656.2	492.3	374.7	307.32	281.9	293.7
외화유동성								
한국 CDS 프리미엄**(기간평균, bp)	24.7	165.3	364.4	215.2	140.6	94.6	94.5	110.5
외평채 가산금리***(기간평균, bp)	73	257	355	294	217	137	108	116
자본수지/GDP(%)	0.7	-5.4	-0.8	4.2	6.5	2.0	2.5	-1.9
실물부문 여건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14.1	13.6	-25.2	-21.1	-17.6	11.7	35.8	33.1
교역조건 상승률(전년동기비, %)	-2.5	-13.8	5.1	11.1	11.6	14.4	0.5	-3.9
경상수지/GDP(%)	0.6	-0.6	5.1	6.4	4.7	4.3	0.6	4.1
외환건전성								
총외채/GDP(기간말, %)	36.5	40.6	54.3	46.1	44.8	41.1	44.3	40.7
단기외채/총외채(기간말, %)	41.8	39.7	40.3	38.9	37.1	37.3	37.6	37.3
단기외채/외환보유액(기간말, %)	61.1	74.5	71.4	63.6	58.0	55.5	56.7	55.5

* 美 회사채 A등급 10년물 기준, ** 5년물 기준 *** '14.9월물 기준

17) TED(Treasury-EuroDollar) 스프레드 : 미달러화 3개월 Libor와 미 국채 3개월물 수익률간의 차이로서 신용경색이 심할수록 스프레드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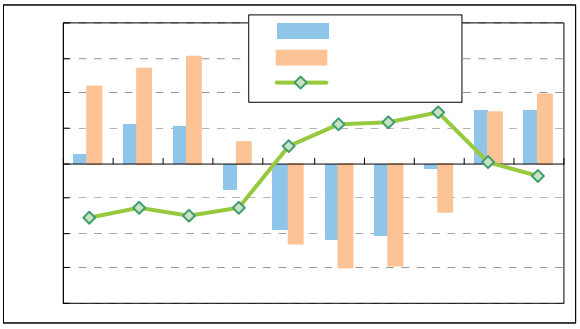
18)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Plus) : JP Morgan이 집계·발표하는 채권지수로 신흥시장 19개국의 90여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자산 선호가 커질수록 상승한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

경기회복과 함께 저축-투자갭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가 상품수지 흑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 주요국 경제의 둔화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LCD 등의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취약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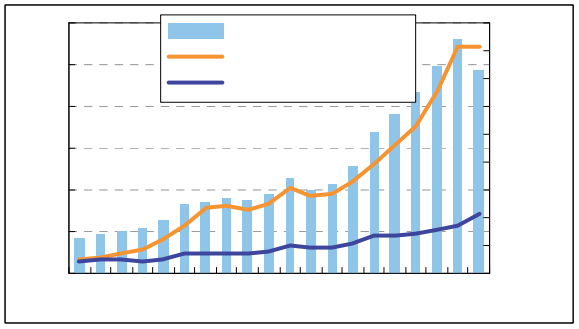
서비스수지는 2000년대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여행수지는 소비회복과 환율안정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업서비스도 법률·회계·광고 등에 대한 해외서비스 이용 증가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70% 이상이 이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특허권사용료 수지 적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서비스와 특허권사용료수지 적자는 수출과 생산이 증가됨에 따라 지급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적인 측면이 커 향후에도 서비스 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
수출·수입단가 및 교역조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Ⅲ-2>
수출과 사업서비스·특허권사용료 지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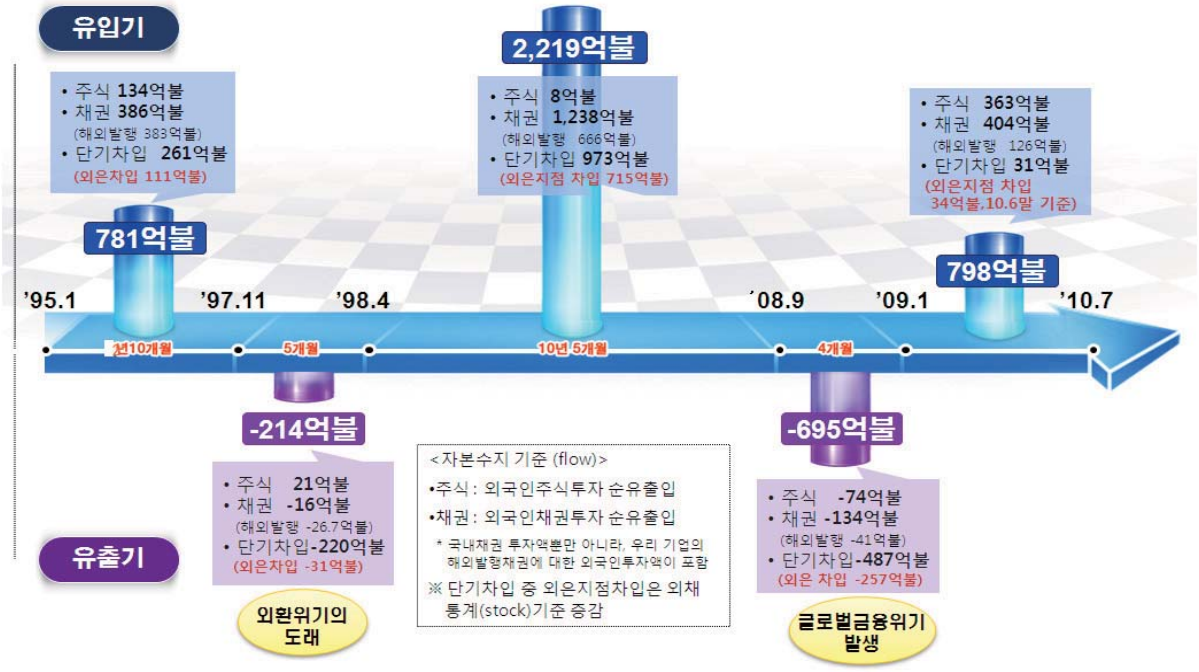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외환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경상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출상품의 품질향상과 함께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핵심기술의 국산화율 제고 등을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자본유출입 급변동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어 감에 따라 2009년 1/4분기 이후 우리나라로의 자본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위기 기간인 2008년 9월~2009년 12월중에는 자본수지 기준으로 총 695억불이 순유출되었으나,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과 해외차입 재개로 자본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2009년 1월~2010년 7월 중 총 798억불의 해외자본이 순유입되었다. (참고 Ⅲ-2)

<그림 Ⅲ-3> 자본 유출입 현황



최근의 자본유입은 국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국내경제의 빠른 회복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미국경제 둔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재현되면서 국제 자금흐름이 갑자기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8월 들어 유럽 및 미국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다소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흐름을 이어갈 경우 해외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병존하고 있다.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투기성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경우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둔화, 자산버블, 외채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유입된 자금이 유사시 급격히 유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커지게 되므로, 자본 유출입 및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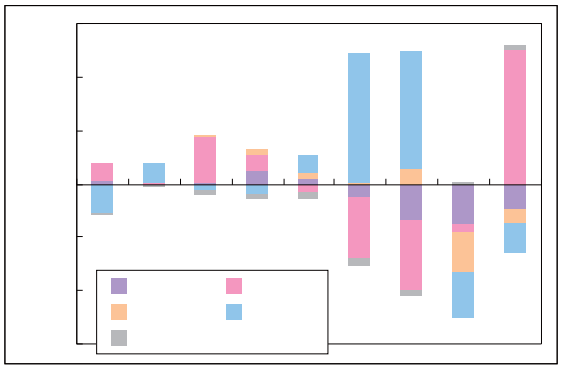
최근 자본유출입 동향 및 특징

우리경제의 높은 대외개방도 등으로 인해 그간 자본유출입은 큰 폭의 변동성이 지속되어 왔다. 2008년에는 글로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에 따라 자본수지가 사상 최대의 유출(501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글로벌 위기 이전에 대규모로 유입되었던 은행 단기외채의 차환이 중단되면서 2008년 10월~2009년 3월 동안 외채상환 형태로 국내은행에서 271억달러, 외은지점에서 285억달러가 유출되었다. 2009년에는 국제금융시장 회복 및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론 확산 등에 힘입어 외국인 증권투자 등 자본유입이 재개됨에 따라 자본수지가 순유입(265억불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2010년 들어서도 자본유출입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금년 7월까지 자본수지 항목별 추이를 살펴보면, 증권투자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및 천안함 사건으로 시장불안이 나타났던 5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순유입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기타 투자수지는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 따라 은행부문(외은지점 포함)을 통한 단기차입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대규모 순유입과 순유출을 반복하였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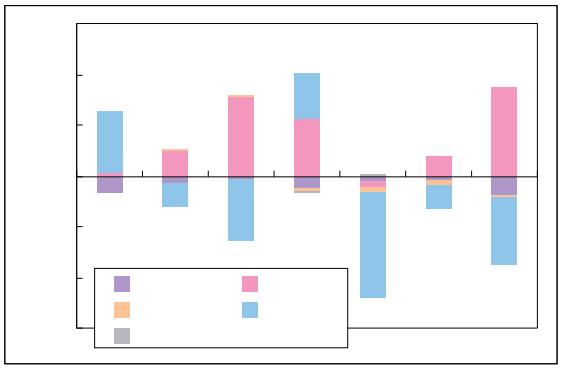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세,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 등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증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자본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2001~2009년 연도별 자본수지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월별 자본수지



자료 : 한국은행

19) 예금취급기관의 단기차입 순유입규모(억달러, 국제수지 기준)
('10.1월) 55.9 → (2월) -5.8 → (3월) -15.3 → (4월) 56.3 → (5월) -87.9 → (6월) 24.4 → (7월)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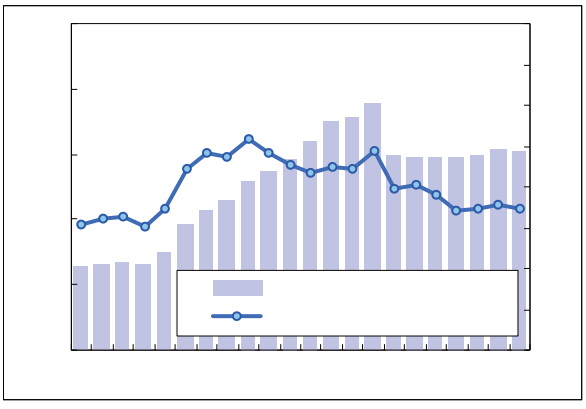
외환건전성 악화 소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경제는 단기외채가 많은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들이 자금을 급격하게 회수함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국내 은행·기업의 해외차입 등을 통해 외화자금 유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유입된 자금이 향후 유출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외채 만기구조나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비율 등 외환건전성을 미리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의 외환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외채구조와 관련한 지표가 상당폭 개선되었다. (참고 Ⅲ-3)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조선업체 및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도 헤지와 관련하여 국내은행의 해외 단기차입이 크게 늘어났던데 반해, 최근에는 조선시장 불황 등으로 신규 선물환 헤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앞으로 단기외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2006~2008년 중 조선업체 수주량이 많았던 시기에 거래되었던 기존 선물환 매도분의 만기가 점차 도래하면서 그와 연계되어 들어왔던 외채가 함께 상환될 것이라는 점도 외채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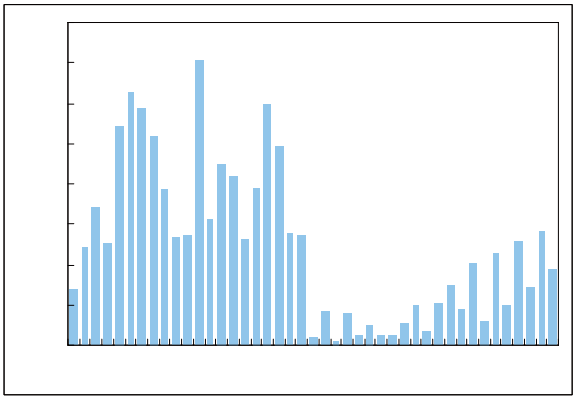
다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로 인해 단기외채가 증가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Ⅲ-4) 투자자금의 구성과 내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채권자금의 유입속도가 빠르고 향후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시행으로 인해 은행의 해외차입이 제약을 받을 경우 자금유입이 채권투자 형태로 전환되어 나타날 소지도 있으므로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라 국내 외화자금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림 Ⅲ-4> 단기외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Ⅲ-5> 조선수주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참고 Ⅲ >

외채건전성 수준에 대한 평가

나라마다 경제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채의 규모나 장단기 구조 등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환능력과 외채관련 건전성 지표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외채규모 및 구조는 대체로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단기외채는 2008년 9월말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08.4/4분기중 -397억달러, -20.9%)한 이후 2009년중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10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하여 6월말 현재 1,521억달러 수준이다. 외채 건전성 지표도 최근 소폭 나빠졌으나 글로벌 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월말 44.5%에서 2010년 6월말 37.3%로 크게 감소했고, 유사시 우리경제의 외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같은 기간에 79.1%에서 55.5%로 개선되었다.

외채 건전성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억달러, %)

	'07년말	'08.9월말	'08.12월말	'09.12월말	'10.3월말	'10.6월말
총외채	3,832	4,261	3,779	4,019	4,112	4,074
단기외채	1,602	1,896	1,499	1,500	1,545	1,521
단기외채/총외채	41.8	44.5	39.7	37.3	37.6	37.3
단기외채/외환보유액	61.1	79.1	74.5	55.5	56.7	55.5

자료 : 한국은행

다만, 우리나라의 외채건전성 지표는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신흥국가에 비하면 소폭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리경제의 대외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글로벌 위기 당시 단기외채 상환 과정에서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시장반응이 민감했던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건전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외채 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 %)

	영국	일본	말련	한국	태국	호주	칠레	터키
단기외채/총외채	70.1	65.5	41.1	37.3	34.9	29.3	23.1	18.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7,707	133	33	56	18	736	67	66

자료 : IMF, World Bank('09년말 기준)

참고 Ⅲ >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동향 및 평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후 2008년 리먼사태를 전후로 일시적으로 유출되기도 했으나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에 따라 2009년 이후 다시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비중은 2006년말 0.6%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6.8%로, 국채 보유비중은 같은 기간 중 2.0%에서 1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상장채권 보유잔액 및 비중

(조원, %)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3월말	10.6월말	10.8월말
보유잔액	4.6	38.4	37.5	56.5	61.8	67.8	74.7
보유비중*	0.6	4.6	4.3	5.6	5.8	6.3	6.8

자료 : 금융감독원, * 채권 상장잔액 대비 비중

외국인 채권투자의 내용도 개선되고 있다. 리먼사태 이전에는 재정거래 차익을 겨냥한 거래가 많았으나,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점차 국내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정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그룹별 보유비중을 보면, 외국 중앙은행, 글로벌 채권펀드 등 중장기 안정투자 성향의 투자자 비중이 2007년말 24%에서 2010년 7월말 51%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채권의 잔존만기도 1년 미만의 단기채권 보유비중이 감소하고 1년 이상 채권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외국인 보유채권의 잔존만기

(%)

	08년말	09년말	10.3월말	10.6월말	10.7월말	10.8월말
1년 미만 비중	55.2	46.9	40.2	35.6	34.9	33.4
1년 이상 비중	44.8	53.1	59.8	64.4	65.1	66.6

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금리안정과 외화유동성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보유비중이 커짐에 따라 유사시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우리경제가 외부충격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진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유럽 재정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의 국채보유 비중이 높을 경우 국가신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20]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실한데다 아직 외국인 보유비중이 작고 투자자 구성도 양호한 상황이므로 외국인 채권보유가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므로 투자주체,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 주요국의 외국인 국채보유 비중(%, '09년말) :
(한국) 8 (그리스) 67 (스페인) 60 (포르투갈) 75 (미국) 48 (독일) 54 (일본) 5

3. 금융 부문

금융시장은 2010년 들어 남유럽 재정불안, 천안함 사건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견조한 실물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주요 금융지표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대출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금융회사들도 자본충실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으로 경영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다만, 남유럽국가의 재정불안,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잠재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관련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시중 유동성 상황, 위기시 취해졌던 비상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취약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화,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경영실적 악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추세 지속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2> 금융부문 리스크관련 주요 지표

	'07년	'08년	'09년				'10년		
			1/4	2/4	3/4	4/4	1/4	2/4	8월
금융시장									
M2 증가율(%)	11.2	14.3	11.5	10.1	9.9	9.8	9.4	9.5	8중반
은행수신(기간말,조원)	857.0	961.3	978.4	991.7	1,021.1	1,007.5	1,024.0	1,044.6	1,044.9
CD금리(기간말, %)	5.82	3.93	2.43	2.41	2.75	2.86	2.78	2.46	2.66
국고채(3년,기간말, %)	5.74	3.41	3.94	4.16	4.39	4.41	3.89	3.86	3.55
은행대출금리(기간중 평균, %)	6.55	7.17	5.66	5.43	5.65	5.85	5.82	5.40	-
KOSPI지수(기간말, p)	1,897	1,124	1,206	1,390	1,673	1,683	1,693	1,698	1,743
가계 및 기업부문									
예금은행가계대출(기간말,조원)	363.7	388.6	391.6	399.5	404.2	408.6	409.3	417.9	420.3
(주택담보대출)	220.8	238.8	246.4	253.5	259.3	264.2	267.2	273.2	275.1
예금은행가계대출연체율(기간말,%)	0.6	0.6	0.7	0.6	0.6	0.5	0.5	0.6	-
은행 중기대출(기간말,조원,금감원)	370.0	422.4	435.5	441.9	447.7	443.5	446.1	446.3	-
중기대출연체율(기간말,%)	1.0	1.7	2.3	1.9	1.7	1.1	1.6	1.5	-
금융기관 건전성									
BIS비율(은행,%)	12.31	12.31	12.94	13.74	14.21	14.37	14.70	14.27	-
부실채권비율(은행, 고정이하,%)	0.7	1.1	1.5	1.5	1.5	1.2	1.5	1.9	-
일반은행예대율(기간말,CD포함시)	104.4	101.6	101.0	98.7	97.9	97.2	94.8	93.6	-

유동성 수준 및 쏠림현상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의의 유동성 지표(M1)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의의 유동성 지표(M2)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M2가 여전히 9%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M1의 증가율이 기저효과 등으로 10%대 초반으로 축소되면서 양 지표의 움직임이 점차 수렴하는 모습이다.

<표 Ⅲ-3>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전년동기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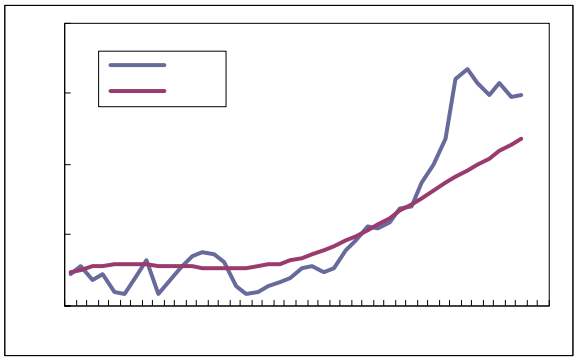
	09년					10년			10.7월 잔액
	1/4	2/4	3/4	7월	4/4	1/4	2/4	7월	
M1	10.8	17.6	18.9	18.5	17.8	14.5	10.7	11.1	403.8
M2	11.5	10.1	9.9	9.7	9.8	9.4	9.5	9.3	1,653.1

자료 : 한국은행

최근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M2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둔화되면서 명목GDP 대비 M2 비율(=마샬k)이 2010년 들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다만, 동 비율이 여전히 장기추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경우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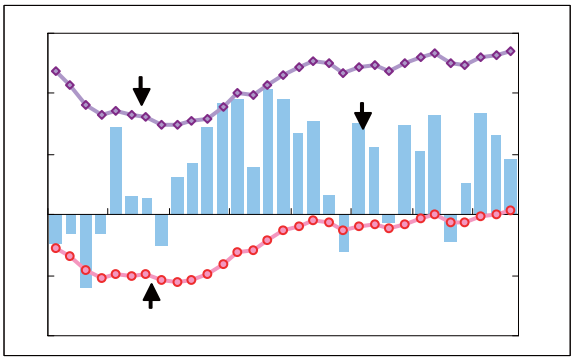
자금의 단기화 현상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위험기피 등으로 단기금융자산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단기유동성 비중(=M1/M2)이 높아졌다. 최근 들어 단기화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단기유동성이 특정 분야에 쏠리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6> 명목GDP 대비 M2 비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림 Ⅲ-7> M1증감 및 M1/M2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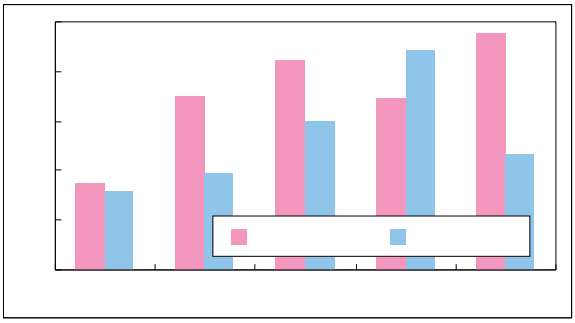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은행권 건전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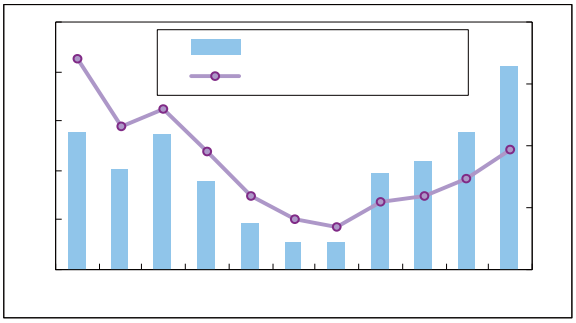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신규 부실채권 증가 등의 여파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되는 모습이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2009년말 1.24%에서 2010년 6월말 1.94%로 상승하였다.[21]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09년말 5% 수준) 등 선진국 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위기 전후 크게 증가한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림 Ⅲ-8> 신규부실 및 부실정리 규모



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그림 Ⅲ-9>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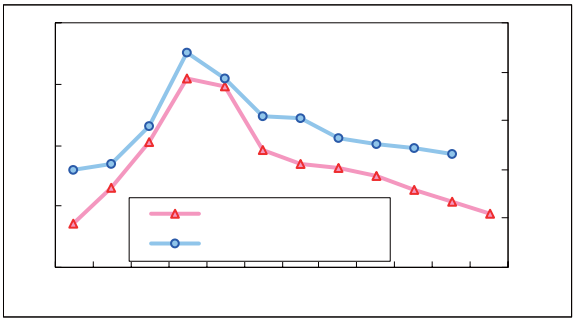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산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은행부문의 부채구조와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2010년 들어 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비중이 감소하고 정기예금이 증가하면서 예대율이 하락하는 등 자금조달 구조가 개선되었고, BIS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도 위기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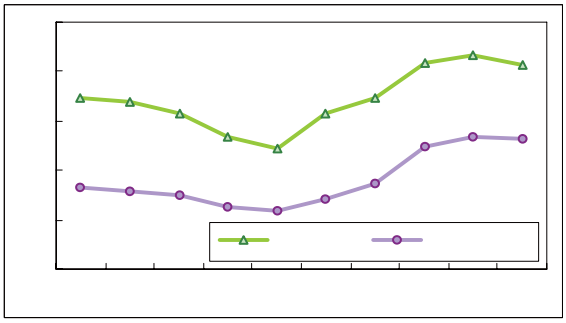
다만, 유럽 재정불안, 세계경제 둔화가능성 등 대외불안요인이 남아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금리상승, 부동산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가계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산업 재편과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부실정리와 자체 비용구조조정 등 선제적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참고 Ⅲ-5, Ⅲ-6)

<그림 Ⅲ-10> 예대율 및 시장성 수신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림 Ⅲ-11>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

21) 금년 상반기중 부실채권비율 상승은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워크아웃 채권 등 신규부실 증가(4.8조원),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 잠재부실 조기 인식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참고 Ⅲ >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현황

2010년 6월말 현재 PF금융 잔액은 금융권 PF대출 74.3조원, PF 유동화증권 22.6조원 등 총 97조원 수준이며, 최근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45조원 수준으로 전체 PF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저축은행은 11.9조원을 대출하고 있다.

PF대출의 건전성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 지속,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악화된 모습이다. 2007년말 2.7%였던 대출연체율이 2010년 6월말에는 7.5%로 상승하였다. 다만, 은행권의 PF금융은 규모는 큰데 반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보험·금융투자업 등은 건전성이 취약하나 규모가 크지 않아 부실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이 높은 부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공급을 주로 담당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 6월말 구조조정기금 등에 3.8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PF를 매각한 바 있다.

국내 PF금융은 자본금, 사업이력, 시공능력이 취약한 영세 시행사가 시공사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PF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금융회사는 사업성 평가보다는 시공사 보증 위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PF사업장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결과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부동산 PF사업의 유동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별 PF대출 현황

(조원)

		'07.12월말	'08.12월말	'09.12월말	'10.3월말	'10.6월말
은 행	대출잔액	41.8	52.5	51.0	47.9	44.9
	연체율	0.5	1.1	1.7	2.9	2.9
저축은행	대출잔액	12.1	11.5	11.8	11.9	11.9
	연체율	11.6	13.0	10.6	13.7	8.7
보 험	대출잔액	4.6	5.5	5.7	5.7	5.4
	연체율	2.8	2.4	4.5	7.6	8.0
금융투자	대출잔액	8.1	9.0	9.4	8.9	7.7
	연체율	1.3	13.8	29.3	36.6	29.2
기 타	대출잔액	4.1	4.6	4.6	4.5	4.3
	연체율	1.3	4.9	2.9	8.2	11.9
합 계	대출잔액	70.7	83.1	82.4	78.9	74.3
	연체율	2.7	4.4	6.4	9.0	7.5

참고 Ⅲ >

금융규제 개편 국제논의 동향

논의동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발견된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규제 방안이 G20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상체계,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이슈는 이미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각국이 이행 중이며, 2010년에는 (i) 건전성 규제, (ii) 대마불사(Too-Big-To-Fail), (iii)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분담방안이 핵심 과제로서 금년 중 규제방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이 중 금융권 분담방안의 경우 2010년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i) 납세자 비용부담 방지, (ii)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iii) 공정경쟁 촉진 등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도입여부 및 구체적인 형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일부국가는 구체적인 금융분담금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나, 미국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사전적립 방식의 금융안정기금 설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고, 기타 국가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등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금년부터 이를 기초로 규제영향평가(QIS; Quantitative Impact Study)를 실시하였다. BCBS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도입이 은행의 대출규모 축소 및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하여 GDP를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있으나,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에는 각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10.9월 BCBS 최고위급회의)에서 총자본비율(BIS 비율)을 현재의 8% 수준에서 경기호황기 기준으로 13.0%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 및 유동성규제 기준이 합의되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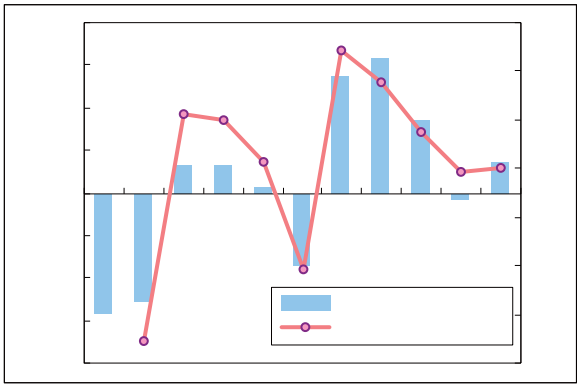
향후 전망 금융위기 재발방지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 각국의 공감대가 확고한 만큼 국제금융규제와 관련한 G20 국가간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금융분담금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도입 여부 및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 재정부·금융위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실무T/F에서 금융분담금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각국의 금융분담금 도입 동향 및 관계기관 실무T/F의 논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건전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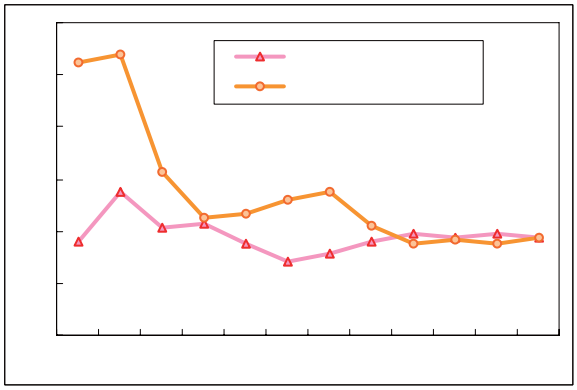
1997년말 231개였던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및 가계신용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말 104개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외형상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PF대출 편중과 같은 고수익·고위험 영업행태 등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익성은 2005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은 금융당국의 감독강화 등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은행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다.

<그림 Ⅲ-12> 저축은행 수익성지표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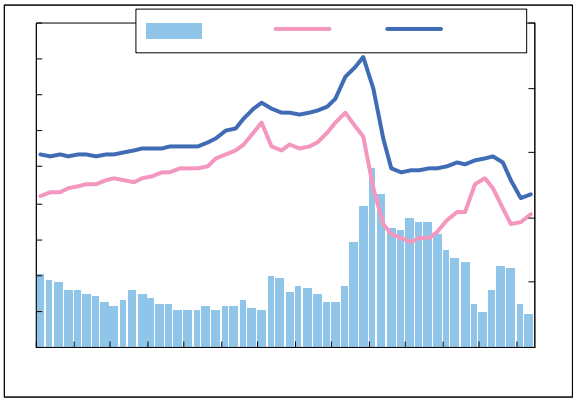
<그림 Ⅲ-13>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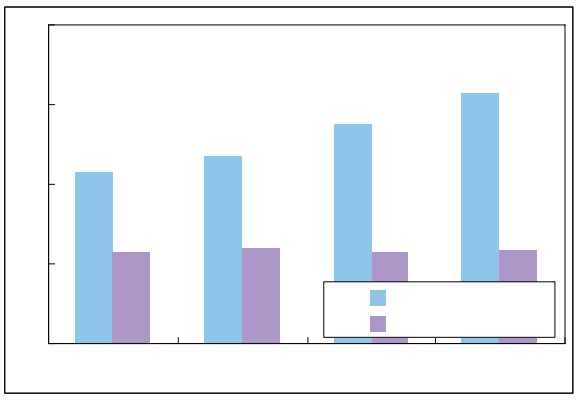
최근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건설사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은 예금보험제도(보장한도 5천만원)와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활용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에 집중 투자해 왔다. 그 결과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액이 전체 대출액의 절반을 차지하여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림 Ⅲ-14> 정기예금 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림 Ⅲ-15>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금융당국의 실태조사(10.4~5월) 결과, 저축은행 PF대출의 사업성은 부동산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말 저축은행 PF채권 12.5조원 중 30% 수준인 4조원 규모가 악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우려 PF대출 3.8조원을 매입하고 PF대출을 매각한 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22)]

<표 Ⅲ-4> 저축은행 PF대출(유동화대출 포함) 실태조사 결과 비교

구 분	사업장 기준(개)					금액 기준(억원)				
	'08.6월말		'09.12월말		증감	'08.6월말		'09.12월말		증감
정 상	447	(49.7)	177	(24.8)	-270	67,044	(54.9)	33,158	(26.5)	-33,886
보 통	263	(29.3)	248	(34.7)	-15	39,926	(32.7)	52,695	(42.2)	12,769
악화우려	189	(21.0)	289	(40.5)	100	15,130	(12.4)	39,089	(31.3)	23,959
계	899	(100.0)	714	(100.0)	-185	122,100	(100.0)	124,942	(100.0)	2,842

주 : 괄호( )는 구성비(%),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3)]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구조조정 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관련 대출에 편중된 저축은행 자산구조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부실채권 정리, 자본확충 등 자체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되,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강화와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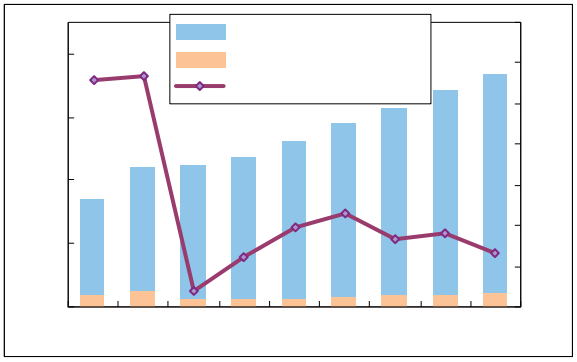
22)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대책 및 감독 강화 방안('10.6월, 금융위·금감원 등)
- 부실우려 PF대출 3.8조원을 구조조정 기금 등을 통해 매입
- PF대출을 매각한 저축은행과 자본확충 및 부실자산 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협약(1년내 BIS비율 8%이상 달성) 체결
- PF대출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자율워크아웃제도 개선 등 PF대출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23) 2010년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86.7조원으로 전금융권 자산의 3.1% 수준이다.

가계부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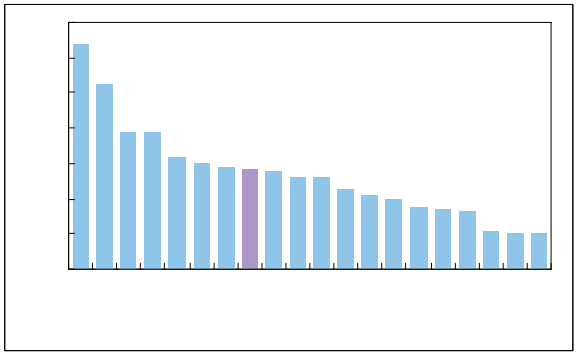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일시상환식·거치식 비중이 높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상 만기연장 등을 통해 기존 부채잔액이 상당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구입 및 생활자금 수요가 지속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08년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0%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며, 부동산대출 부실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미국 등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금융자산 축적도가 낮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높은 선호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보다 높다.[24)]

<그림 Ⅲ-16> 가계신용(가계대출, 판매신용)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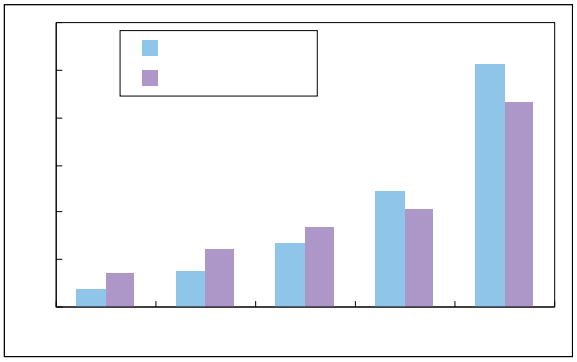
<그림 Ⅲ-17>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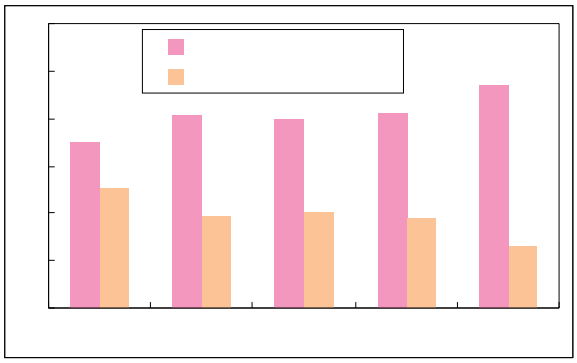
2010년 들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가계대출의 분포와 구성,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부실화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4~5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가계 위주로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그림 Ⅲ-18>
금융자산·부채의 소득분위별 보유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가계신용조사('09.3월)

<그림 Ⅲ-19>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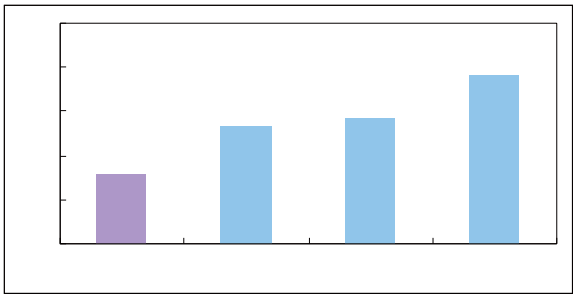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신용정보(NICE)

24)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08년말, %) : 한국 46.4, 미국 34.0, 일본 23.3, 영국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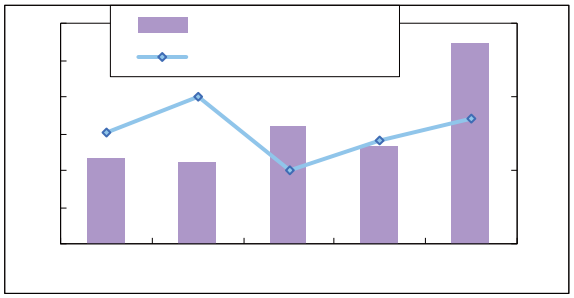
최근 들어 주택경기 부진과 금리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실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우리나라 LTV 비율은 50% 미만으로 담보능력이 양호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310%에 달하는 등 은행의 충격흡수 능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대출유동화 규모가 미미해 금융기관간 부실의 전이·확산 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0.57%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Ⅲ-20> 주요국 LTV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그림 Ⅲ-21> 은행 가계대출 건전성



자료 : 금융감독원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저소득·저자산 가계를 중심으로 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시상환형·거치형 대출의 원금상환이 개시될 경우 가계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25] 따라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장기·분할상환형 유도 등과 함께 부동산 시장과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여타 선진국과 달리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되지 않아 글로벌 위기 이후 소비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이자비용부담 등이 커져 가처분소득 및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노력과 함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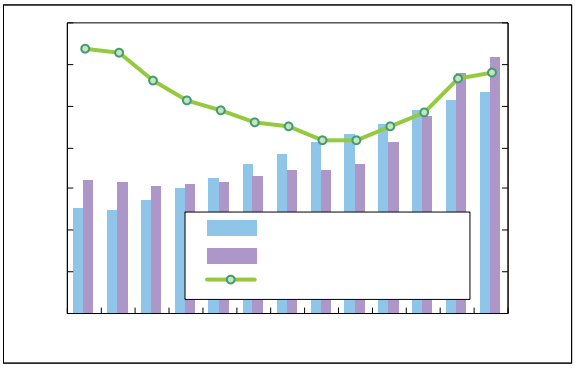
25) 2008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한국은행, '10.5월)에 따르면,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동시에 LTV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전체 부채보유 가구의 1.4% 수준이며, 금리가 1%p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고위험가구 비중은 0.5%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20%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고위험가구 비중은 0.8%p 증가하며, 분할상환이 개시되거나 일시상환 차환율이 10% 하락할 경우에는 4.0%p로 증가한다.

한편, 금감원('09.12월)은 금리 1%p 상승시 금융회사 가계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0.19%p 증가하고 0.4조원 규모의 신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2009년 금융회사 당기순익의 2.9% 수준이다.

기업부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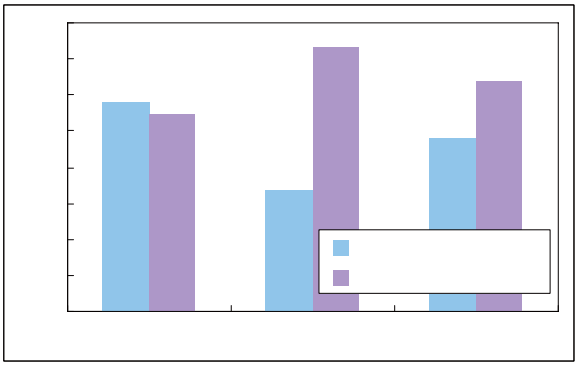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1997년 126%에서 2005년 83%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기업부채가 다시 증가하면서 2009년말 현재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16%(총 1,233조원)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개별기업 차원의 부채 비율(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내부유보 확대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참고 Ⅲ-7)

<그림 Ⅲ-22> GDP 대비 기업부채비중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그림 Ⅲ-23> 주요국 기업부채비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09년 기준(단, 미국·일본의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은 '08년 기준)

국내 기업부채는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개선, 경기회복에 따른 경영실적 개선 등을 고려할 때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부문의 높은 부채수준은 경기침체기 또는 외부충격 발생시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이 부채보다는 기업공개, 증자 등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속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금융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배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부문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확충 및 현금성자산 확대는 외부충격 흡수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거시경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부유보가 과도할 경우 경제의 역동성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적정수준의 배당을 통해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 Ⅲ >

기업부채비율 : 개별기업 비율은 낮고 국가전체 비율은 높은 이유

국가 전체의 총량적인 기업부채 수준은 자금순환표상의 비금융법인 부채를 경상GDP로 나누어 산출하고, 개별 기업차원의 부채수준은 기업경영분석상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별기업 차원의 부채비율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나, 국민경제의 총량적인 기업부채비율은 이들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개별기업 차원의 부채비율은 낮은데 국가 전체적 차원의 부채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업의 자본규모가 크거나 GDP 규모가 작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 채}}{\text{자 본}} \downarrow \qquad \text{GDP대비부채비중} = \frac{\text{부 채}}{\text{GDP}} \uparrow$$

국내기업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증자, 이익금 사내유보 확대 등을 통해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개별기업 차원의 부채비율은 크게 하락하였다.

기업부채 및 자본 구성비

(제조업, %)

	대차대조표 구성						부채비율
	자본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부채	자본+부채	
'97년	20.2	7.6	7.7	4.9	79.8	100.0	396.3
'09년	47.7	8.3	10.5	26.1	52.3	100.0	109.6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기업부채 증가율이 경상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채의 절대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기업부채 및 경상GDP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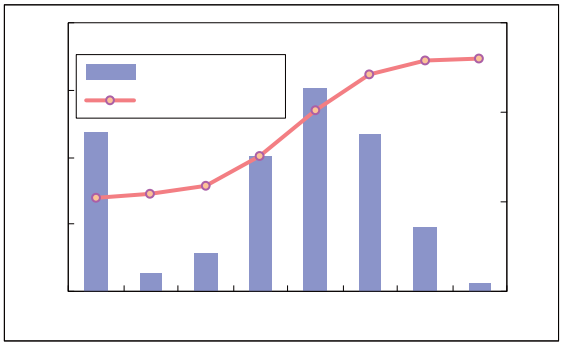
	기업부채(조원)	경상GDP(조원)	기업부채/GDP(%)
'97년(A)	644	512	127.2
'09년(B)	1,233	1,063	116.0
B - A	589 (91.5% 증가)	551 (107.6% 증가)	-11.2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

중소기업대출 부실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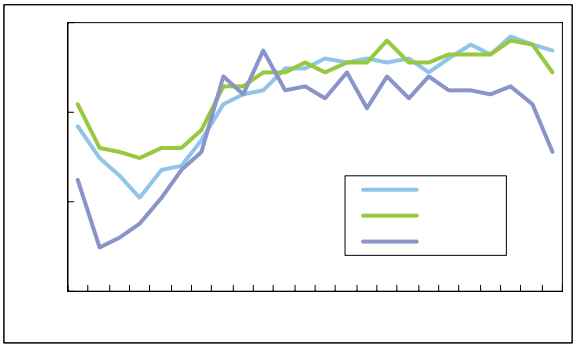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던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금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신용보증 정상화, 금융권의 신용위험 관리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6]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유현금 증가 등으로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수준이다.[27]

<그림 Ⅲ-24> 은행 중소기업 대출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그림 Ⅲ-25>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신용보증 만기연장 등 위기극복을 위해 취해졌던 비상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채권단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10.7~10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취약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대출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의 중소기업 경영실적 개선추세,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분적인 중소기업대출 부실화가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Ⅲ-5> 상장기업 중소기업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단위: %)	'07년	'08년	'09년	'10.1/4	2/4
매출액증가율	6.7	14.3	-0.2	15.7	21.1
영업이익률	3.0	4.3	4.5	4.6	5.7
부채비율	72.6	77.8	69.5	77.5	79.1
차입금의존도	22.9	24.4	22.6	24.5	24.8

자료 : 한국은행, 상장기업(금융업 제외)및 주요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1,500여개사 대상

26) 신보·기보를 통한 신용보증 공급 : 2009년 상반기 18조원 → 2010년 상반기 2.6조원
27) 중소기업 현금성 자산 : 2008년말 63조원 → 2009년말 77조원

기업구조조정 지연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에 처해 있으나 정상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Fast Track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에 나서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 분위기에 편승하여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취약업종(건설, 조선, 해운), 대기업 그룹,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2009년 이후 2년간 건설 45개사, 조선 10개사, 해운 11개사, 기타 대기업 78개사, 중소기업 512개사('09년중)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Ⅲ-6>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 현황

(단위 : 개)

	2009년			2010년			합 계
		C등급	D등급		C등급	D등급	
건 설	29	24	5	16	9	7	45
조 선	7	5	2	3	1	2	10
해 운	10	3	7	1	1		11
기타 대기업	33	22	11	45	27	18	78
중소기업	512	291	221	신용위험 평가중('10.7~10월)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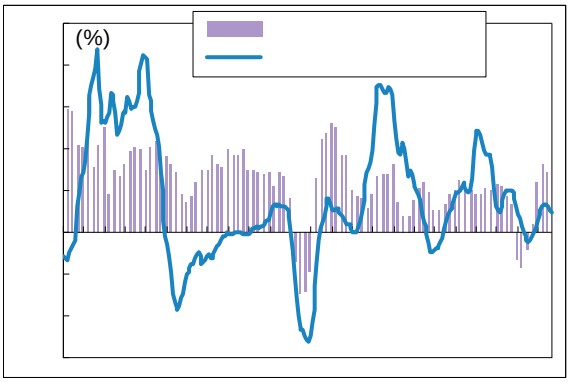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이 상장기업 10개중 3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조치의 단계적 정상화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경우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한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한계기업이 시장에 잔류하면서 과당경쟁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궁극적으로 부실을 확대시켜 고용 및 실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부문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면서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하여 결국 공적자금 조성 등 국민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4. 부동산 부문

주택시장 조정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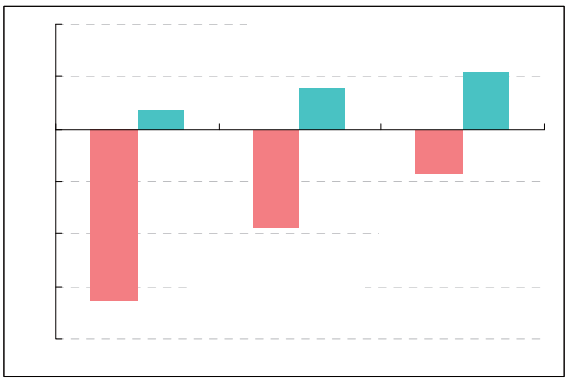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경기상황 등 주택수급과 흐름을 같이 하는 가운데 규제정책, 투자심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시장도 동반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위기 이전의 주택가격 상승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고, 위기 이후에도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침체 정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Ⅲ-8)

<그림 Ⅲ-26>
경기변동과 주택가격



자료: 국민은행, 한국은행

<그림 Ⅲ-27>
금융위기 전후 주요국 주택가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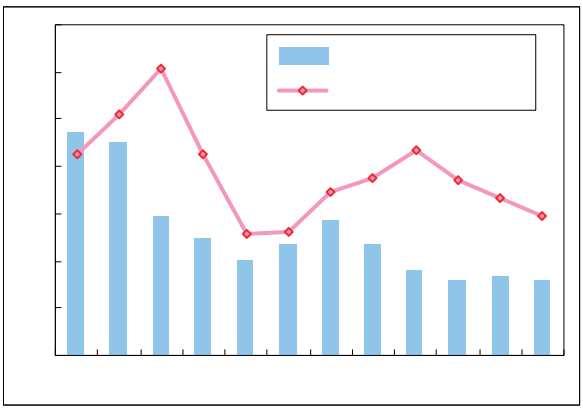


자료: 美 S&P, 英 Nationwide,
韓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이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4월 이후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의 50%수준에 그치는 등 거래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주택시장 위축은 미분양 주택이 2.8만호 남아 있고 2010년도 아파트 입주물량도 17.5만호로 최근 3년간 평균의 116% 수준을 보이는 등 주택공급이 풍부한 반면에 가격안정 기대심리로 매수심리는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Ⅲ-9) 최근의 시장상황은 2005년 이후 빠르게 상승했던 수도권 주택 가격이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28] 수도권과 달리 과거 가격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지방의 경우는 공급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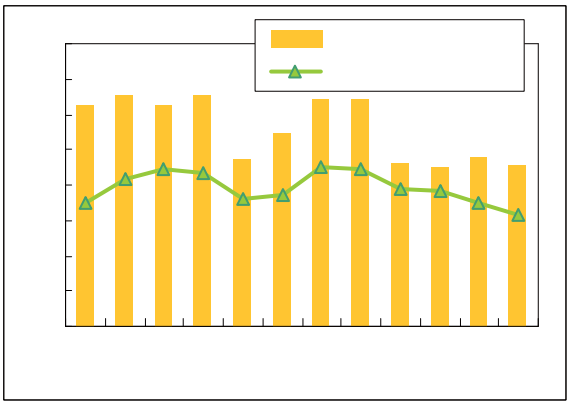
28) 2005~2009년 중 아파트가격 상승률 : 전국 27.8%, 수도권 44.0%, 지방광역시 9.6%

<그림 Ⅲ-28>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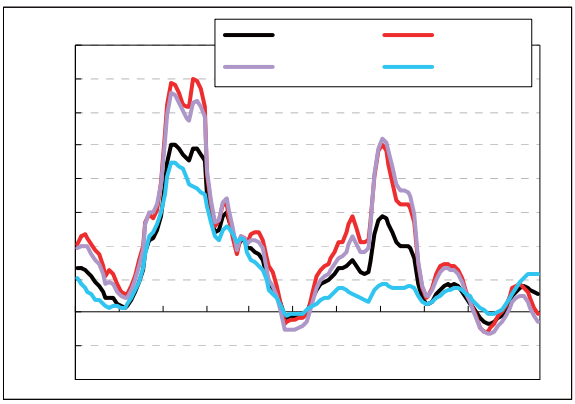
<그림 Ⅲ-29>
지방 아파트 거래량 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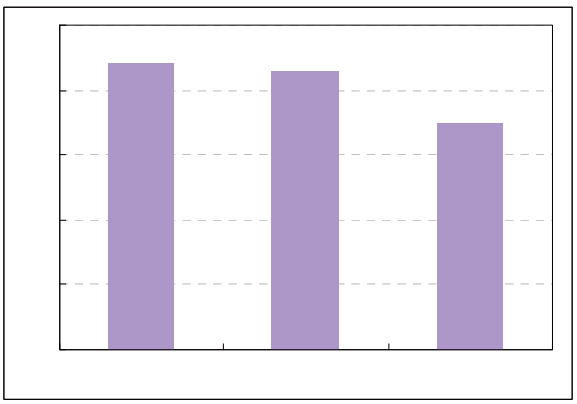
부동산 수요가 제약되거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축된 시장의 거래 정상화가 다소 늦어질 소지가 있다. 다만, 2008년 중 주택 인·허가 실적감소로 2011년에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회복과 가계소득 개선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가격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문제 등 수요측면의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중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증가 등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주택보급률과 인구대비 주택수 등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9년 기준으로 전국의 경우 101.2%지만,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95.4%와 93.1%로 100%에 미달하고, 인구대비 주택수도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Ⅲ-30>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Ⅲ-31>
인구대비 주택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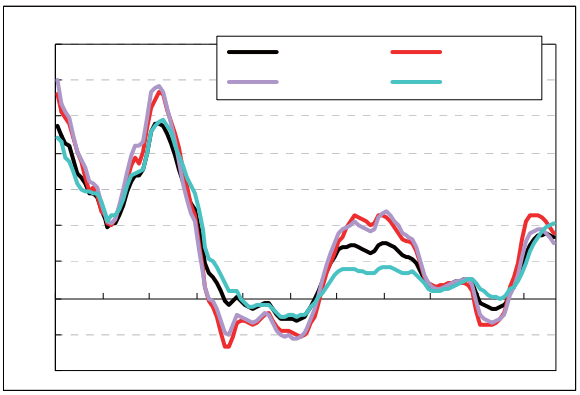


자료 : 日 총무성, 美 American Community Survey
韓 국토해양부

주택가격이 안정될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 실수요 중심의 시장개편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래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등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높은 비중(76.8%, '06년)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관련 산업이 대부분 서민이 종사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실수요 중심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29] 앞으로 주택시장 변동으로 경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격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주택수요 전망을 토대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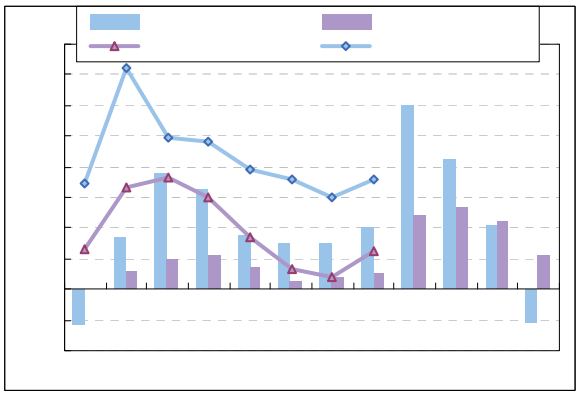
주택 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은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세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물량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하락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통상 가을 이사철인 9월을 기점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10~11월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매시장 위축국면이 지속될 경우 주택구입 관망세 확산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하여 시장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전세수요에 대응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Ⅲ-32>
월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 국민은행

<그림 Ⅲ-33>
아파트 월별 전세가격 상승률



자료: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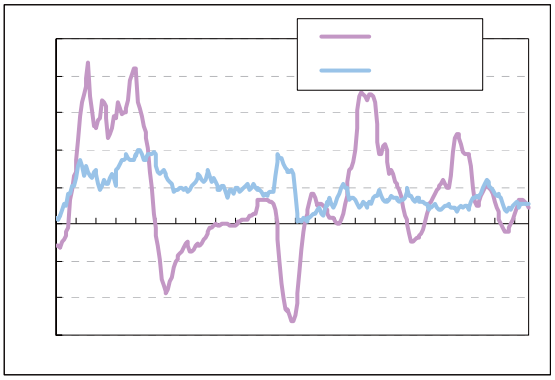
29) 2010년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 Ⅲ >

주택가격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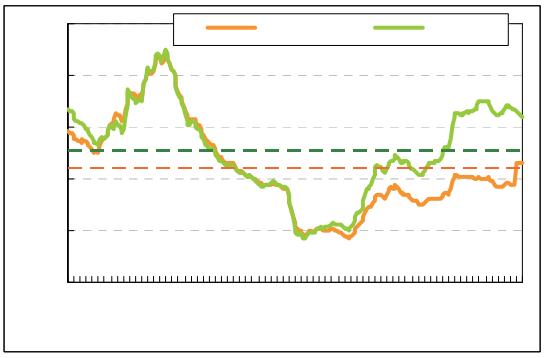
시장에서 결정되는 주택가격 수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인구·국토면적 등 경제외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균형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물가 또는 소득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2000년 이후 서울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격 상승률은 소득 증가율의 장기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의 장기평균에는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물가를 고려한 실질주택가격지수(=명목주택가격지수/소비자물가지수)가 다른 지역과 유사한 변동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06년부터는 장기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물가수준과 주택가격



자료 : 통계청,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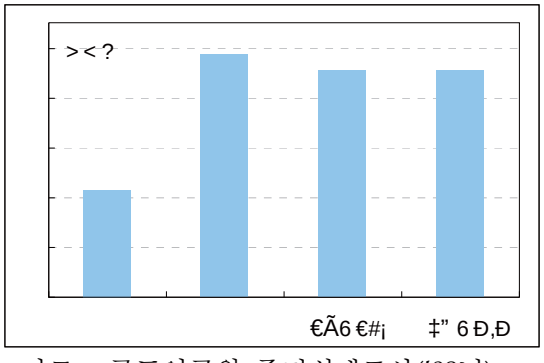
실질주택가격지수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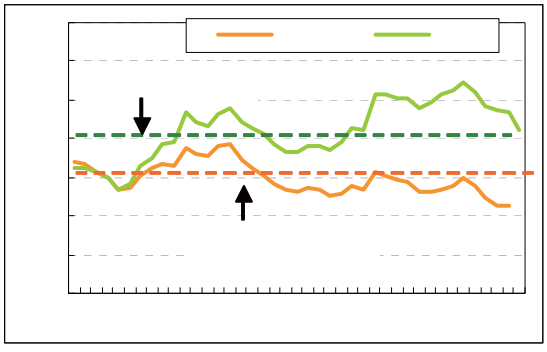
주택가격은 연간 가계소득이나 명목GDP 등 주택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주택가격소득비율(PIR)의 경우 나라마다 계산방식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미국·일본 등에 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주택가격지수 비율은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명목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상승흐름을 보였으나, 2008년 이후 장기 평균수준으로 점차 수렴하고 있다. 전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하향 안정되는 추세다.

주요국과의 PIR 비교



자료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08년)

주택가격지수/ GDP지수



자료 : 국민은행, 한국은행

참고 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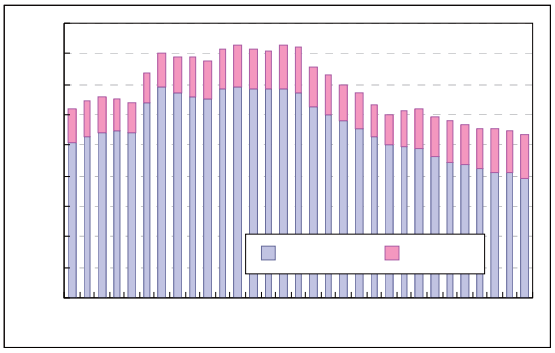
미분양 주택 현황

전국 미분양주택은 2009년 3월 16.6만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양도세 감면, 공공부문 매입 등 정책적 노력과 건설사들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에 힘입어 2010년 7월 현재 10.6만호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최근 들어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증가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양도세 감면종료(10.2.11일)를 앞두고 이루어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과 주택시장 침체양상이 맞물리면서 2009년 10월 2.0만호에서 2010년 7월 현재 2.8만호로 증가하였다.[30] 반면, 지방의 경우 2009년 3월 13.7만호를 기록한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하여 2010년 7월에는 7.8만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감소속도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미분양주택이 단기간내 장기 평균('00년~'09년중 7.5만호)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성이 부족한 준공후 미분양(46.5%)과 중소형에 비해 수요가 적은 중대형(59.4%)의 비중이 높아 시장 내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분양이 누적될 경우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사업 다각화가 곤란한 중견이하 주택전문업체들을 중심으로 일부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업체 부실이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과 하도급업체 등으로 영향이 파급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지연 등 주거불안 소지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되어 수급불안 가능성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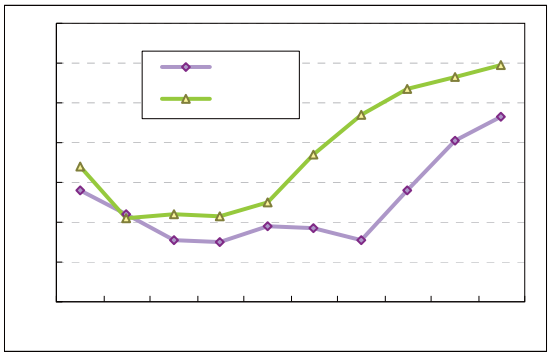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4월 23일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미분양 해소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분양 아파트 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미분양주택 현황'

준공후·중대형 미분양주택 비중



자료 : 국토해양부 '미분양주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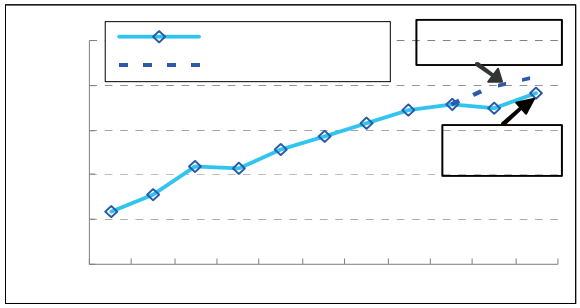
30) 수도권 분양실적(만호) : ('09.1/4)1.2 → (2/4)3.1 → (3/4)2.9 → (4/4)8.3 → ('10.1월)2.0

5. 노동 부문

고용회복의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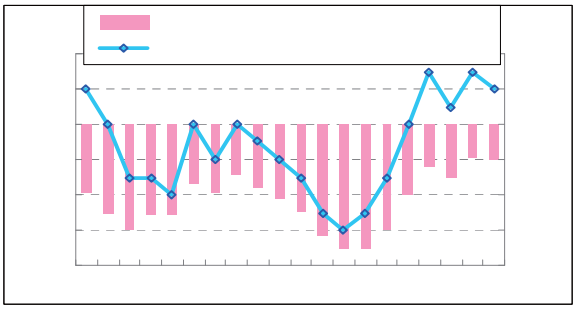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위기 이전의 추세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추세 대비 약 40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률도 2008~2009년간 1.2%p 하락한 이후 아직 2007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Ⅲ-34> 위기이전과 취업자수 비교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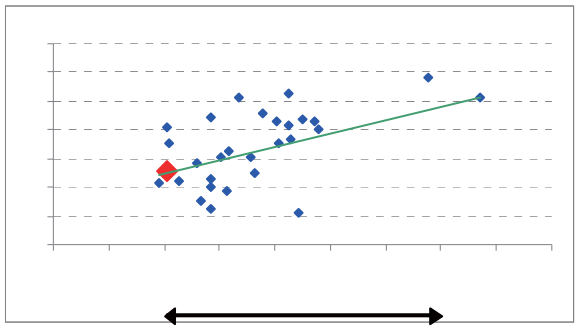
<그림 Ⅲ-35> 위기이전과 고용률 비교



자료 : 통계청

향후 우리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로 회복되더라도 위기 이전의 추세적 고용 수준에 단기간 내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로 줄어든 4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성장의 고용창출력도 높여야 한다. (참고 Ⅲ-10)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고용여건 개선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관련 고용법제가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이라고 보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할 경우 고용촉진과 비정규직 고용 유인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31]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그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

<그림 Ⅲ-36>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률 관계



자료 : OECD, IMD 국가경쟁력지수

<표 Ⅲ-7>
OECD 고용보호수준 평가

('08년 기준)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한 국	2.13	2.29	2.08
미 국	0.85	0.56	0.33
영 국	1.09	1.17	0.29
일 본	1.73	2.05	1.5
독 일	2.63	2.85	1.96
프랑스	3.00	2.6	3.75
OECD 평균	2.24	2.11	2.08

자료 : OECD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평가

31) OECD 한국경제보고서('05년, '08년)

참고 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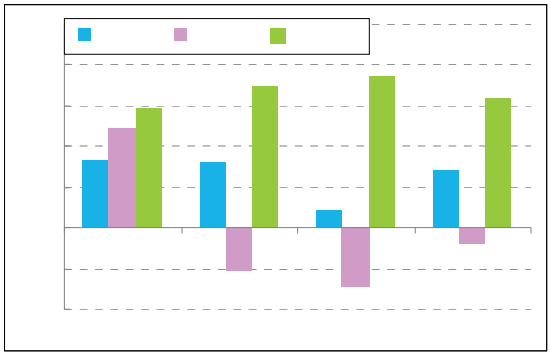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관계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고용탄력성(GDP 1% 증가시 취업자 증가율)으로 평가할 수 있다.[32] 우리나라는 고용탄력성이 1980년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서서히 약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업은 고용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1990년대 이후 (-)로 반전되어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창출력 저하는 위기에 따른 고용 조정, 전기·전자 등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중심의 구조 개편, 수출산업의 높은 부품·소재 해외의존도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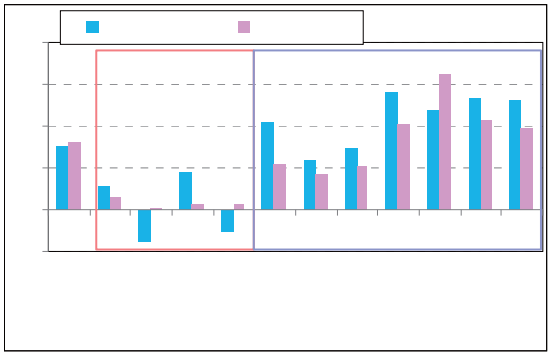
한편, 서비스업은 고용탄력성은 높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제성장 기여율이 낮아 실제 고용창출이 저조한 모습이다.[33] 특히,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진입·투자 규제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34]

기간별 고용탄력성



자료 : 한국은행 국회 기획재정위 공청회 자료('10.4월)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향후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 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지속 확충해야 한다. 또한 고용이 수반되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기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구조개선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인위적 고용확대는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32) 성장의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로 총생산 10억원 증가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24.4명에서 2008년 14.0명으로 하락하였다. 취업유발계수와 고용탄력성의 하락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술혁신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33)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 기여율('90~'07년, %) :
한국 47.5, 미국 73.1, 일본 73.6 영국 86.8, 독일 69.1

34) 서비스업(사업·사회서비스) 취업자 비중('08년, %) :
한국 67.3(28.3), 미국 78.6(44.0), 일본 68.4(32.0), 영국 77.3(45.1), 독일 68.1(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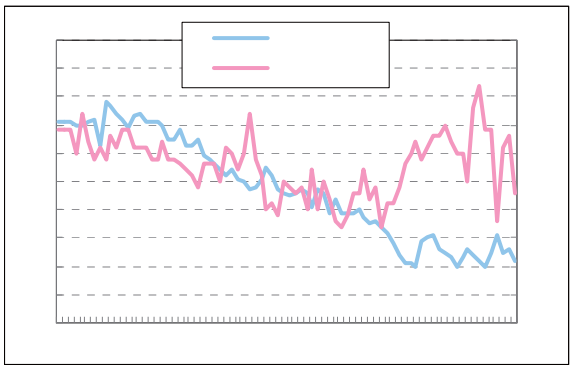
청년층 고용부진 지속

위기로 인한 고용 손실 등으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어려운 것과 같이 청년층 고용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 취업자수 감소는 일정부분 청년층 인구감소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개선도 더딘 상황임을 감안하면 인구 외적 요인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Ⅲ-11)

최근의 청년고용 부진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 우선 경기적 요인을 보면,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줄어든 가운데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조정을 한 측면이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른 청년층의 눈높이 상승, 산업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 수준, 미흡한 취업알선 체계 등 인력수급 구조와 노동시장 인프라를 포괄하는 다양한 요인이 청년층의 취업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취업한 후에도 근로여건 불만족 등으로 이직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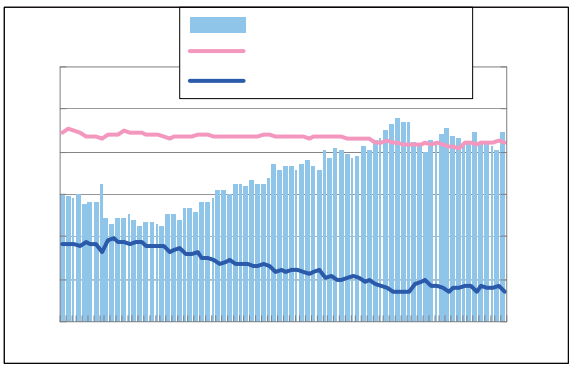
청년 고용부진이 계속될 경우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전체 노동시장의 개선과 더불어 청년층 고용여건도 점차 나아지겠으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청년 취업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업 선진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 및 취업알선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림 Ⅲ-37>
청년 고용률·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 Ⅲ-38>
청년 경활참가율·비경활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35) 2010년 5월 경활 부가조사 결과 청년층의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개월로 나타났다.
36) 취업경험자 중 이직경험자 비율(%) : (03) 65.2 (06) 65.7 (09) 67.6 (10) 68.9
2010년 5월 경활 청년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이직사유 중 보수, 근로시간 '근로여건 불만족'(42.5%)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망이 없어서'도 10%를 차지하였다.

참고 Ⅲ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 고용감소

최근 전체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는 경기 변동, 취업 눈높이 등의 요인 이외에 인구요인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년층 취업자는 증가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상황이다. 2010년 8월 취업자 증감에서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은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취업자가 8.0만명 감소한 반면,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를 제외한 경우 취업자는 2.5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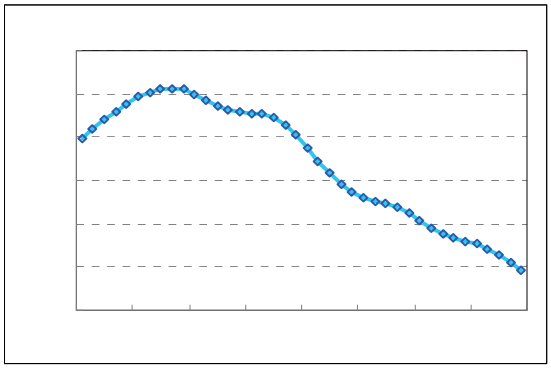
'10.8월 취업자 수 변화 분석

(전년동월대비, 만명, %)

	취업자 증감 (A)	인구구조 변화 요인[37] (B)	인구구조 변화 요인 제외시 (A-B)
15-29세	-5.5	-8.0	2.5
30-39세	3.8	-13.0	16.8
40-49세	4.4	-6.9	11.3
50-59세	30.9	19.6	11.3
60세 이상	4.9	7.3	-2.4
계	38.6	-0.9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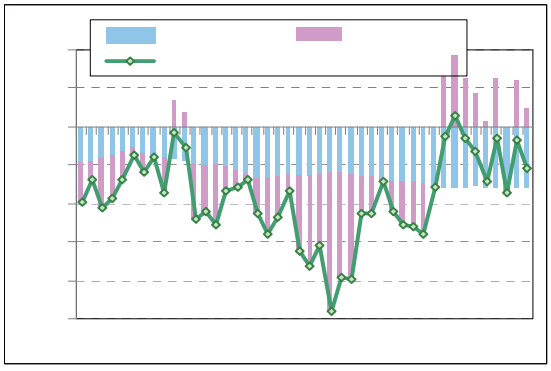
청년층 인구 감소는 향후에도 계속되어 청년층 취업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년층 고용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자 증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고용률과 실업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 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청년층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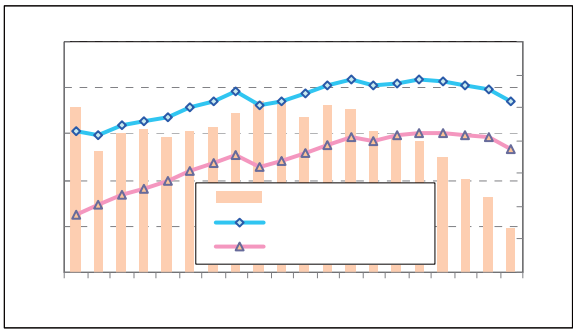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37) 각 연령대별 인구가 전체 인구증가율(1.2%)과 동일하게 증가하고(연령대별 인구 비중 유지) 고용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09.8월 연령별 고용률 적용)의 취업자 증감 규모를 나타낸다.

자영업자 고용여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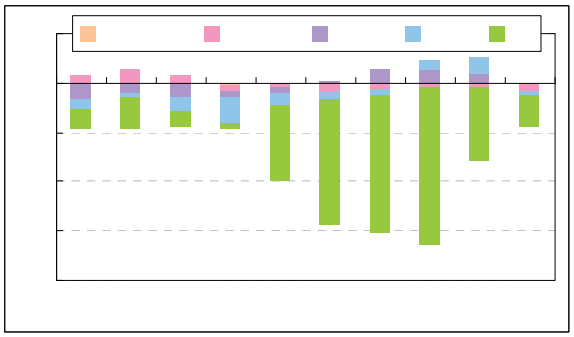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농림어업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던 비농림어업 자영업자 수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중 자영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경쟁심화에 따른 구조조정 요인과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위축 등 경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38]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규모가 영세한 업주의 비중이 높아 경기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39] 2010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Ⅲ-39> 자영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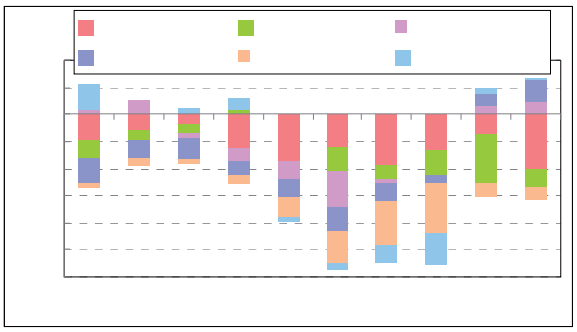
<그림 Ⅲ-40> 규모별 자영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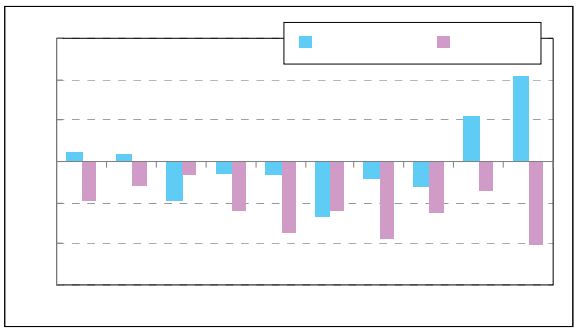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대형마트 증가 등 대형화·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영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40]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자영업자 고용부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재취업이나 재기가 가능하도록 고용보험·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Ⅲ-41> 산업별 자영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Ⅲ-42> 도소매·음식숙박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8) 사업체당 인구수 : (도소매업) 한국('08년) 56명, 일본('04년) 79명, 미국('05년) 191명
(음식숙박업) 한국('08년) 78명, 일본('04년) 263명, 미국('02년) 5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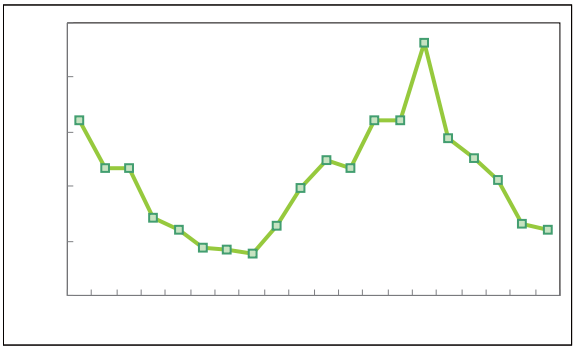
39) 2010년 8월 현재 1~4인 규모의 영세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40) 자영업자 업종별 비중('10.8월, %) : (도소매·음식숙박)31, (농림어업)19, (운수업)10, (제조업)8

노사관계 안정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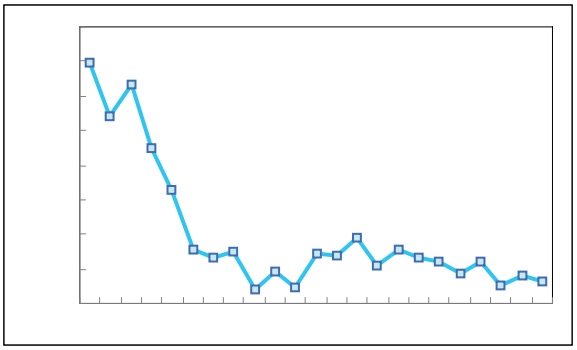
최근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10년 1~7월 중 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8건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근로손실일수도 2009년 62.7만일로 2008년 80.9만일에 비해 감소했다.[41]

<그림 Ⅲ-43> 노사분규 발생건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Ⅲ-44> 근로손실일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향후 노사관계는 노동관계법 개정('10.1.1일 시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42]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한 최근의 교섭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350개 사업장 중 865개 사업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했고, 이 중 832개 사업장(96.2%)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 위반을 방치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직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이 남아 있으므로 향후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복수노조 간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는 기준 등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노사정 간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제도의 연착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41) 근로손실일수=파업인원×파업시간/8(법정 일 근로시간)

42)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근로자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보건 안전업무 및 노조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할 때 일정한 시간, 인원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물가 및 국제원자재 부문

물가압력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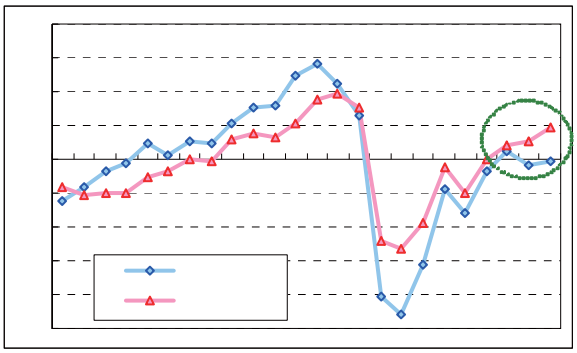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왔지만 물가압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물가관련 주요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물가목표 범위의 중간 수준인 3%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안정은 소비·투자 등 내수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더디게 회복되면서 전체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총수요 압력이 낮았던 데 주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면에서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향후 내수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총수요측면 물가압력이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성격을 가지는 생산자 물가가 2010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수입물가도 2/4분기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아직까지는 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회복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총수요 압력의 정도, 국제원자재 가격 등 물가불안 요인의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 Ⅲ-12)

<표 Ⅲ-8> 물가 관련 주요지표 동향

	2007	2008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4	2/4	8월
물가상황										
소비자물가 (%)	2.5	4.7	2.8	3.9	2.8	2.0	2.4	2.7	2.6	2.6
식료품물가 (%)	2.5	5.0	7.5	10.9	10.4	5.7	3.5	2.8	3.3	5.7
근원물가 (%)	2.4	4.2	3.6	4.9	3.9	3.0	2.4	1.9	1.6	1.8
기대인플레율 (%)	2.9	3.9	3.8	4.1	4.0	3.7	3.3	3.1	3.0	3.2
생산자물가 (%)	1.4	8.6	-0.2	4.2	-1.0	-3.2	-0.5	2.6	4.2	3.1
수입물가 (%)	4.5	36.2	-4.1	15.0	-9.5	-10.3	-8.4	-3.1	8.1	5.7
국제원자재										
로이터 CRB 지수	420.3	490.6	408.9	359.8	394.6	412.9	465.6	477.0	468.8	495.6
두바이유 ($/배럴)	68.4	94.3	61.9	44.3	59.3	67.8	75.4	76.0	78.1	74.2
원자재수입비중 (%)	57.0	62.4	57.6	59.3	55.0	57.0	58.8	59.9	59.0	56.9
시중유동성										
M1 (%)	-5.2	-1.8	16.3	10.8	17.6	18.9	17.8	14.5	10.7	-
M2 (%)	11.2	14.3	10.3	11.5	10.1	9.9	9.8	9.4	9.5	-
유통속도(GDP/M2)	0.81	0.75	0.70	0.70	0.71	0.71	0.70	0.71	0.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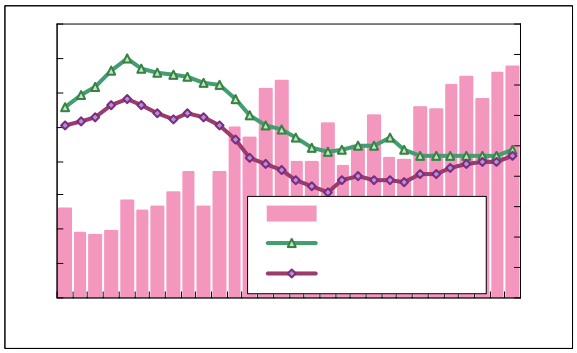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큰 폭의 디플레 갭이 경기회복과 함께 점차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43] 분석방법과 전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면 대체로 금년 중에는 GDP 갭이 (+)로 전환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은행대출, 통화유통속도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향후 자금순환이 활성화될 경우 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림 Ⅲ-45> GDP 갭률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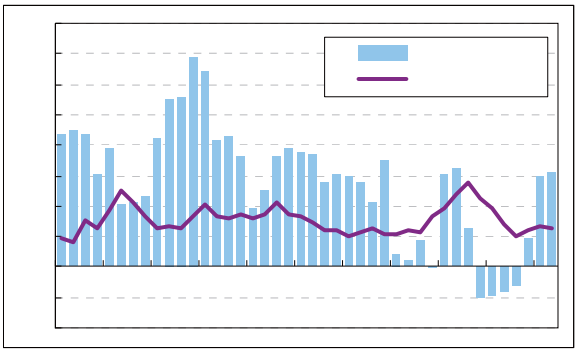
<그림 Ⅲ-46> 유동성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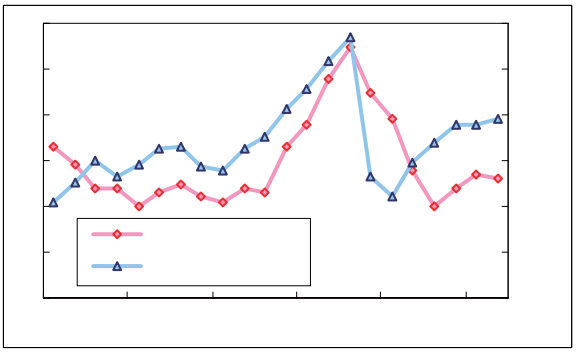
글로벌 위기로 인해 감소했던 임금은 2009년 4/4분기 중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예년 수준의 상승세로 복귀하였다. 향후 고용여건의 개선과 함께 2009년 임금하락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임금인상률이 높아질 경우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경기회복과 함께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상악화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도 세계경제 회복속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 재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제원자재 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 Ⅲ-47> 임금 및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통계청

<그림 Ⅲ-48>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통계청, 석유공사(페트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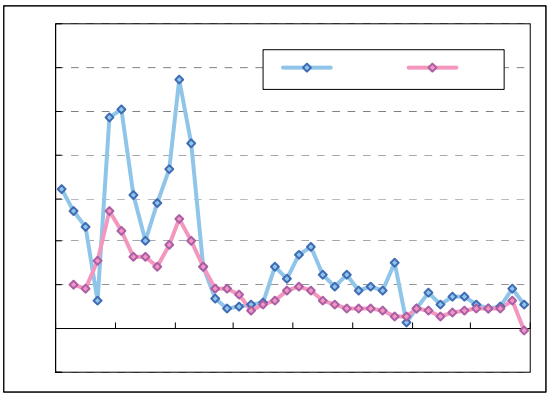
43)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GDP 갭이라고 하며, 이 GDP 갭이 (-)인 경우는 디플레 갭, (+)인 경우는 인플레 갭이라고 한다.

참고 Ⅲ >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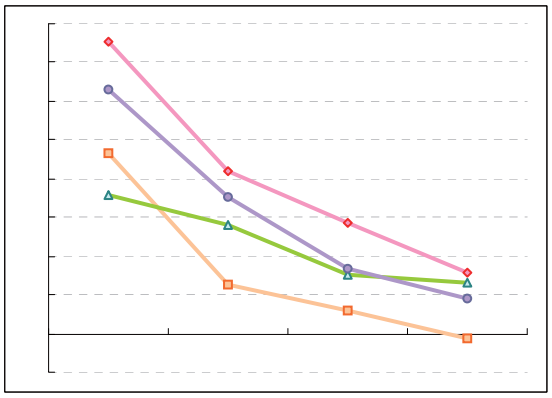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1970년대 빠른 경제성장과 석유파동 등으로 10% 이상의 초인플레를 경험한 이후 경제안정,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 노력에 힘입어 3% 내외의 상승률로 크게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물가수준이 높고 그간의 격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약 1%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G7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OECD

주요국의 연대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OECD

선진국과의 물가수준 및 상승률 격차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특징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높은 기대인플레율이 고착화되었고, 생산단계에서의 독과점 구조,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에 따른 과도한 유통비용 등은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물가의 하방경직성,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수준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구조적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총수요가 빠르게 증가해왔고, 그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국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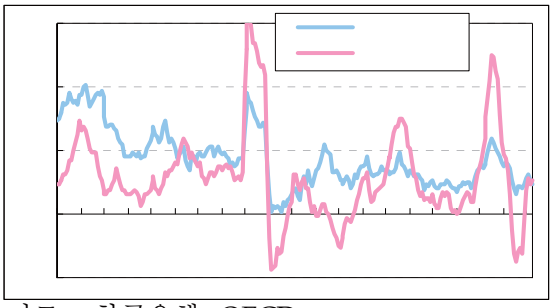
('90~'09년 평균,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경제성장률	5.6	2.6	2.0	1.1
물가상승률	4.4	2.8	2.6	0.5

자료 : 한국은행,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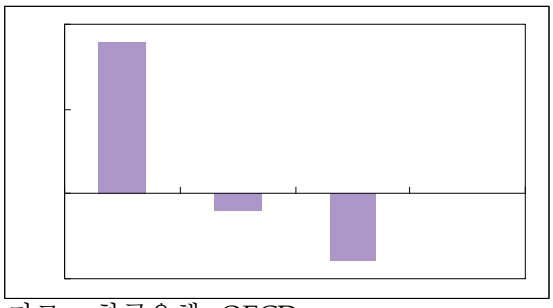
둘째,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외국과 달리 생산자물가보다 상승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진입장벽, 높은 관세율 등으로 생산·수입시장이 독과점화되면서 형성된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구조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자료 : 한국은행, OECD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격차



자료 : 한국은행, OECD

셋째, 우리나라 물가는 선진국보다 변동성이 크다. 우리경제의 높은 에너지 투입 비중, 낮은 곡물 자급률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공급구조가 주된 요인이나, 소비자 감시기능 미흡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 흡수력이 낮은 시장구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44)45)

소비자 물가 변동폭(표준편차)

	한국	미국	일본	영국
'90~'97년	1.9	1.1	1.3	2.3
'98~'09년	1.7	1.3	0.9	0.8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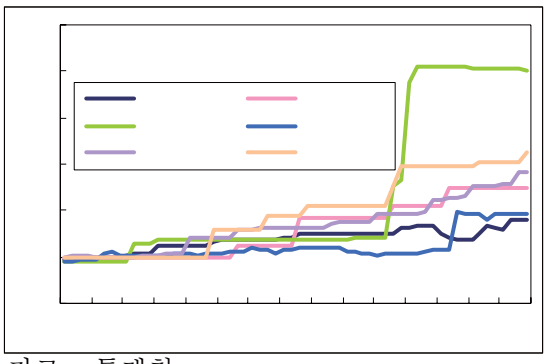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변동폭(표준편차)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식료품	3.5	1.9	2.1	3.2
에너지	9.9	14.2	5.8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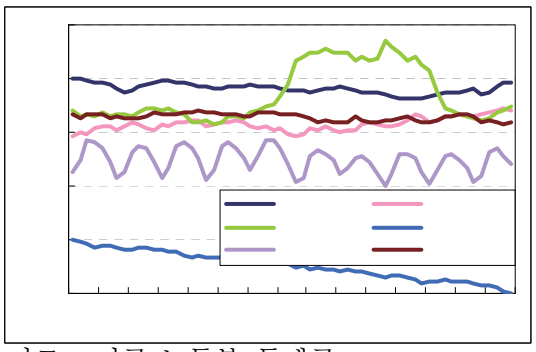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istics Extract ('98.1월~'09.12월)

넷째, 우리나라 물가는 내릴 때 조금 내리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가격 설정자(price setter)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경쟁도 하방경직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미국간 주요품목 가격동향 비교



자료 : 통계청



자료 : 미국 노동부 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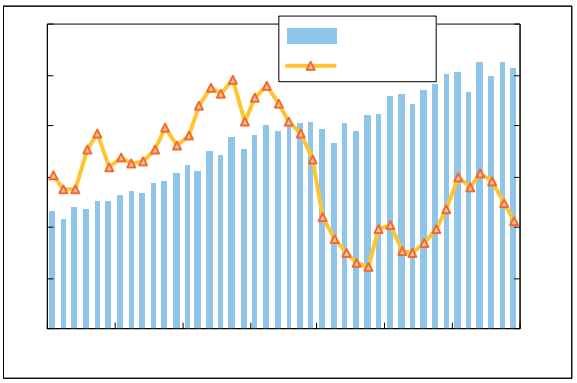
44) 에너지 투입비중('05년, %) : 한국 12.3, 미국 8.8, 일본 4.4, 영국 9.4
45) 곡물 자급률('05년, %) : 한국 27('07년), 일본 30, 미국 129, 영국 100

국제원자재 시장 불안

최근 국제원자재 시장은 세계경제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유와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곡물의 경우 러시아의 가뭄 및 수출금지 조치 등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밀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2007~2008년과 같은 "애그플레이션" 또는 "식량위기(food crisis)"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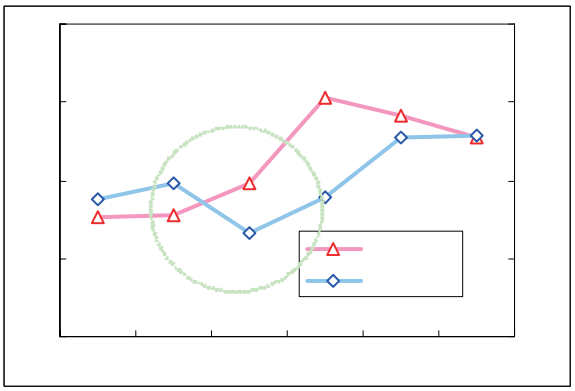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 불안은 러시아 가뭄, 캐나다 홍수 등 기상악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반적인 재고·수급이 불안했던 2007~2008년과는 상황이 다르므로 당시와 같은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7~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100$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원유의 대체재로서 바이오에탄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옥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밀 등 여타 작물의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등 곡물 수급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유가가 2007~200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바이오에탄올 생산 증가율이 과거보다 낮은 상황이며, 전반적인 곡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곡물 재고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46]

<그림 Ⅲ-49>
미국 바이오에탄올 생산량 및 증가율



자료 : 블룸버그

<그림 Ⅲ-50>
전세계 옥수수, 밀 재배면적



자료 : USDA

다만, 기상악화가 지속되어 생산차질이 심화되고, 추가적 수출금지 조치 등 식량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될 경우 가격의 변동성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제 곡물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LED 등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속에 대해서도 비축물량 확대 및 해외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Ⅲ-13)

46) 세계 곡물 재고율(%, USDA, '10.7월) : (07/08) 17.4 → (10/11 전망치) 20.7

참고 Ⅲ >

희토류 가격 동향 및 전망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란 매장량이 극히 적은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17종의 희소 금속을 의미한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반도체·자동차·컴퓨터·LED 등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다.

희토류는 매장량 1위인 중국이 현재 전세계 소비의 97% 가량을 독점 수출을 하고 있다. 매장량 2~3위인 미국·호주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채광을 중단하고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부분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다. 희토류는 특정국가에 매장이 편중되어 있고 런던금속거래소 등 국제거래소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어 공급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주요 생산국의 정책 및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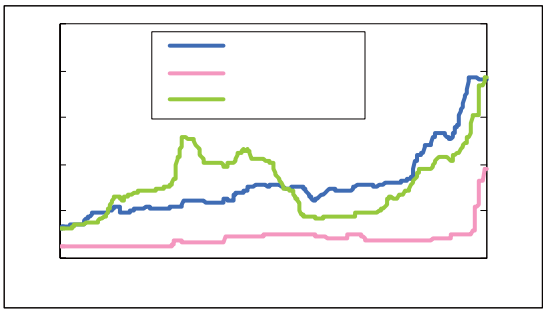
매장량 ('09년, 천톤)		생산량 ('09년, 톤)		소비량 ('06년 추정, 톤)	
중국	36,000(36.4%)	중국	120,000(96.8%)	중국	59,000(54.6%)
CIS	19,000(19.2%)	인도	2,700 (2.2%)	일본·아시아	25,750(23.8%)
미국	13,000(13.1%)	브라질	650 (0.5%)	미국	11,500(10.6%)
호주	5,400 (5.5%)	말레이시아	380 (0.3%)	유럽	9,750 (9.0%)
인도	3,100 (3.1%)	기타	270 (0.2%)	기타	2,000 (1.9%)
총계	99,000(100%)	총계	124,000(100%)	총계	108,000(100%)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최근 중국정부는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출 쿼터를 2009년 하반기 28,417톤에서 2010년 하반기 7,976톤으로 제한하고, 국영회사를 중심으로 희토류 생산기업을 통폐합하는 등 가격 통제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금년 1월 이후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연초대비 세륨은 383%, 네오디뮴은 139%, 디스프로슘은 133% 가량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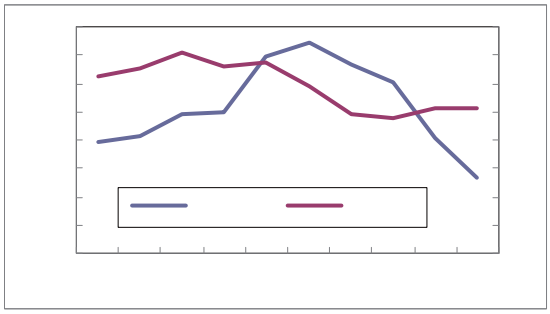
우리나라 희토류 사용량은 연간 2,600톤('09년기준)에 불과하여 가격 상승이 생산비용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향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출규제 강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희토류 비축물량 확대 및 해외 자원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희토류 가격 동향



자료 : KOREAPDS

희토류 수입 동향



자료 : 무역협회

Ⅳ 거시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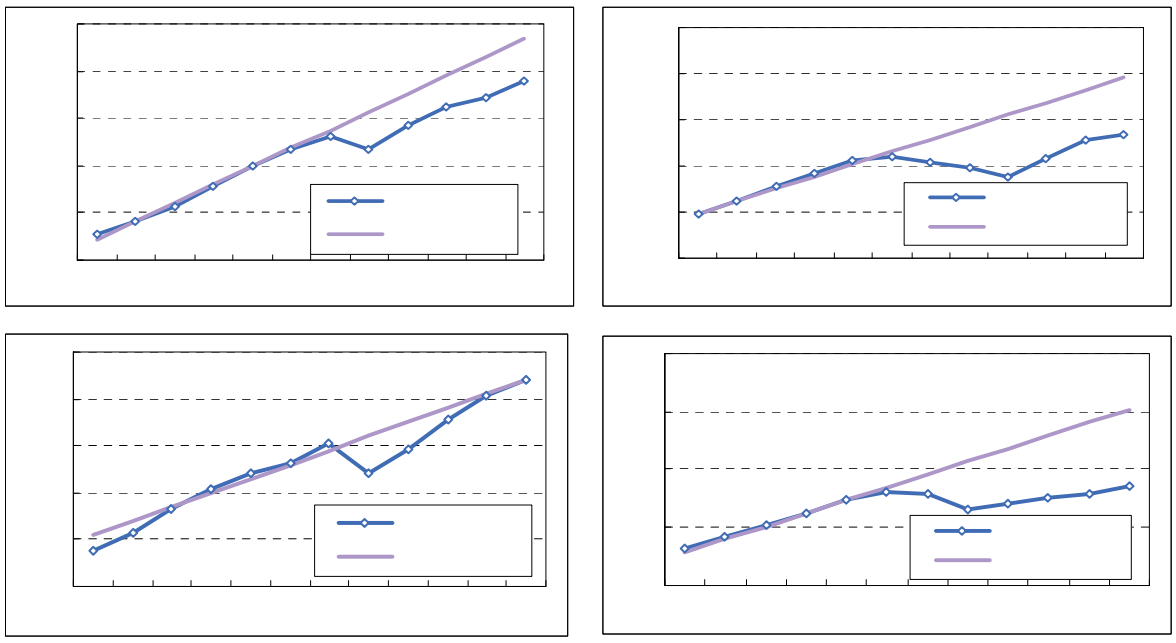
1. 성장 및 고용창출 기반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성장 둔화

경제위기는 위기기간 동안의 소득과 고용 뿐 아니라 향후 성장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위기기간의 실업 증가가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지거나 금융규제 강화로 자금흐름이 제약되고 위험기피 성향이 증가할 경우 자본축적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위기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다. IMF(WEO, '09.10월)에 따르면, 많은 경우 위기 이후 GDP의 추세적 수준(level)은 하락하나 성장률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GDP 수준 뿐 아니라 성장률도 위기이전보다 둔화되었다. 반면 적극적인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이전의 GDP 추세를 거의 회복한 사례('94년 멕시코)도 있었다.[47]

이번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GDP가 감소했던 기간이 1분기에 불과하고,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성장경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기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Ⅳ-1> 과거 금융위기 전후 GDP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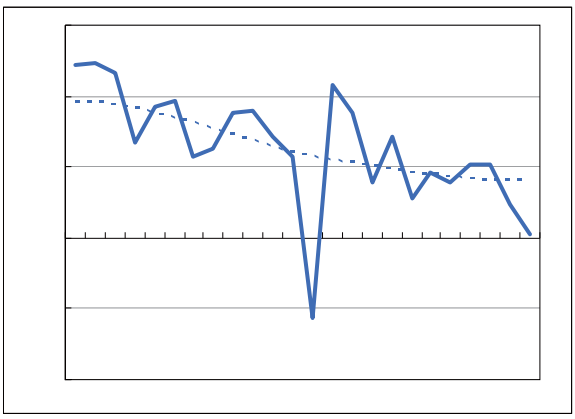
註」 GDP의 로그값, 위기이전 추세는 위기이전 10년간의 평균적인 성장세(멕시코는 8년)

47) 멕시코의 경우, 북미국가와의 FTA 체결 ('94.1월) 이후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성장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중장기 성장잠재력 둔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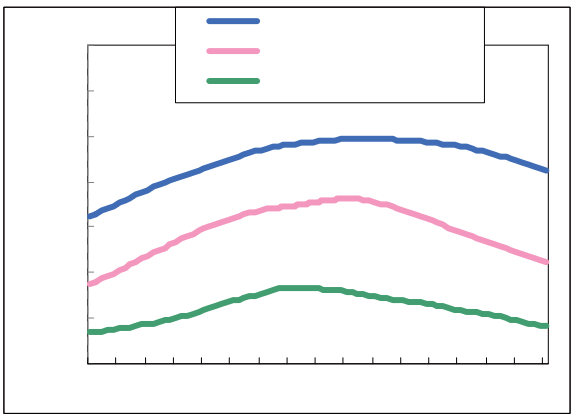
우리경제는 경제구조의 성숙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의 지속으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노동투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참고 Ⅳ-1) 경제의 성숙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투자기회가 줄어들고 외환위기 이후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투자증가율도 감소하고 있다.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인구 증가로 저축률이 떨어지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둔화 요인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후발주자로서의 이득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신기술 개발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생산성 증가를 통한 요소투입 보완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총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인구고령화와 글로벌 경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48]

<그림 Ⅳ-2>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Ⅳ-3> 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 통계청

향후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최대한 완화하는 한편, 여성·노인 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인력의 질 개선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R&D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48) KDI('07.4월)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000년대 후반에 4% 중반 수준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대, 2030년대 이후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참고 Ⅳ >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이 하락하고 고령층 인구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1990년대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유사하므로 당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인구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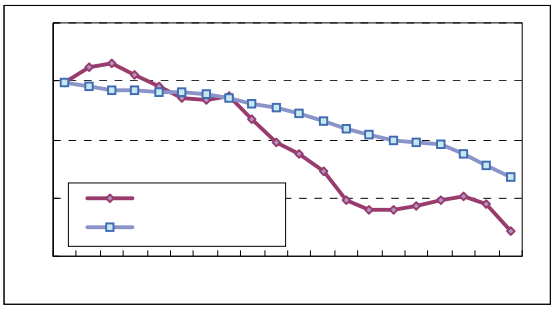
	인구증가율(%)	노인부양비*(%)	중위연령(세)
일본('90→'00년)	1.14 → 0.49	17 → 25	37.9 → 43.2
한국('10→'20년)	1.12 → 0.32	15 → 22	37.4 → 41.4

* 노인부양비 : 65세 이상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

일본의 경우 1990~2000년간 고용률이 61.9%에서 59.5%로 2.4%p 하락하였는데 이 중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는 1.0%p로 추정된다.[49]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상승한 데 반해 신규 은퇴층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은 크게 부족했던 데 기인된 것으로 평가된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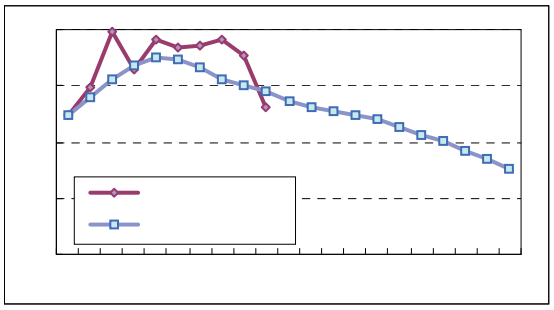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이후 인구고령화가 고용률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004~2009년간 고용률이 1.2%p 하락(59.8%→58.6%)하였는데 이 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하락효과는 0.6%p로 추정되며, 고령화가 가속화될 2010~2020년간에는 고용률 하락효과가 1.2%p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률 추이(일본)



자료 : 일본 통계청, 기획재정부

고용률 추이(한국)



자료 : 통계청, 기획재정부

고용률이 하락할 경우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될 수 있으며, 실업·연금급여 등 복지지출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층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 활성화,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으로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여성·청년층의 취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49) 연령대별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연령대별 인구비중 변화에 따른 전체 고용률 변화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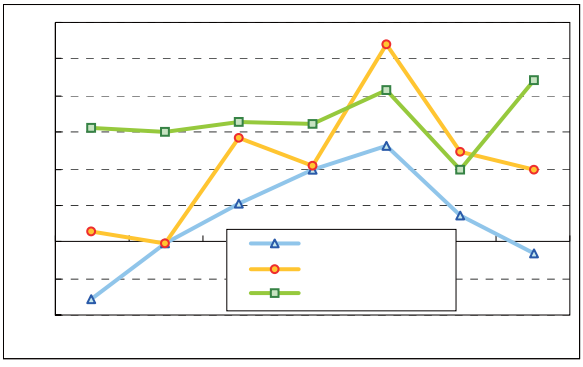
50) 연령별 고용률('90→'00년) : (15~64세) 68.4%→68.9%(+0.5%p) / (65세 이상) 24.1%→22.1%(-2.0%p)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체감경기 부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대내외 여건의 변동에 맞추어 경제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 경제발전의 과정에서는 생산기술이나 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을 보완·대체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그에 따라 기존의 경제구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도와 정책을 새로운 경제구조에 맞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자원 재배분이 지연되어 경제의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높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아왔다. 제조업의 경우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부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첨단기술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신성장산업에서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서비스와 내수부문의 경우 도소매·음식업 등 자영업 부문은 과당경쟁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소득창출이 미흡하고 체감경기가 부진한 반면, 의료·교육 등 유망 부문은 진입규제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교육과 산업수요간의 괴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도 성장과 고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Ⅳ-4>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Ⅳ-1> 국별 서비스업 고용비중

('05년, %)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서비스업	100.0	100.0	100.0	100.0
도소매/음식숙박	39.0	27.8	36.2	20.2
운수창고/통신	9.6	5.6	9.1	8.3
금융/부동산/사업	18.7	22.2	21.0	20.5
기타 서비스	32.8	44.4	33.7	51.0
(교육·의료 등)	20.2	32.4	25.3	43.9

자료 : 한국은행('07.7월)

저출산·고령화 추세 하에서 요소투입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 및 노동유연성 개선을 바탕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완화와 개방확대를 통해 생산성 제고의 여지가 큰 부문에 대한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집단이기주의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효율적으로 극복·조정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및 갈등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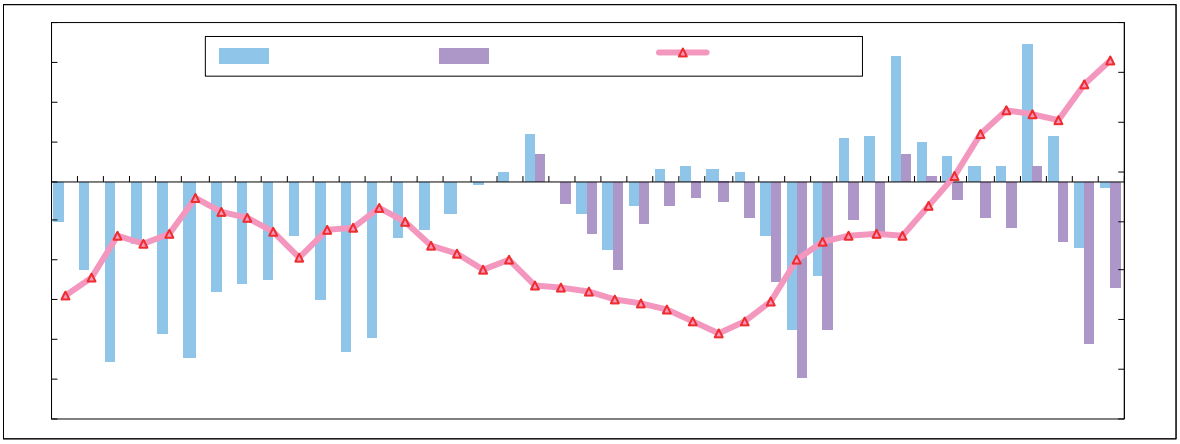
2. 재정건전성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 후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복지지출이 크게 확대된 것도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51]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중기재정계획, Top-down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 등의 도입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30% 내외에서 유지되던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09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적자가 GDP대비 4.1%로 확대되었으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8년 30.1%에서 2009년에는 33.8%로 상승하였다.[52]

<그림 Ⅳ-5>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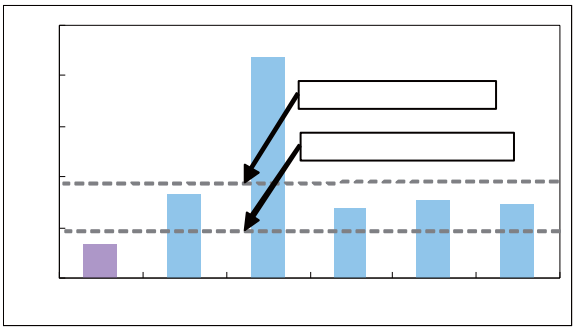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51) 공적자금상환대책('02.12월)에 따라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관리기금의 국가보증채 49조원이 단계적으로 국채로 전환되었다.('03년 13조원, '04~'06년 각 12조원)

52) 2009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7% 감소(167.3→164.5조원)했고, 2008~2010년중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66.7조원('08년 GDP대비 6.5%) 수준이다. 또한, 2009년 경상성장률은 3.6%로 국고채금리(3년물, 4.04%)에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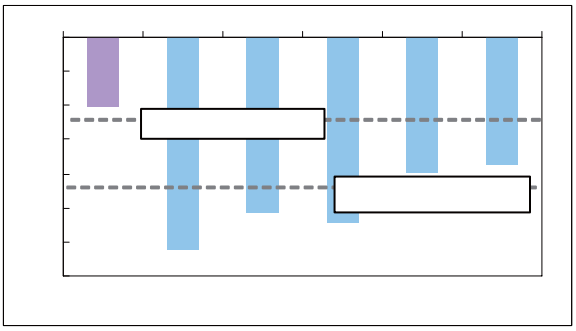
최근의 국가채무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009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GDP대비 33.8%)은 G20 국가 평균 72.5%의 절반 수준이며, 재정수지 적자(GDP대비 4.1%)도 G20 국가 평균 7.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회복 속도도 빠르다.[53]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2015년 국가채무비율이 OECD 22개국 중 호주 다음으로 낮고, 부채감당능력을 감안한 재정여력은 우리나라가 가장 클 것으로 평가하였다.[54]

<그림 Ⅳ-6> 주요국의 국가채무



자료 : IMF, Fiscal Monitor, '10.5월

<그림 Ⅳ-7> 주요국의 재정수지



자료 : IMF, Fiscal Monitor, '10.5월
(한국은 관리대상수지 기준)

향후 재정정책은 경기대응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면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재정 총량관리에 있어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연간 재정 수입과 지출은 물론 재정조치를 수반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전망(intergenerational report)을 수립하고 미래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점검하는 것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중요한 과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통일비용 등 중장기적 지출소요에 미리 대비해야 하며, 현재 국가채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우발채무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3) 2010년 예산상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3.6% 증가(164.5→170.5조원)하였으며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른 점을 감안할 때 실적치는 더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시행된 경기부양 대책과 관련한 감세 및 재정지출 규모도 2008년 GDP대비로 2009년 3.8% 수준에서 2010년에는 1.7%로 축소되었으며, 그 결과 2010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7%로 계획되었다. 경상성장률이 국고채금리(3년물, 1~8월평균 3.9%)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도 부채동학(Debt dynamics) 측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54) IMF 재정여력보고서(Fiscal Space), '10.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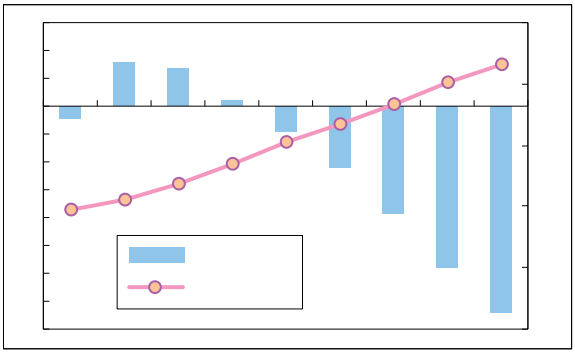
의료 복지지출 급증 문제

저출산·고령화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큰 부담요인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입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노령인구 증가로 연금·의료비 등 복지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09.12월)은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복지지출 규모가 2009년 GDP 대비 9.5%에서 2050년 21.6%로 2.3배 가량 증가하고, 2030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복지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지출의 낭비요인 제거, 탈수급·자활촉진, 복지대상 범위의 공정한 선정 등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1% 수준인데 반해 수입 증가율은 7~8%에 불과하여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55] 지출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급증,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로 인한 과다진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약제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지출은 2009년 31.2조원에서 2020년에는 92.6조원으로까지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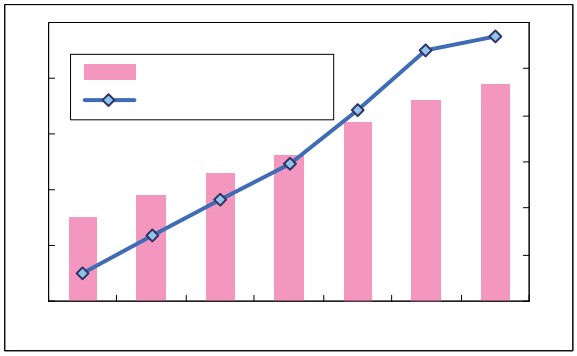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 진료영역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의료이용을 적정화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진료 및 비용효과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복제약 가격 인하 등으로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가(在家)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출절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Ⅳ-8> 복지지출 및 재정수지 전망



자료 : 조세연구원, '09.12월

<그림 Ⅳ-9>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비중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55) '97~'07년 중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 (한국) 8.7%, (OECD 평균) 4.1%
56) 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참고 Ⅳ >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위한 OECD 정책권고[57]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며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의료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지불보상제도 한국은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의사에 대한 보상이 많아지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를 택하고 있어 비용증가에 취약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유사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군에 대해 평균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입원부문에 확대하고, 외래부문에 1인당 정액제 방식을 혼합하는 등 과도한 진료횟수와 짧은 진료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

('07년, 건)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OECD 평균
7000이상	약 6,300	약 2,000	약 2,000	약 1,500	약 2,500

약제비 저가약 처방 유인이 없고 약가가 높아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OECD 중 4위, 증가율도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저가 복제약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동일 성분 약에 대해 동일한 보험지급액을 설정하는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 도입,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약제비 절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07년, %)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OECD 평균
24.7	12.0	16.3	15.1	19.3	17.3

장기요양서비스 소규모 병원들의 경우 장기입원 유도를 통해 사실상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병원에서 불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저렴한 재가수발서비스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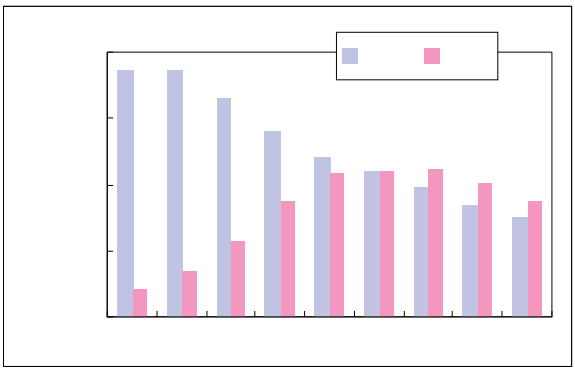
주치의 제도 한국은 병의원 방문이 자유로워 예방진료가 적고 의료이용이 과다한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의의 진료를 1차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치의제(gate keeper)의 단계적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진료 의뢰 없이 병원에 가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57) Health-care reform in Korea(OECD, '10.5월). 동 보고서는 상기 내용 외에 의료재원의 효율적인 조달방안, 의료의 접근성 보장방안, 의료의 질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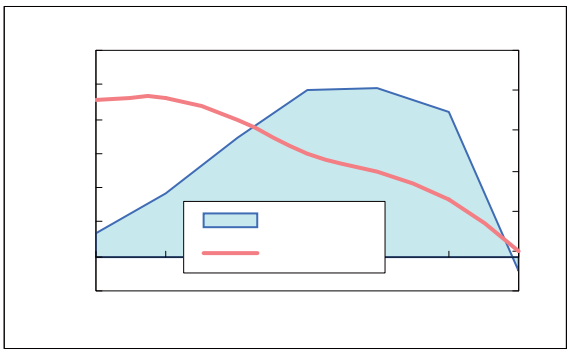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중장기적으로 4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향후 중요한 정책과제다. 국민연금은 2008년의 제도개선으로 적립금 고갈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되었으나, 근본적인 재정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58]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가입자가 현재의 9배에서 2055년 이후에는 1배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금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2060년 이후에도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미래의 연금채무를 계산하고, 이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만으로는 충분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3차 국민연금재정 재계산 기간('13년) 중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0>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



<그림 Ⅳ-11> 국민연금 적립금·수지 전망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경우 오랜 논의 끝에 급여는 축소하고 기여금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금년부터 시행하여 재정여건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59]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매년 3.7조원(향후 10년간 평균)의 수지적자가 예상되어 재정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반면,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1973년 재정적자에 대한 국고보전이 시작된 이후 앞으로도 매년 1,400억원(향후 10년간 평균)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58) 2008년 제도개선에서는 보험료율(9%)을 유지한 채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다. ('07년까지 60% → '08년 50% → '28년까지 매년 0.5%씩 인하하여 40%로 낮춤)

59) 급여산정 기초는 기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조정하고, 비용부담률도 기존 보수월액 기준 8.5%에서 기준소득 기준 7.0%('12년까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통일비용

201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문제가 제기된 이후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비용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통일방식과 남북한 인구이동 여부, 사회보장수준 일치 여부 등 통일에 대한 가정에 따라 연구자마다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표 Ⅳ-2> 통일비용 추정

추정방식	통일비용
① 독일통일비용을 한국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900~6,100억불 (GDP대비 29.2~109.9%)
② 남북한 소득균등화를 위한 대북투자비용 추정 방법	500~35,500억불 (GDP대비 5.9~665.4%)
③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의 지불의사 추정 방법	연간 GDP의 2.9~3.3%

1989년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3년간 총 1조 3천억 유로, 연평균 GDP의 약 5% 수준의 통일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한 것은 서독정부가 구동독 경제체제의 비효율을 과소평가했고, 시장환율을 무시한 통화통합과 무리한 소득균등화 정책으로 생산성이 낮은 동독경제의 붕괴를 초래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60] 또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체제를 동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측면도 있다.[61] (참고 Ⅳ-3)

통일은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나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생산요소의 효율적 결합 등으로 성장의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62] 앞으로 통일이 우리경제에 미치게 될 위험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점검하여 상황변동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유지를 통해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비축하는 동시에 별도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60)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시장교환비율은 4.4:1 수준이였으나 통일과정에서 동독주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1:1 또는 2:1의 낮은 교환비율을 적용하였다.
61) 동독 주정부에 대한 이전지출액의 50%수준이 사회보장지출로 사용되었다.
62) 2009년 골드만 삭스는 남북한이 2012년 통일될 경우 2050년경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제규모를 앞지르면서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 Ⅳ >

통일 이후 독일의 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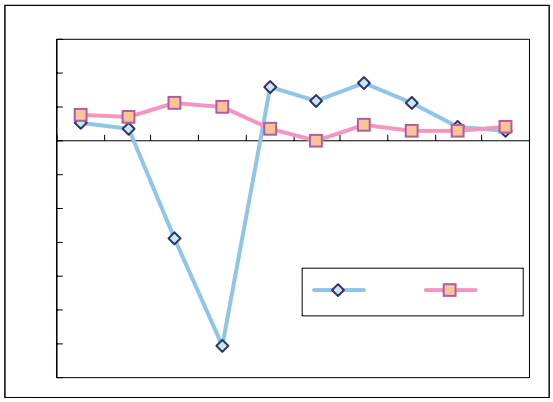
통일(1990년)이후 독일경제는 ①동독경제의 붕괴와 서독경제의 통일특수단계(1990~1991년), ②동독경제 부흥단계(1992~1995년)를 거쳐 ③통일과정에서의 특이 상황들이 소진되고 성장흐름이 안정화(1996년 이후)되는 단계를 겪었다.

① 동독경제의 붕괴와 서독경제의 특수단계(1990~1991년) : 통일직후 독일 정부는 동독지역의 사회안정과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독지역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유리한 환율을 적용한 화폐교환 등 소득균등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독경제는 동독지역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1990~1991년 중 예년수준('80~'89년간 연평균 성장률 1.8%)을 상회하는 고성장을 거두었다. 반면, 동독지역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여인상 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1990년 -14.4%, 1991년 -30.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② 동독 경제부흥단계(1992~1995년) : 독일정부는 통일특수에 따른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 경기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적극 지원했다. 통일특수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자 정책금리를 인상('90년 6.0% → '92년 7월 8.75%)하는 한편, 동독 경제재건을 위해 부가가치세(14% → 15%) 및 유류세의 인상, 국채발행 등 재원마련 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원 등을 바탕으로 동독지역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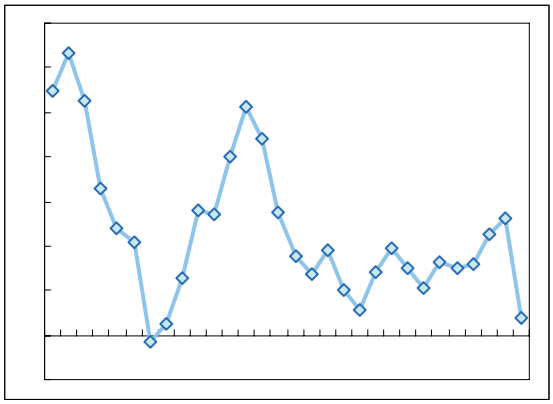
③ 안정화 단계(1996년 이후) : 건설경기 등 동독지역의 특수요인들이 소진되고, 독일정부도 대동독 이전지출 축소 등 경제정책을 정상화시켰다. 정상화 조치 이후에도 독일경제는 동독지역에 자생적 경제시스템이 복원되고 서독지역도 전통적인 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동서독 지역의 GDP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Deutsche Bundesbank '98년)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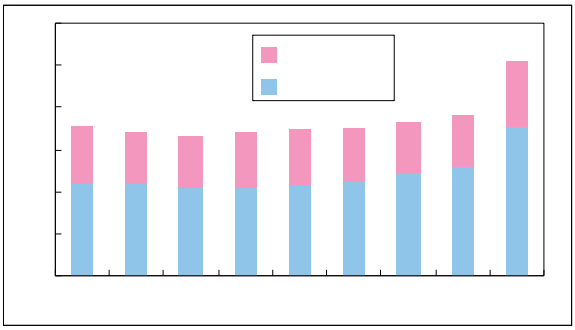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그간 16~19조원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9년 들어 25.6조원으로 급증하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축제, 과도한 지역개발사업 등 낭비적 재정지출이 증가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상황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125%, 일본 지자체의 경우는 152%인데 비해 우리나라 지자체는 12.8%로 낮은 수준이다.[63] 다만, 최근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향후 복지지출 등 재정소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정부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지방채 발행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축제 축소 등을 통해 낭비적 재정지출 요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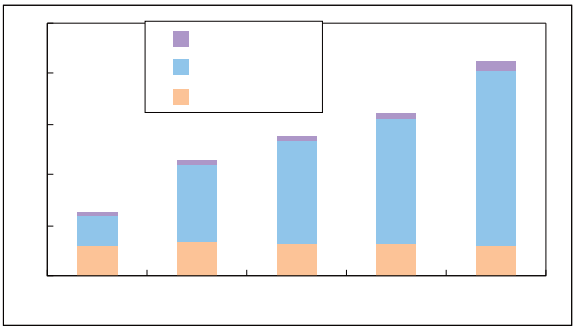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최근 증가속도가 빨라 앞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2005~2009년간 지방공기업 부채는 연평균 35.7% 증가하였으며, 2009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42.7조원(추정)으로 지자체 부채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지역별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무리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 구조조정 등 부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64]

<그림 Ⅳ-12> 지방채 잔액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

<그림 Ⅳ-1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63)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서울) 11.8%, (부산) 30.9%, (대구) 37.0%, (인천) 30.1%, (경기) 13.0%, (경북) 11.5%, (전남)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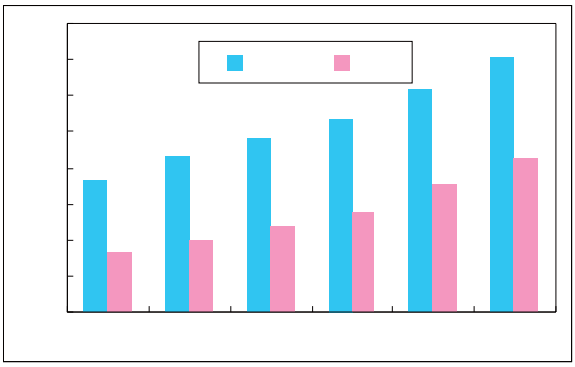
64)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09년말 현재 35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82%를 차지한다.

공기업 재무건전성

공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래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2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05년말 98조원에서 2009년말 212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채 규모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적 속성에 주로 기인하며,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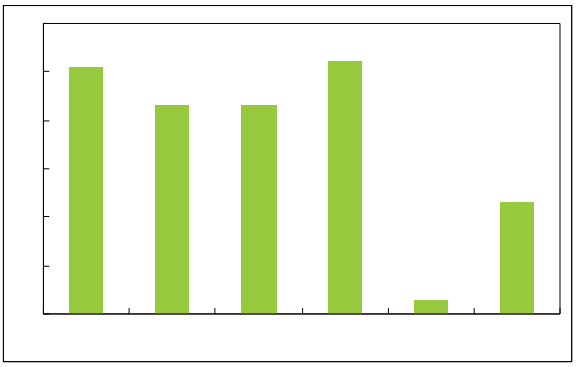
자산이나 당기순익 등을 종합 감안할 경우 공기업 재무건전성은 단기간 내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05~2009년 기간 중 공기업 자산이 215조원에서 351조원으로 부채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증가가 공기업의 지급불능 사태나 정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5]

<그림 Ⅳ-14> 공기업 자산·부채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 Ⅳ-15> 공기업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다만,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고 공기업에 따라 일부 재무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기업별로 부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LH공사의 경우 자산매각·사업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도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경비 등 관리비 절감, 유휴자산 매각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기업 부채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는 5년 단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65) 부채규모가 가장 큰 LH공사의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부채가 2009년말 109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주택·토지 등 우량 재고자산에 투입된 상황이며 2009년 9월 자산재평가 결과 시장가치가 153조원으로 평가되어 부채상환 능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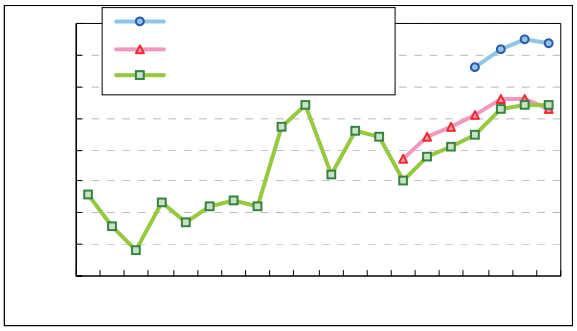
3. 부문간 격차

소득분배 악화 가능성

199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양호했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2000년대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며, 소득격차 확대로 중산층 비중도 감소하였다.[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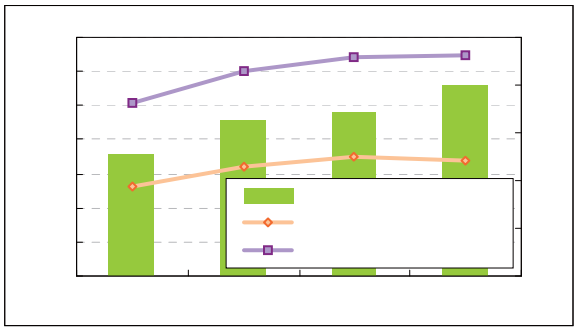
그러나, 2009년 들어서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금년 들어 고용과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득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16>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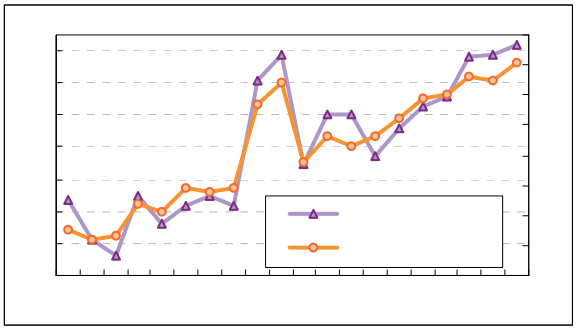
*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Ⅳ-17> 최근 지니계수 및 소득분배 개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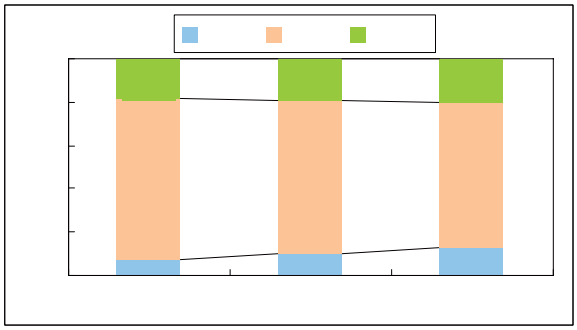
* 전가구(1인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Ⅳ-18>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추이



* 도시가구(2인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Ⅳ-19> 소득계층별 비중변화



* 도시가구(2인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66)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 = 소득상위 20% 계층의 소득 ÷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중산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계층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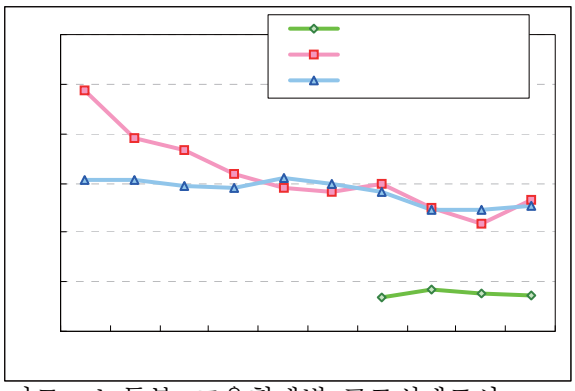
소득격차 확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계화, 정보화, 기술진보 등이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67]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의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 간의 성과격차 확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고령화 진전으로 저소득 노령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소득분배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표 Ⅳ-3> 비정규직·자영업자 비중(%)

	임시직비중('09년)	비임금근로자비중('08년)
한 국	21.3	31.3
미 국	4.2('05년)	7.0
일 본	13.7	13.0
영 국	5.7	13.4
독 일	14.5	11.7
스페인	25.4	17.7
OECD	11.6	15.8

* OECD는 임시직·영구직과 임금·비임금으로 구분
자료 : OECD

<그림 Ⅳ-20> 임금 격차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격차 확대와 중산층 감소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정기반을 저해하고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등 지속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적자원 개발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증가할 경우 양질의 인력공급에 애로가 발생해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소득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계층간 이동통로 확대를 통해 공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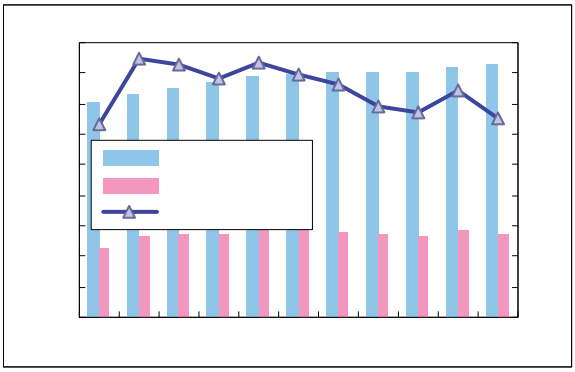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분배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간 정치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보완하는 한편, 대립과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 신뢰와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67) IMF는 기술진보에 따른 숙련·비숙련 노동자간 격차 확대가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IMF 세계경제보고서, '07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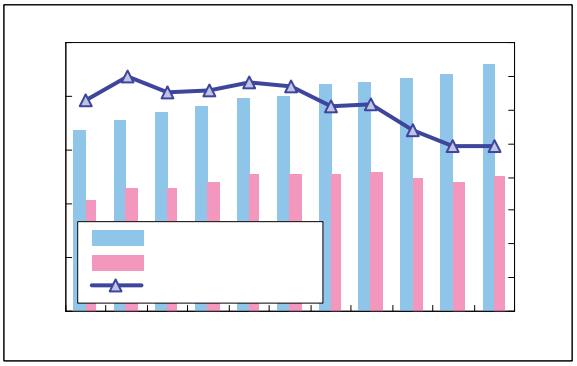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정부 일자리 대책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며,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68] 사회보험 등 여타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정규직과는 상당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Ⅳ-21>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



자료 : 통계청

<그림 Ⅳ-2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자료 : 통계청

<표 Ⅳ-4> 정규직-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

(%, 괄호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p)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정규직	78.6(-0.1)	79.6(0.1)	75.4(8.1)	76.6(0.3)	79.4(5.9)	55.5(0.5)	70.9(3.5)
비정규직	39.3(1.7)	43.3(2.4)	42.6(3.5)	36.8(2.7)	36.0(9.5)	23.0(3.5)	34.0(6.4)

자료 : 통계청('10.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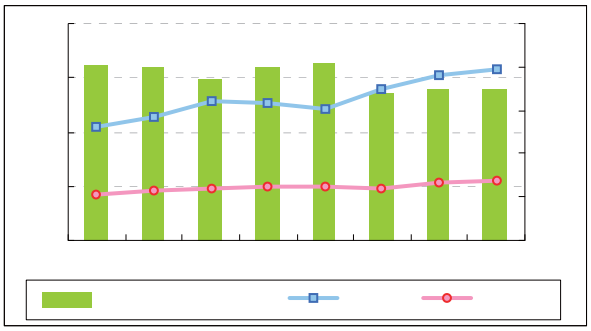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수준의 차이가 클 경우 기업은 고용부담이 작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는 고용불안 및 저소득층 증가로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저해하고, 교육·훈련 기회 감소로 인적자본 축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을 조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유도할 경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제 완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유인을 축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여건 및 사회안전망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68)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이나, 성별·연령·학력 등 개인특성 및 사업체 특성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정규직의 80.7~85.8%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비정규직 문제 종합연구, KDI, '09.12월)

기업·산업간 이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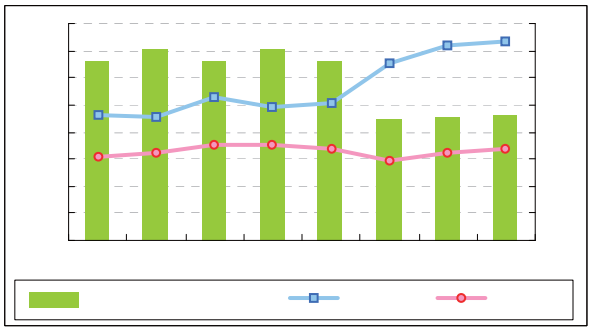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기업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생산성 증가가 부진하다. 2009년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5% 수준, 내수기업의 생산성은 수출기업의 4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Ⅳ-23>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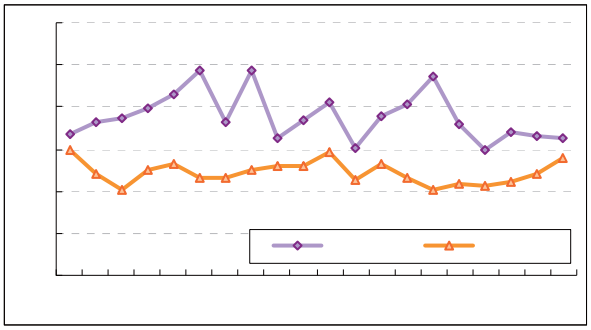
<그림 Ⅳ-24> 수출기업-내수기업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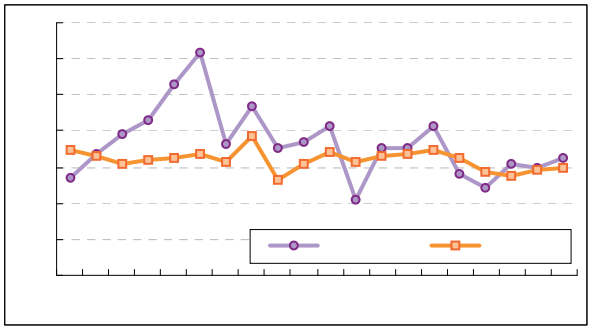
이러한 생산성 차이는 기업성과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출기업도 대부분의 기간중 내수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과 격차는 인적자원 투자 및 R&D 투자 격차로 연결되고 다시 생산성 격차, 성과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Ⅳ-25> 대기업-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그림 Ⅳ-26> 수출기업-내수기업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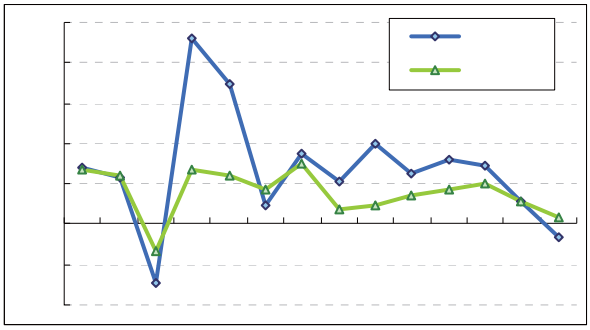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은 그동안 수출 호조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다. 제조업 생산성은 꾸준히 향상된 반면, 서비스업 생산성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생산성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큰 수준이다.

<그림 Ⅳ-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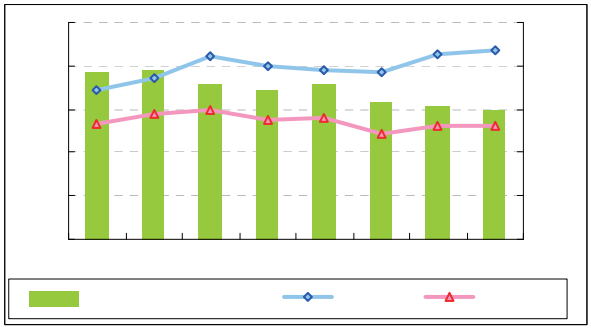
제조업-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Ⅳ-28>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Ⅳ-5> 제조업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00~'07년 평균, 제조업=100)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54.7	83.6	85.9	76.0	81.9	86.8	89.4	64.3	127.6	74.8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기업·산업간 격차의 원인은 크게 경제환경의 변화, 구조적 요인, 관행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와 중국 경제의 부상, IT기술 발전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의 산업구조가 국제적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업이 크게 성장한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시장 확대가 미진하여 성장이 지체되었다. 둘째로 부품·소재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기초소재 및 조립가공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라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감소('00년 : 0.633 → '08년 : 0.533)하여 수출기업의 호조가 내수기업의 성과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관행도 성과격차를 확대시킨 요인이다. 독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납품단가 등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거래의 불공정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등 기업·산업간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이 중요하다. 중소기업·내수산업·서비스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완화 등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정책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의 인식 변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Ⅳ-4)

참고 Ⅳ >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우리 경제는 성장과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높은 대외의존도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크므로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수요가 안정적이며 재고를 유지하고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수지의 만성적 적자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의 대외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 우리 경제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산업의 대외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나 운수·금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생산성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비중이 높고 보건의료·금융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낮음에 따라 생산성이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고 제조업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과도한 진입규제와 낮은 대외개방으로 경쟁유인이 부족하고 대형화·산업화 및 선진기법 도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서비스산업 성장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R&D 투자 부진도 혁신여건 조성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국제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OECD
GDP비중('07년)	59.7	76.9	70.1	76.1	77.4	68.9	68.8
고용비중('09년)	68.5	80.9	69.9	78.2	73.8*	69.6	67.1

* '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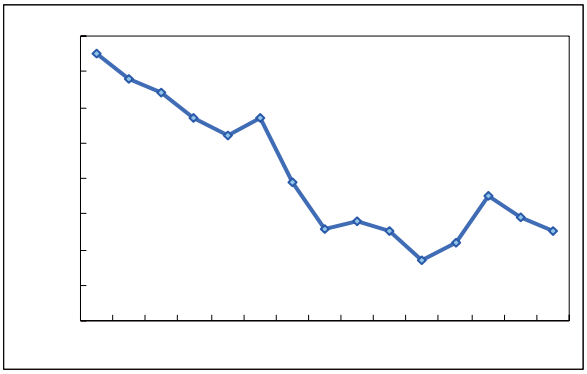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세제·재정지원을 시정함으로써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R&D 투자유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의료·교육·관광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당경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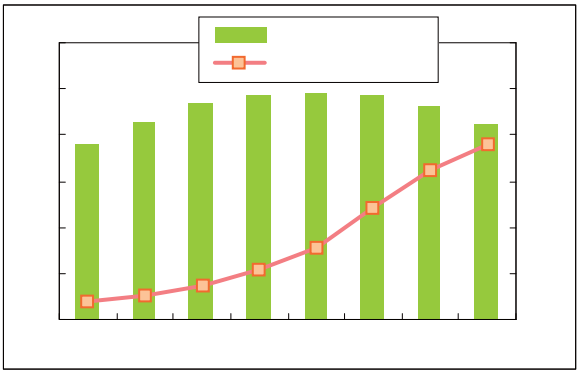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현재 1.15명에 머물러 있다.[69] 2008년 OECD 평균수준인 1.71명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234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Ⅳ-29>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 Ⅳ-30> 총인구 및 65세이상 인구비중



자료 : 통계청

총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도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크게 높아져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이며, 노년부양비도 2030년에 선진국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선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게 될 전망이다.[70][71]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지출 증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와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및 노후소득 기반 강화, 공적연금 재정안정 등 고령화 대비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주택 등의 수요변화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69)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설명되며,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출산가능한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의 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70) 노년부양비 :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71)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9년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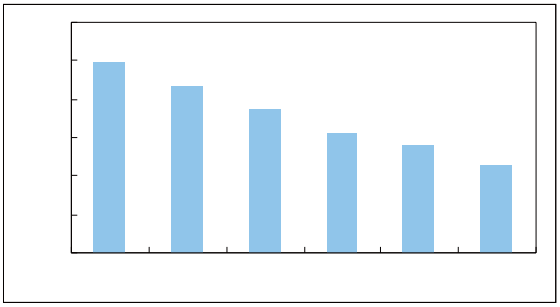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년)」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11~'15년) 수립을 추진 중이다. 금번 계획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육아와 관련된 직접적 비용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기회비용을 함께 줄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직장여성의 출산 후 복귀와 육아가 용이하도록 출산·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직장 등의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경제·사회적 제도와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제도 확충을 통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및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교통환경 등을 고령자 편의를 감안하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지출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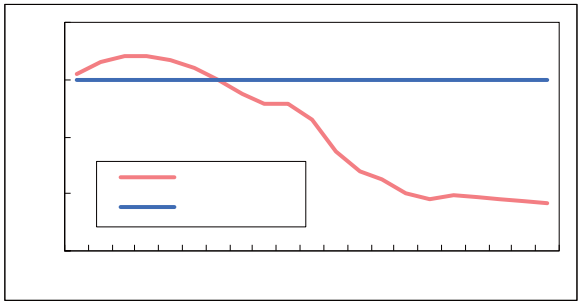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는 교육, 주택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수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구조의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급불균형 및 구조조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우선,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학령인구(6~21세)는 2010년 990만명에서 2050년에는 46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학교내 유휴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는 대학교 신입생 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여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 계획을 재조정하고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Ⅳ-31> 학령인구 전망



자료 : 통계청

<그림 Ⅳ-32> 고교졸업자수 및 대입정원



자료 : 통계청

주택시장에서는 주된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1년부터 감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 및 가격의 조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전반적인 주택수요는 둔화될 수 있으나, 소규모가구 및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및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부동산가격 급등락을 통해 가계·기업·금융부문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 조절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Ⅳ-6> 35~54세 인구,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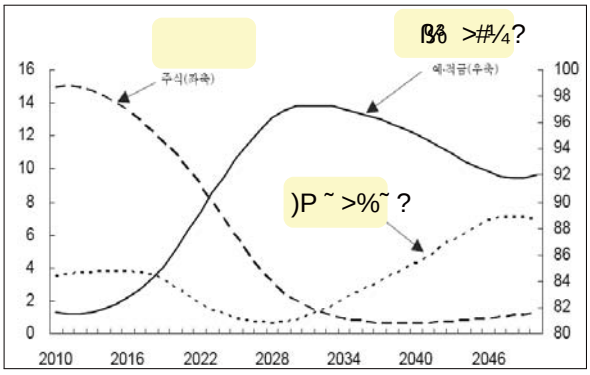
	2010년	2020년	2030년	증감율
35~54세 인구 (만명)	1,655	1,573	1,370	-17.2%
총 가구수 (만개)	1,715	1,901	1,987	15.9%
청년 가구수(20~39세)	461	384	330	-28.4%
노인 가구수(65세이상)	298	423	641	115.1%
평균 가구원수 (명)	2.73	2.48	2.35	-13.9%

G G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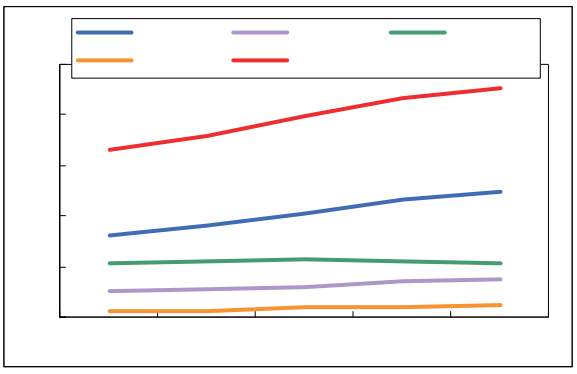
금융시장에서는 위험기피 성향이 높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저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대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장기금융상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장기국채 등 장기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발달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Ⅳ-33> 2010~50년 자산별 비중 변화



자료 : 한국은행('07.7월)

<그림 Ⅳ-34> 개인연금 적립금 연도별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가능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이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의 인종별·세대별·성별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므로 차별적인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8 1 # î<,"~< +þ # < {

\ „±j- „A `í u> iü t pÑYíp‘ Yý{,

w-[Yt ^‰„A`• sá€ù ` Yíi1 ` „:p bÞuE u}sÝu™ƒagi si\ ƒEZÍ uuu)h] uafI ueƒa uegE`• i) kmv^ s½^õw- tñ\ wµj¾wŠYíei`• uñ w-[Yuî a±uñZév s½ w®ha ƒEZÍ uu`Ñ o%Z± Yî[Zu- \ „±j-„A i%v s½ ZâaÆu)fI `íu>ƒEsÙsi ƒI`Ñ`• a]`• uepÊu1 Z uaƒEZÍ uuu)^… [Yz¡uîue z2uqkq`ás½ uus¡o `• s1w® ƒVuEs½ uagaw-h¨ƒEZÍ uu`Ñ _1 tÁs½ Z {Ib v z 6 / \ „±j-„Aƒþsj `æn™[Z { „y * 1 $ $½o `• o w±[ZZé Z a±[ZYñuE uaZ™u)fI _1 ua„± [ZYíj± t pÑYíp‘ Yý{,h–,Igi o v ƒE`•a] pÑ• ƒEsí`Ñ uas½ c ei _1 tÁ ság™`• v z { „ys½o `• Z a±[Zs½ `íƒI t pÑYíp‘ Yý{,uEi! kmZésÙkm iü [Zv \ „±j-„A`íu> \ [õ kq`á i%v bÞs½ `íƒa [ZYíYñs½ aAtž |Esáƒl _iu®ua sõn®b `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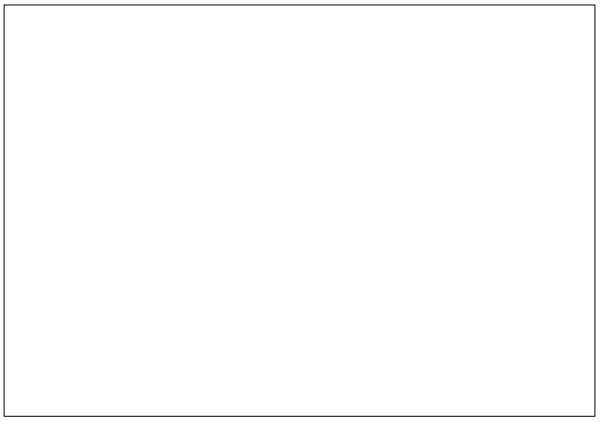
[åg© Ü

w-[Y •¶[Ít a± j-„A

vy{, _ _1 `íl1 t a±j-„A
t•{, {•v b pÑv w-[Y•¶[Í\ t •
u}f¹ * 1 $ $ jáZÍo

[åg© Ü

uñ o%Z± \ n®uaj- j nÊ{•ua _



`Õtñ s¢`ÙeÙ _1 kuj-\ ví Za
j nÊZap t- ƒ)ƒasNu- •¶[Í|E
u}f¹ . V O J D I 3 F V

vþ„±u’`í„ v v]s² vþpÙuE Zªv o u’s½ c ei t•g™^…eiuE t pÑYíp‘ j {‰e¶u-
_ _1 vþ j Yí\9ua wŠYí ó j g¹ $ 0 •‘ ƒEsí`Ñ ua`• 0 & $ %
[ZYí vþ Yíu’ lMg e wŠYí o zapÑYíp‘] j {‰e¶a± 0 & $ %uñz¡ j {‰e¶uE
fI 0 & $ %[ZYí vþ tñ p víua`Ñ uas½ c ei t•g™^…eis½ `íƒI [Zv n™„yuE t pÑYíp‘ Yý{, sBf ua _•s1w-ZÍ uuu)h] \ „±j-„Aƒþn® Z•Zés½ c ei _1 ua„± [Yozuîue Yý{,uEi!gi km`áƒM Yí`’o a± v \ b `Ñ

---

o w±[Z iå[Z sî[Z aagµ~Y zõs5 Z h•bÍ „yt½[Zua _1\9w- o%Z±t pÑYíp‘ j {‰u1 _1 `íl1 fI Yý{,ƒEZÍ _1\9w-uE Yî [ZYíj±fI t pÑYíp‘ j {‰ n®ƒIu1 w-v
Z a±[Z vþ[Z uea± kùeiwµ ^•s1Zâ zõs5 o w±[Zu- _1\9w- t pÑYíp‘ j {‰u1 _1 `íl1 uan® Yý{, Z a±[Zu- u}j uîue Yý{, uEi!j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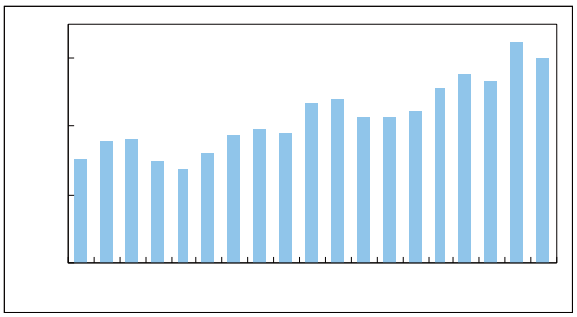
녹색성장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의 급속한 수요증가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원고갈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에너지와 관련한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통해 녹색경제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국가에 대해 관세·비관세 조치를 부과하려는 녹색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EU는 2010년 7월부터 에너지 저효율 가전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한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요건 미달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주요 수입품에 대해 탄소이력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도 2020년부터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74] 환경관련 무역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녹색기술 개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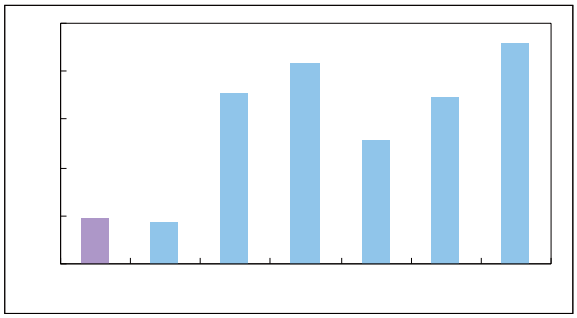
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년부터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는 등 정책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각종 산업정책과 규제제도, 재정·세제·금융지원 등 경제제도와 정책운용 전반으로 친환경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고, 녹색 R&D 지원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금융·조세제도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림 Ⅳ-40> 에너지수입/총수입액 추이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그림 Ⅳ-41> 에너지 자립도 비교



자료 : IEA

74) 탄소이력제도란 제품의 원료확보·생산·유통·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반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가능성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환경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1912~2008년) 우리나라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이 1.7℃상승하였고, 해수면 온도도 지난 41년간(1968~2008년) 평균 1.31℃상승하였다. 강수량도 지난 100년간 19% 증가하였는데, 특히 하루 80㎜ 이상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1970년대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Ⅳ-7> 한반도와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구분	과거 100년간	2000년대 대비			자료
		2020년대	2050년대	2100년대	
한반도	1.7℃ (1912~2008)	1℃ (2006~2035)	2℃ (2036~2065)	4℃ (2071~2100)	기상청
전지구	0.7℃ 1906~2005)	0.7℃ (2011~2030)	1.8℃ (2046~2065)	2.7℃ (2080~2099)	IPCC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생태 및 자연환경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다랑어, 가오리, 상어 등 아열대성 어종이 출현하고 명태 등 한류성 어류는 감소하고 있다. 열대성 질병인 말라리아 환자가 1994년 5명에서 2007년에는 2,227명으로 급증하였고,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매 10년 단위로 3.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IPCC)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구적 노력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향후 수십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반도의 경우 경기도 일부와 남부지역이 난대기후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온대과수(배, 포도)와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각각 34%와 7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 관련 자연재해도 지금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그림 Ⅳ-42> 기온상승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기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건강·재난·물관리·농업·산림·수산 등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가의 아열대 작물 재배 등 새로운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변화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가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와 별도로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백두산 지역에서 지진 발생횟수와 규모가 증가하는 등 화산분화의 전조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지진국 지질연구소가 2014~2015년경 백두산 화산활동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백두산이 분화할 경우 마그마 분출에 따라 주변의 식생이 파괴되고 천지호에서 쓰나미가 발생하여 주변에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분출된 화산재는 편서풍과 제트기류를 타고 북한,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북해도 방향으로 이동하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화산재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앞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Ⅳ-5)

참고 Ⅳ >

백두산 분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백두산 분화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산재에 의한 항공운항 중단 등 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화산재는 일반적으로 편서풍 및 제트기류를 타고 북한 함경북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홋카이도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화산재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화산재가 유럽 항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북미 항로의 경우 태평양 항로 등 대체항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절기에 분화할 경우에는 북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화산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항공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75] 항공기 운항이 10일간 중단될 경우 수출은 약 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산재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여행 등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백두산 분화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화산재가 기류를 타고 확산됨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반사하여 아시아 지역에 이상 저온현상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 저하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75)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시 항공기 운항 차질에 다른 항공업계의 손실은 하루 약 2억 달러로 추산되었다.(국제항공운송협회)

Ⅴ 향후 정책대응

1. 단기대응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국제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등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에 후행하는 고용이 민간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과 국제곡물 가격 불안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물가압력과 해외자본 유출입의 높은 변동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시정책기조

거시정책은 경제의 성장세가 물가안정 기반 하에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감경기의 개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가압력에 대응하고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정책여력을 확보할 필요성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시정책의 정상화는 경기회복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제체질 강화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우리경제의 취약성들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므로, 유사시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여건이 좋을 때 경제체질을 미리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부문의 경우에도 위기대응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한계기업이 노출되면서 구조조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채권단 주도 하의 상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가계·기업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정부도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감안하여 금융건전성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대외부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던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경제회복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가계의 소득을 늘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자생력 확보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복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을 통해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등 기존 서민정책이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보완을 지속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구조적 대응과제

구조개혁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비하고 경제구조 성숙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발전 여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조개혁이 지연되어 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과의 정책적 차별요인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선진화는 고용창출의 돌파구일 뿐만 아니라 내수확대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어 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인력양성 체계의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한편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용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과보호 장치들을 완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혁과 함께 구조조정에 따르는 부담이 경감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에너지 고갈과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라는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의 비전이 조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R&D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재정·세제·금융 등 산업지원 제도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분업체계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의 FTA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사회통합 강화

선진국의 문턱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신뢰와 협력은 기회균등의 기반 위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규칙이 적용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교육, 사업기회,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법의 적용 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자 등 일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관행과 제도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성실한 경쟁탈락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패자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되, 수급자들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자활유인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성과의 공정한 배분과 함께 사회통합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건전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일상생활에서부터 기초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의 이익과 타인을 배려하는 관행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법적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나눔과 자원봉사·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 및 갈등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정책을 수요자와 현장의 관점에서 수립·집행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치구조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 위험요인 대비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거시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 남북관계 등 특수사정도 있으므로 면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공기업 부채가 중앙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출산을 촉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노인급증·주택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교육·의료·주택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관계 변화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통일재원 논의 등 사전 준비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증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